



인권교육사랑방

110-522 서울시 중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하루소식

합본 12호

1999년
1월 ~ 6월

R1.1.12



인권교육사랑방

R1.1.12

인권하루소식

합본 12호
(1999년 1월 ~ 6월)

인권하루소식

참고 문헌

#제거하지 아시오

 인권교육사랑방

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99년 1월

(제1281호 - 제1300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1월 5일(화)

제 128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99년을 맞이한 우리 앞엔 여전히 많은 인권과제들이 놓여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권과제 가운데 주요 내용들을 짚어봤다(편집자주).

1.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외에 널리 약속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가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을 공포할 예정이었으나, 당정 간의 이견 때문에 해를 넘기고 말았다.

인권위 설치에 있어 관건은 인권위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를 고집하고 있고, 여기에 자민련도 동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인권위 설치 문제는 결국 김대중 정부가 인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나, 아니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2. 사상탄압법 폐지

"국보법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들어 국보법 구속자는 3백명 이상 양산되었고, 대학강사가 국보법 전력을 이유로 강단에서 쫓겨나는 등 국보법에 근거한 사상탄압과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올 한해 민간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캠페인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또 최근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적용과 관련해 "유엔 인권규약 위반이며,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보안법

의 대체입법을 거론하고 있는데, 자칫 대체입법이 사상탄압법의 또 다른 변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따라 대체입법에 대한 민간진영의 대응도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더불어 사상전향 여부를 잣대로 국보법 전력자에 대한 감시통제를 합법화하고 있는 보안관찰법 역시 서둘러 폐지되어야 할 법률이다.

3. 양심수를 가족 품으로

"이제나저제나." 양심수·정치수배자의 가족들은 한결같은 마음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모두 석방되리라 믿었던 양심수가 아직도 3백명 이상 남아 있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정치수배중인 한총련 관련자 65명은 이 거리 저 거리를 전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벌써 다섯달째 조계사에서 험겨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양심수 석방과 수배해제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준법서약제는 사상전향제도의 변종일 뿐이며, 따라서 준법서약은 양심수·수배자 문제 해결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활기를 띠는 듯하던 민주화유공자보상 문제도 법 제정 단계에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인혁당

사건, 제주 4·3 사건 등의 진상규명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4. 감옥을 바꾸자

지난해 인권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감옥의 인권은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겨울철에 동상에 걸린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도서열독권이냐 집필권, 청원권 등 재소자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교정행정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국제인권기준과는 사뭇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여건상 가시적인 처우개선은 더디더라도, 재소자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걸맞게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 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무작위 불심검문 폐지

시민들의 '작은 권리'가 현저히 짓밟히는 현장. 바로 경찰의 불심검문 현장이다.

지난해엔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소송이 잇따랐고, 법원으로부터 국가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은 전혀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작위 불심검문과 함께 경찰의 총기 남용 관행도 올해엔 사라져야 할 모습이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98년 국정감사 자료집 판매

좀 늦긴 했지만 훨씬 더 풍부하고 깔끔하게 엮었습니다.

50년만의 정경교체로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상황에서 이루어진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료들을 요구했고 새정부는 어떤 자료를 내놓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문의: 엄주현)

◆ 교육위원회 (총 131 쪽) /외무통상위원회 (총 189 쪽) /환경노동위원회 (총 2351 쪽) /법제사법위원회 (총 798 쪽) /보건복지위원회 (총 656 쪽) /과학기술위원회 (총 250 쪽) /행정자치위원회 (총 537 쪽)

◆ 자료/징계 받은 경찰관 관련 자료/국가보안법 사법 관련 자료 인체

연초부터 '한총련' 탄압 박차 고려대 신입 총학생회장단 구속

새해 첫날부터 공안당국은 한총련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지난 1월 1일 오후 2시 경 고려대 신입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5명이 6·7기 한총련 관련 혐의로 서울경찰청 보안과에 의해 연행됐다.

이강현 고려대 신입 총학생회장은 이적표현물 소지·이적단체 예비 구성음모 혐의로, 송범근(신입 부총학생회장) 박정호(97년 자연대 학생회장), 류순 씨는 6기 한총련 대의원 불탈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서울 중앙동 대공본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과 같이 연행됐던 고재규(대학원) 씨는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의 물증으로 제시된 한민전 녹취록에 대해 학생들은 "연행된 학생들이 그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감압수사를 통해 이 씨가 갖고 있었던 것처럼 물고 갔다"고 주장했다. 또 "단지 이 씨가 7기 한총련 의장 출마 계획을 밝혔다는 점을 들어 이적단체 예비 구성음모 혐의를 적용한 것은 지나친 처사이며, 이는 7기 한총련 구성 시도 자체를 봉쇄하려는 공안당국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은 학생회 선거 때 7기 한총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후보들은 모두 검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곧이어 고려대 서창캠퍼스 98년 여학생회장, 한양대 신입 총학생회장, 충남대 사회대·경상대 학생회장, 동의대 총학생회 사무국장, 상경대 학생회장 등이 6기 한총련 불탈퇴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다.

김창현 구청장 징역 8년 구형

지난 12월 29일,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9명에 대한 구형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지난 28일 공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등을 적용해, 임동식·정대연 씨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또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은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나머지 6명은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28일 열린 공판에서 '수괴'로 지목된 박경순 씨는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본지 12월 29일자 참조>

.....주요 공판 안내

- ▶ 1월 7일 (목)
 - 오진석 외 8(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형사합의5부, 신전
- ▶ 1월 8일 (금)
 - 노재중(형법·폭행·협박 등, 양지마을) 오후 3시, 대전지법 231호, 속행

주간/인/권/호/름

(98년 12월 21일부터 99년 1월 3일까지)

◆ 12월 21일 (월)
프랑스 실업자들, 파리를 비롯한 60개 도시에서 실업수당 인상과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요구하며 시위 벌여/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7개 사회단체, 전북지방경찰청에 최근 폭로된 경찰의 주요인물 존안카드 작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12월 22일 (화)
대구지검, 몸이 아픈 동료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혐의로 '왕따몰이' 고교생 6명을 불구속 입건/보안관찰대상자 정민주 씨, 출소신고 불이행 이유로 긴급체포/부산동의대생 3명, '한총련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 12월 23일 (수)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7조 적용사건과 관련, "유엔인권규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11월중 실업률 4개월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조선대 사회교육원 감사 이윤정 씨, '국가보안법 위반' 전려 때문에 학교측으로부터 해고통보 받아

◆ 12월 24일 (목)
사회진보연대 등 8개 사회단체,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표명을 규탄하는 집회 열어

◆ 12월 25일 (금)
헌법재판소,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한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7조에 대해 위헌결정

◆ 12월 27일 (일)
민주노총 소속 19개 공기업 노동조합,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졸속적 민영화와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공기업 노동조합 결의대회' 열어

◆ 12월 28일 (월)
국회보건복지위, 생활보호대상자를 모든 연령대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통과시켜

◆ 12월 30일 (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대 그룹의 시장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교육부, 최근 안기부 등 공안당국의 요구에 따라 각 대학 시간강사 채용 때 채용대상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사실 밝혀져/서울고법 특별10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98 실업자대행진'을 불하한 서울 중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명령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교통지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타이 정부, 지난 52년에 도입한 반공산주의법들을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

◆ 1월 3일 (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80년 강제해직된 서동구씨 등 해직 언론인 27명이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12·12, 5·18 사건 수사기록 등사발허 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해당기록을 직접 열람 심사하기로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1월 6일(수)
제 128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②

1. '일할 권리'의 보장

공식적인 실업자 2백만 시대. 많은 연구기관들이 예상한 99년 실업자 수치는 서민들의 얼굴에 다시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98년 10월말 당시 정부 추산 전국의 실업자 수가 1백53만6천여 명인데 비해 훨씬 늘어난 숫자다.

일부 상위계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노동'은 유일한 생존수단이므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곧 생존의 끄트머리에 서게 됨을 의미한다. 대량실업사태와 더불어 결식아동의 숫자, 이혼율, 자살율, 생계형 범죄들이 지난해 하나같이 급증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하다. 재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른바 '구조조정'을 통해 대량 실업을 양산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실업의 부정적 결과만을 줄이는데 급급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에 걸었던 기대가 무너지면서, "그냥 당할 수만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올해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대안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현실화시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인권과제로 떠오른다. 더불어,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취약집단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확충 또한 시급한 과제다. 사회보장 재원의 마련을 위해서는 누진세율의 확대적용이라든지 재벌과 비리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축재 재산 환수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2. 호주제도 폐지

"매년 3만명 이상의 여아가 성감병에 의해 낙태되고 있고, 현 추세라면 21세기엔 남성 인구의 1/4이 결혼상대를 찾기 어려운 성비불균형 사태를 맞게 된다."

"그 씨는 똑똑한 두 딸을 두고 있었는데 늦바람이 들어 아들을 얻었다. 그 씨가 사망한 후 본처에게서 낳은 두 딸 대신 팻덩이 아들이 호주를 승계했다.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내와 딸들이 겪어야 했던 상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과 남계혈통주의에서 초래되는 비극이다. 그리고 이를 법과 제도로 옹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주제도다.

지난 89년 법률 개정 이후의 현 호주제는 상당부분 남녀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호주제도 자체와 호주승계 순위가 그대로 남겨짐으로써 남녀차별적 사고는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현행 호주제 아래서 호주승계 순위는 아들, 손자, 딸, 아내의 순서다. 결혼한 여성의 지위가 점차 태어날 손자보다도 못한 것이다. 또한 부가입적(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 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여성은 결혼 또는 이혼에 따라 입적과 제적을 반복해야 하며, 자녀를 키우더라도 동거인 관계일 뿐, 자신의 호적으로 입적시킬 수 없다. 호주제도 아래서 여성은 여전히 '이등인간'이며,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남녀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앞에서 호주제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걸림돌이다.

3. 장애인율 사회 속으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일할 권리'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로서 계속 제기될 것이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일할 권리는 생존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일'은 가정 또는 사회복지 시설로 숨거나 격리되어 온 장애인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사회와 통합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직업재활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이 일반 기업체에 고용되지 못할 경우 △특정업체(매표원, 전화안내원 등)에 지정고용하거나 △자영업(매점, 자판기 등)을 배려하도록 하고, 이 또한 어려운 경우, 장애인 전문 보호작업장을 운영해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직업재활법은 노동부 쪽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별법 제정 날새고 있다"

유가협 농성 63일째

지난해 11월 4일 시작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유가족들의 국회 앞 농성이 6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우리엔 이제 여생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올해엔 민주화 운동 유공자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법사위 소위 심사 결과, 다시 국회 정무위로 이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하루소식> 98년 12월분 총목차(1261-1280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261	12/1	1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입장 요지부동/오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법무부 -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 안 버려
		2	세계인권선언 50돌 기념 - 영화제·심포지엄·음악회 등 행사다채/주간인권호름 (11월 23일 ~ 11월 29일)
1262	12/2	1	국회앞에서 국보법 장례식 - 35개 국제인권단체 연대성명 보내/국보법 전리, 명예회복 제외 - 국민회의, 특별법 초안공개
		2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㉔ 제 12·13조 -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내가 본 인권선언> 김삼석 (보안관찰처분자) -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1263	12/3	1	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연행 - 서울경찰청, 마구잡이 압수수색/국보법 철폐 500인 선언 - 부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IMF 1년, 돌아본 우리모습
		2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㉕ 제 14·15조 - "난민에게 피난처를!"
1264	12/4	1	공안당국 발길 바빠졌다 -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 9명 연행/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민변, 긴급감청제 폐지 요구 - 통신보호법 개정 의견 제출
		2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㉖ 제 16·17조 - "평등한 결혼의 권리·재산권"/<내가 본 인권선언> 김중서 (배재대 교수) -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1265	12/5	1	'악물주사 쇼크사' 의혹 -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파문/인권위 독립성' 거듭 강조 - 엠네스티, 법무부 수정안 비판/국보법 영장 또 기각 - 인천연합 김국대 씨 석방
		2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㉗ 제 18·19조 -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내가 본 인권선언> 김영식 (통신연대 사이버 권리팀) - 뉴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1266	12/8	1	인권법 상징 초읽기 - '인권위 독립성' 여부, 대통령 결단 내릴듯/재소자 사망 의혹규명' - 전주교도소에 공개질의/교도소·농성단 단식 잇따라 -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요구
		2	인권영화제 성황리 개막 - <절레전투> 등 만원사래, 10일 폐막식/주간인권호름 (11월 30일~12월 6일)
		3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㉘ 제 20·21조 -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1267	12/9	1	인권위 올바로 만들어라 - 사회원로 12명, 대통령 앞 건의문 발표/박상천 장관 용퇴하라 - 국민승리21, 여의도에서 규탄집회/여야 의원 "인권위 독립기구로" - 자민련 의원은 법무부 지지/세계인권선언'과의 만남 -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토론회
		2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㉙ 제 22조 -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1268	12/10	1	군사독재의 망령 아직까지 - 20년 고문후유증 앓다 투신자살/민청노회 회원들 장시간 수사에 고통호소 - 풀려난 회원들도 재연행 수사당해/인권법 제이의견 수렴 - 인권법 발표 미뤄질 듯
		2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㉚ 인권보장의 주춧돌(장호순 순천향대 교수)/인권영화제 또 '사전심의' 시비/인권영화제 지역 상영일자
		3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㉛ 세계인권선언 반세기(이석대 변호사)
1269	12/11	1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샬터에서 내뿜리는 영세민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나?" - 대학교수, 불법검문 곤욕
		2	단식하던 양심수 실신 - 의정부 교도소/병역면제자 죄인취급 - 합동수사본부 방생조사까지/이주노동자 비준 촉구 - 외국인 노동자 캠페인 벌여/준법서약 위헌이다" - 8·15출소자 25명 헌법소원 /'인권의 날' 요구 봇물 - 민주노총 등 각계성명
		3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㉜ 제 23·24조 -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내가 본 인권선언> 박성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인권하루소식> 98년 12월분 총목차(1261-1280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270	12/12	1	20대 청년 가혹수사 의혹 - '조직폭력배'혐의...본인은 부인/전국 동시다발 민주대회 - 정리해고 중단 등 5대 요구 제시/동티모르 인권상황 악화 - 재판없는 처형·실종 잇따라
		2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㉝ 제 25조 - 인간답게 살 권리!/<내가 본 인권선언, 김중렬 (환경운동연합) - 생명이 갖는 권리
1271	12/15	1	비장애 어린이 농아원 수용 - 에바다, 보조금 수령·가족 인도 요청 거부/국민 건강도 '시장경제' 논리에? -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
		2	양심수 단식농성 정리 - 옥중 단식 불상사도 따라/민주대회, 또 경찰폭력 물의 - 시위참가자 부상·연행 잇따라/주간인권호름 (12월 7일~12월 13일)
1272	12/16	1	'민간사찰 부활' 강력 비난 - 공안책임자 처벌·사찰카드 폐기 여론/전교조 단식 돌입 - 교사 8만 여명 서명 동참/중증장애인의 삶 외면하지 말라" -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 촉구
		2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㉞ 제 26조 - 교육, 인간다운 삶의 기초!
		3	<성명서> 청년진보당 -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성명서> 참여연대 - 국민의 정부의 국민사찰
1273	12/17	1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인권의 사각지대' 베일을 벗긴다 - 건국 이래 최대 '감옥실태조사'공개/사이버권리 백서 발간
		2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㉟ 제 27조 - 문화·과학, 함께 즐겨요!/<내가 본 인권선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3	군 관련 의문사 사건 일지 - 유기협죽 진상규명 대상자 명단/경찰·안기부·기업 관련 의문사
1274	12/18	1	법원, 보안관찰 취소 판결 - 사노맹 관련 출소자...올들어 두 번째/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반인권적 이라크 공습 중단하라' - 국내 민간단체 비난 성명
		2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㊱ 제 28·29·30조 -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1275	12/19	1	금속연맹, 국민회의 농성돌입 - '빅딜, 제벌엔 특혜·노동자엔 고통'/인간복제 규제 촉구 - 환경·사회·종교단체 시위/금요시위 2백회 맞아 - SOFA 등 여전히 현안으로
1276	12/22	1	한국각급 인권실태 공개 -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반국가 혐의 철회' 촉구 - 28, 9일 영남위사건 결심
		2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주간인권호름 (12월 14일~12월 20일)
		3	<인권시평> 여기는 전투지대, 평화의 교실을 꿈꾸며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1277	12/23	1	노사정합의 기반이었다 - 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국보법 또 보란 듯이 - 동의대 생 7조 위반 혐의 구속 발표
		2	조선일보 장애인 비하 - 장애인단체, 공식사과 촉구/'법외대응 극약화' 우려 - 정부, 미약사범 사형적용 방침/실업자동맹 준비위 결성 - 99년 상반기, 정식조직 출범/98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 <평화와 인권>선정
1278	12/24	1	'국보법 전리' 강단서 쫓겨나 - 교육부 등, 일선 대학에 압력/투명하면 한총련 연행사태 잇따라
		2	보안관찰대상자 계속된 수난 - 출소신고 불이행 이유, 체포 후 석방/민주노총 20개 산별연맹 위원장, 국회앞서 무기한 단식/법협, 97년 인권보고서 발간/열사려 판매/<만화사랑방> DJ와 양심수
1279	12/25	1	"아빠를 선물로 보내주세요", 양심수 자녀들의 성탄절 소원/검찰 '북연계' 어지주장 - 민에청 첫 공판/'공습지지는 학살 방조', 이라크 공습 규탄대회/'노사정위 미련없다' - 24일 국회앞, 캐롤 대신 투쟁가
		2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 "국제규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1280	12/29	1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노사정합의 이행' 촉구, 여의도 범국민대회
		2-4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5	만화로 되돌아본 98년 한국의 인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1월 7일(목)

제 128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국회 529호실 사건'을 통해 현 정권 들어 처음으로 '안기부 사찰'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여야가 이번 사건을 각각 '국기문란' 또는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재야와 시민사회계에서는 "안기부의 정치사찰을 중단시키고 안기부 개혁을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또 이 사건을 단지 '국기문란 행위'로 묻고 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전북 평화와인권연대는 "정보기관의 사찰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찰 중단을 약속하고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연철 변호사는 "3권분립 원칙에 입각한 의회의 독립성, 자주성 원칙에서 볼 때 국회 내에 안기부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정치사찰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한나라당도 종전에 자신들이 해온 행태에 비춰볼 때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하지만, 정략적 이용 여부를 떠나 이번 기회를 안기부의 정치사찰 관행을 뿌리 뽑고 안기부 활동의 기준을 설정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529호 사건을 안기부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은 잇따르고 있다. 김두수 국민승리21 부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안기부법을 개정해 안기부의 수사권을 없애고, 국내정치 사찰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 위

원장)도 "안기부의 정보수집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2면으로 이어짐

경찰, 사찰카드 공개 거부

"비밀 보관 자료" 핑계

경찰이 각계 주요인사와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작성한 '사찰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의 사찰 행위가 언론을 통해 폭로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개 사회단체는 △단체 및 단체 구성원에 대한 자료 △인

물존안자료 △기타 동향과약을 위해 작성된 자료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최근 "청구된 자료들은 경찰청에서 비밀로 보관하는 자료"라며 공개거부를 결정한 통지서를 보냈다.

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사회단체들 역시 전북도경에 사찰자료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마찬가지로 공개불가 통보를 받았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측은 "처음에는 사찰카드를 만든 일도 없다고 발뺌하더니, 이제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형태 변호사도 "경찰이 일반적인 동향을 사찰하는 것은 정보수집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사찰카드에 기록된 단체나 개인의 행동이 무슨 국가기밀이 될 수 있느냐"며 경찰청의 정보공개 거부를 비난했다. 5개 단체들은 경찰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다음주 중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노숙자대책 여전히 주먹구구

'자유의 집' 9백명 몰려...서울시는 수용 급급

자정 가까운 시간, 서울역광장에 노숙자들에게 '자유의 집'에 갈 것을 권유하는 구청직원과 경찰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자유의 집'은 음주가 허용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많은 여느 수용시설들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자유의 집' 또한 시의 졸속행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1월 4일부터 대대적으로 시작된 노숙자 단속 이후 '자유의 집'에는 9백여명의 노숙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당초 예상의 두 배를 웃도는 숫자였다. 서울역 주변의 쪽방과 만화방에서 기거하던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었다. 따라서 17명의 실무자로는 9백여명을 감당하기가 벅찬데다, 생필품 지급마저 늦어져 일부 노숙자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다고 '자유의 집' 한 관계자는 말한다. 자활을 돕는다든지, 알콜중독자들에게 대한 치료 프로그램의 시행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의 김영술 실장은 "시설과 실무자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의 반응은 느긋하기만 하다. 서울시 사회과 백무경 노숙자대책팀장은 "원래부터 8백여명 정도를 예상하고 준비했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실무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노숙자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원봉사자들이 생길 거라고 백 팀장은 낙관했다.

이같은 시각 차는 일단 이번 겨울만 넘기고 보자는 서울시의 근시안적 태도로부터 비롯된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경우, 노숙자들 중 동사자가 발생할 때 빗발칠 비난을 면하기 위해 우선 수용시설에 넣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한다.

김영술 실장은 "올해도 노숙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차분히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노숙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자활과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 노숙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1면에서 <안기부 사찰>

안기부 개혁문제와 관련, 지난 97년 2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움에서는 안기부의 집중된 권한을 대폭 분산시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과)는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의 분리 △국내외 국외 정보수집권의 분리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정보수집권 및 수사권의 검찰 이관 △안기부 직원의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에 관한 수사의 검찰 이관 등을 제안했다.

한편, '안기부 사찰'의 쟁점화가 자칫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으며, 더불어 '529호' 사건을 이유로 재벌구조조정이나 실업자문제 등과 같은 민생현안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참여연대는 6일 여야 3당 총재에게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정치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급한 민생현안의 처리나 경제청문회 등 산적한 국가개혁과제의 해결을 지연시키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98년 국정감사 자료집 판매합니다.

좀 늦긴 했지만 훨씬 더 풍부하고 깔끔하게 엮었습니다.

50년만의 정경교체로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상황에서 이루어진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료들을 요구했고 새정부에 어떤 자료를 내놓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문의: 임주현 741-5363)

■ 교육위원회(총 131쪽) : 농어촌 학교 통·폐합 등 교육시설 통·폐합 관련 자료/교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례 등 교육자 비위 관련 자료/하내 분규, 재단 비리 등 하원 관련 자료 등.

■ 외무통상위원회(총 189쪽) : 북한에 피랍되어 있는 인원 등 북한 관련 자료/교도소에 수감중인 외국인 등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자료/사할린 교포, 해외입양아 현황 등 재외동포 관련 자료/주한미군 관련 자료/기후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 등 기후·환경 관련 자료/군위안부 관련 자료

■ 환경노동위원회(총 2351쪽) : 산재율 등 산업재해 관련 자료/정리해고, 노동조합원 구속·수배 등 노동쟁의 관련 자료/실업대책, 노숙자, 근로자파견제 등 실업·고용 관련 자료/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관련 자료

■ 법제사법위원회(총 798쪽) : 검찰 등 국가공무원의 가혹행위 및 비위 관련 자료/구속·체포영장 관련 자료/미군범죄 등 외국인 범죄에 관한 자료/청소년 범죄 및 하원폭력 관련 자료/미약 등 약물 관련 자료/가정폭력 관련 자료/도청·감청 관련 자료/공안 사건 관련 자료/8·15 특별 사면, 준법 서약서 관련 자료/교도소·구치소 자료 일체

■ 보건복지위원회(총 656쪽) : 보건지표, 대통령 공약 현황, OECD 국가 사망률 등 사회복지 일반 관련 자료/장애인 관련 자료/병원폐기물, 적출물 처리 관련 자료/노인 관련 자료/수돗물 불소화 관련 자료/실직·노숙자 관련 자료/사회복지 시설 관련 자료/의료 사고 관련 자료

■ 과학기술위원회(총 250쪽) : 원자력 발전소 관련 자료/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검열된 우편검열 수량 등 우편물 검열 관련 자료/감청 관련 자료

■ 행정자치위원회(총 537쪽) : 불심검문 관련 자료/경찰관 총기사용 관련 자료/집회 신고 건수 및 금지 통고 건수 등 집회·시위 관련 자료/전투경찰·의무경찰 가혹행위 등 전·의경 관련 자료/징계 받은 경찰관 관련 자료/국가보안법 사법 관련 자료 일체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돼”

지난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다<편집자주>

- 사건 : 98누11290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 원고 :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소송대리인 : 시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윤종현, 김진수, 김도형)
- 피고 : 서울시 종로경찰서장
- 주문 : 1. 피고가 1997. 9. 11. 원고에 대해 한 시위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중략)
 다. 판단
 (1)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편 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참조). 또한 법 제8조 제1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통고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허가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여부를 판단해 허, 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중략) 그러나 피고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 중 집회장소의 수용인원이 제한되어 예정된 행진이 신고시간보다 먼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기재해야 한다거나 질서유지인을 참가 단체별로 분류 기재해야 한다는 점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집회의 내용에 관계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들어 신고서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집회의 신고의무자는 집회 주최자이지만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므로,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는 주관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중략) 원고의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인 권영길은 위 시위 신고서 제출 권한을 이동신에게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신고서를 이동신이 제출했고 신고서 기재사항을 보완하면서 그 위임장을 원고 집행위원장 박석운이 작성했다 하여 위 신고서 제출이나 그 보완이 부적법하다 볼 수도 없다. (중략)
 (2) 한편 (중략) 일반인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하는 시위는 그 자체가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게 되어 다른 사람들의 이전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법 제12조 제1항은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서울특별시외곽도로에서 평소 일반인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정부종합청사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시위를 벌일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위참가예정인원이 3,000명에 달하고, 위 광화문 빌딩 앞 광장에는 약 1,500명만이 수용될 수 있어,

시위 참가인원이 1,200명이 넘을 때부터 행진시위를 시작하면 시위참가자들이 정부종합청사를 4열로 포위하고 그 일대 보도를 점거하게 되므로, 위 시위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정부 종합청사를 출입하거나 인근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량의 교통소통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교통소통의 필요를 위해 위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중략)
 (3) 결국 피고는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계획하고 있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때 그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데 그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위 헌법재판소 1994. 4. 28자 91헌바14 결정 참조). 따라서 그 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계획하고 있는 시위가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참가인원 및 행진노선과 행진방법의 제한 등 적절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천적으로 위 시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생략)
 1998. 12. 29.
 재판장 판사 이종욱 판사 강일원 판사 유철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노점단속 강패동원했나

아이 업은 임신부 넘어뜨리고 폭행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하라는 말인가? 생계유지를 위해 한겨울 길거리에 나선 노점상들이 관할 구청 단속반의 폭력단속으로 인해 삶터도 뺏기고 몸도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오후 4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 공터에서 노점을 벌이던 노점상 10여 명은 분당구청 단속반에 의해 노점집기와 리어커 등을 모두 뺏겼으며, 그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임신부 한 명이 입원을 하는 등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임신 3개월의 몸인 차지영(당포치 장사) 씨는 단속 과정에서 손가락 네 개의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어 인근 재생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8일 중으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단속 당시 차 씨는 생후 13개월된 아기를 등에 업고 있었으나, 단속반원들은 차 씨를 넘어뜨리고 허리 등을 발로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경(계란빵 장사) 씨는 “단속반원들은 여자든 남자든 가리지 않았다며 ‘내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더니 발로 짓밟았다’고 밝혔다. 또 조철수(오뎅 장사) 씨는 단속반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해 광대뼈가 어긋나고 팔꿈치 뼈가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조 씨는 “리어커를 끌고 가갈때 쫓아갔는데 7-8명이 달려들어 밀어 넘어뜨리더니 발로 밟고 걷어찼다”며 “단속과정에서 서로 밀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넘어진 사람은 발로 걷어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씨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CT촬영(20만원)도 못하고 있다.
 목격자들마다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이날 단속에 투입된 단속반원은 평소의 30-40명을 크게 웃도는 1백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과정을 지켜보던 인근 음식점 주인은 “도저히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인근 불량배들을 동원한 것 같았다”며 “어떻게 임신부와 아줌마들까지 그렇게 뺏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팔짱 낀 경찰, 폭력 수수방관

이날 사태와 관련, 노점상들과 목격자들의 분노를 산 것은 특히 경찰의 태도였다. 경찰 10여 명이 단속과정을 지켜보았으나, 단속반원들의 폭력행위를 수수방관했다고 목격자들은 입을 모았다. 노점상 정성우 씨는 “이날 사태는 경찰관 회피하에 벌어진 만행에 다름 아니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한편, 단속을 당한 노점상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잃고 노점을 시작하지 않거나 안된 생계형 노점상들이다. 바람막이도 없는 반평 남짓의 리어커에서 계란빵 또는 오뎅, 당포치 등을 팔아온 이곳 노점상 가운데엔 노점을 시작한 지 겨우 1-2주밖에 안된 사람들도 있었다. 차지영 씨는 “남편 실직 후 이 일을 시작한지 보름도 안됐는데, 그동안 다섯 차례나 단속을 당해 장사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며 “더 이상 갈 곳도 없어 버티려고 했다”고 털어놨다. 조철수 씨도 “회사에서 쫓리고 음식점에서 일하다 해고된 뒤 노점을 시작하게 됐다”며 “겨우 일주일만에 노점을 뺏기니 이제 막막할 뿐”이라고 말했다.
 인근 음식점 주인은 “마지막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일들인데, 그게 도둑질보다 낫지 않느냐”며 “없는 사

1999년 1월 8일(금)
 제 128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람의 설움이 뭉치 빠져리게 느낄 수 있었다”고 씁쓸해했다.

공공부문 정리해고 신호탄

육천 조폐창에 경찰력 투입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여온 충북 옥천 조폐창에 7일 오전 경찰력이 투입됐다.
 7일 오전 8시 경 옥천 조폐창에는 6개 중대(차량 18대) 규모의 경찰력이 투입돼 1백50여 명의 조합원들을 완전히 포위한 채 오전 10시 25분경 인쇄기계를 모두 빼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의 기계반출을 막던 강승희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신을 기도했으나 다행히 심각한 상흔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직무대행은 무릎 아래 3도 화상을 입고 옥천 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조폐공사에서는 지난 한해에만 1천1백1명이 정리해고됐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5일 조폐공사는 일방적으로 옥천 조폐창을 폐쇄하고 그 업무를 경산 조폐창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계획에 반대하며 회사와 몇차례 협상도 가졌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12월 10일부터 파업을 전개했다. 그리고 1월 6일 조폐창 폐쇄의 마지막 단계인 기계반출이 임박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정문 앞 농성을 진행 중이었다.
 한편 공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적인 이날 경찰력 투입은 조폐공사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획예산위원회가 2천년까지 19개 공기업에서 11만 4천250명의 인력을 삭감한다는 계획을 밝힌 후, 불안에 휩싸여 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투쟁본부’를 구성한 뒤, 강력한 공동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지난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
별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뒤 출소에 보안관찰처분을 통고받은
고원 (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법무
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취
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
렸다(본지 12월 18일자). 법원은 98년
6월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재범 판단의 근
거가 없다"며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
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의 요지를
발췌해 소개한다(편집자주).

- 사건 : 97구43866 보안관찰처분취소
- 원고 : 고원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
호사 차병직, 정주식)
- 피고 : 법무부장관
- 주문 : 1. 피고가 1997. 8. 28. 원
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
한다.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① 출소 후 기간이 일
전하고, ② 전향을 거부하고 있고, ③
복역 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
며 수차례 단식농성을 한 일이 있고,
④ 처와 이혼하고 부모의 도움으로 대
학원에 다니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98년 국정감사 자료집 판매합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여당과 야당
이 뒤바뀐 상황에서 이루어진 국정
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료들을 요구했고 새 정부는 어떤
자료를 내 놓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문의: 엄주현 741-5363)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내세우
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
고 오히려 원고가 출소 이후 담양
경찰서에 보안관찰대상자 자진신고를
하였고 경찰관과의 면담에도 응하였으
며 현재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에 정
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
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에 충분하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한다.

(중략)
라. 판단
(1) 살펴건대,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
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
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 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
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
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
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
관찰처분의 성격상 보안관찰처분에 필
요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
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
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
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
법원 1997. 7. 25. 선고 97누2696 판
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원고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가족관계, 출소 후 동향 및 특
히 그가 현재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복역 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
며 단식농성을 한 일이 있고 출소 후
기간이 일전하며 처와 이혼하였다고 하
는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다시 보안관찰대상범죄를 저지
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
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안관찰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17
재판장 판사 최병하
판사 성기문 판사 김중근

전교조 “교육개혁 슬선” 다짐 참교육 실천대회 정례회 등

교원노조법이 통과됨으로서 합법단체
로 인정받은 전교조(위원장 김귀식)가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의 주제로 설
거리를 표명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칙
을 존중하면서도 유연한 모습으로 교
육현장의 주체세력이 되어 참교육의
실천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비합법화 시대의 어려웠던
조건 속에서 활동하면서 일어났던 다
소 무례했던 행동들에 대해 반성한다”
며 “성격이 다른 교사단체들과는 선의
의 경쟁 관계 속에서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학생들에게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교육개
혁과 참교육실천을 위해 앞으로 조합
원 전원이 자신의 교과교육과 학생지
도, 특별활동 등에 대해 1교사 1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고, 그 사례를
공유하는 ‘참교육 실천대회’를 정례화
해 교육활동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조
직적인 활동을 떠나갈 것이라고 밝혔
다. 또한 오는 5월 28일, 전교조 10주
년에는 ‘교사실천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참교육 실천운동과 교사자정운동을 전
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교조는 △교육예산확대
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사의 전문
성 확대 △비민주적 교육풍토 개선을
위한 올바른 인사·승진제도의 마련
△현재 학교현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
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행정체계를
학교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기구로의
전환 △실질적인 교직원종합대책안
마련 △빈곤층·저소득층 학생들을 위
한 교육장비 마련 및 단위학교별로 교
직원들이 참여하는 ‘사랑의 동장 만들기’
운동 등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전.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1월 9일(토)
제 128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분당, 노점단속 이수라장 구청 공무원 “노점 원천봉쇄가 목적”

이수라장이었다. 쏟아진 오텁국물이
바닥을 뒤덮고 순대와 떡볶이 가락이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길을 지나다 구
경을 하던 여학생들은 비명을 질렀고,
전투경찰들은 시민들과 노점상 사이를
경계짓기 바빴다.

지난 6일 노점상 단속이 벌어졌던 성
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 공터에서는 8
일 낮 또 한 차례의 단속작전이 벌여
졌다(본지 1월 8일자 참조). 이날 서
현역 앞에는 6일 단속을 당하다 중상
을 입은 한 노점상의 치료비를 마련하
기 위해 좌판 세 개가 노점을 벌여놓
고 있었다. 이른바 '부상자 치료비 마
련을 위한 노점'이었다. 그러나, 노점
주위를 서성거리던 단속반원들은 오후
4시 30분경 누군가의 명령 한 마디에
일제히 노점집기를 뒤집어엎기 시작했
고, 불과 십분도 안돼 좌판 세 개를
모두 트럭에 실어 버렸다. 이날 투입
된 단속반원들은 1백여 명, 수적으로
열세인 노점상들은 허탈하게 집기를
뺏길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째 서현역 앞 노점을 단속중인
분당구청 총무과의 한 공무원은 이번
단속이 “노점 원천봉쇄” 차원에서 진
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생계형 노점
이든 기업형 노점이든 관계없이 이 지
역에 집단적으로 노점이 형성되는 것
을 막는 것이 구청의 임무”라는 것이
다. 이 공무원은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이 지역에 40여 개의 좌판을 형성한다
는 정보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
러나 전국노점상연합회측은 “서현역
앞 노점들은 불과 며칠 전에 신규회원
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며, 40여 개의
노점을 형성하려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

한편, 분당구청 공무원은 지난 6일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
련, “병원에 입원중인 노점상은 자해
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단
속반원의 집단구타도 “가벼운 몸싸움
이었을 뿐”이라며 단속반원의 폭행사
실을 전면 부인했다. 6일 손가락 인대
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은 노점상은 8
일 수술을 받았다.

투쟁 참가뒤 병세 악화 목포결핵병원 결핵환자들

지난 한해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
탁 반대투쟁을 벌여왔던 결핵환자들이
약제내성(더 이상 약물로는 치료가 불
가능한 상황)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8일 민중의료연합에 따르면, 목포결
핵병원 환자비상대책위 홍보팀장 박원
용 씨등 비상대책위 간부 다섯 명은
약제내성으로 더 이상 활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생명도 언제 다할 지 모르
는 상황이다. 이들은 결핵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투쟁
에 적극 나섰다가 피로누적 때문에 치
명적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간위탁 반대투쟁에 나섰던
환자들의 몸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동이 가능한
환자 10여 명은 오는 15, 16일경 광주
시에서 열릴 예정인 ‘결핵병원 민간위
탁 반대’ 시위에 참가할 계획이다. 광
주에서 시위를 계획한 것은 전남지
역 내 여론이 아직 결핵병원 민간위탁
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판

단에 따른 것이다.
김재광 민중의료연합 사무국장은 “국
회의원들이 ‘민간위탁을 철폐시키겠다’
고 해 믿고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
로 투쟁만 이원됐다”며 “이에 환자들
이 다시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향을 반대해 오던 여야 국회의원들
은 지난 연말 국회 예결위에서 목포결
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하
나 있다.

사이버권리는 현실의 권리 통신연대, 통신서명 작업 진행

지난해 12월 10일 발표된 ‘사이버 인
권선언’과 관련, 네티즌들의 참여와
선언 보안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사이버 인권선언’의 초안을 발표한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
대모임’(이하 통신연대)은 “사이버 권
리는 단지 ‘가상의 권리’가 아니라 ‘현
실 공간’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다루지
고 있는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통
신연대는 “사이버 권리”들은 다소 선
언적인 의미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불거지는 여러 인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사이버 권리 선언’에 거
는 기대를 밝히기도 했다. 사이버 인
권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현의 자유(4조) : 누구나 온라인
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자유와 국
경에 상관없이 정보를 소통할 자유를
갖는다. (중략) 따라서 검열과 제재행
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 프라이버시권(5조) : 누구나 자신
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갖는다. 누구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다.

“반국가단체 증거 없다”

시민대책위, ‘영남위 사건’ 무죄주장

“영남위원회” 사건은 무죄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의 선고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울산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영남위원회’ 사건이 무죄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을 구형했으나, 실제 반국가단체 구성·활동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대책위는 우선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순 씨에 대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가 하면, 증거로 내세운 디스켓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도·감청 자료들은 야만적인 인권유린이 행해졌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보안수사대원이 유일한 증인인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 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영남위 사건이 ‘반국가단체’의 법적 구성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또다른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첫째, 복과의 연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은 ‘한민전 산하 구국의 소리 방송 등을 매개로 북한의 지도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조직의 성격과 목적 따위가 명시돼 있는 강령이 있어야 하는데 강령 또한 밝히지 못했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단지 <반제청년동맹>을 <영남위원회>의 전신으로 끼워맞춰 ‘강령’의 문제를 교묘하게 해결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셋째, ‘반국가단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조직체계와 지휘통솔체계도 매우 명성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대책위는 “국가를 침칭하거나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영남위’ 관련 구속자들의 활동에서 비합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생명력을 잃었다”며 “UN조차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재판받을 것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조폐창 경찰력 투입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8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조폐공사 육천조폐창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육천 조폐창 폐쇄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시민과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반대입장을 표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폐공사가 이를 무시한 채 경찰력까지 투입해 조폐창 폐쇄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노총은 “조폐공사 구조조정이 상식적인 수준을 완전히 벗어난 것임을 잘 알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마저 정상적인 해결을 회피하고 경찰력 투입이라는 강압적 방법을 선택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일방적 구조조정 즉각 중단 △모든 노사정 합의사항 즉각 이행 △경찰력 투입을 요청한 조폐공사 강력 사장의 구속 등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땐, 9일 대전에서 한국조폐공사 공권력 투입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정리해고 중단’을 위한 민주노총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 오후 1시경 기획예산위원회 기습 점거농성에 돌입했던 조폐공사노동조합 강제규 부위원장 등 7명은 저녁 7시경 강제 해산당했다. 또 수배상태이던 강 부위원장은 연행돼 대전 북부경찰서로 이송됐다.

행사와 동정

□ 제12주기 박종철 열사 추모제

- 마석모란공원 참배
- 1월 10일(일) 오전 11시(오전 9시 동대문운동장 앞 버스 출발)
- 12주기 추모식
- 1월 14일(목) 오후 3시/ 서울대학교 박종철열사 추모비 앞
- 주최: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02-766-8459)

□ 인권구국선언 기념 단행본 <양심수 없는 나라> 출판기념회

- 1월 11일(월) 저녁 7시/ 명동 향린교회
- 참가비: 2만원
- 성금계좌: 외환은행 411-19-00932-2(예금주: 홍근수)

□ 통일 할아버지 늦봄 문익환 목사 5주기 추모

- “평양가는 기차표를 다오”
- 묘소참배
- 1월 17일(일) 오후 2시/마석 모란공원
- 문익환 전집 출판기념회
- 1월 18일(월) 오후 4시30분/기독교연합회관 2층
- 추모공연
- 1월 18일(월) 저녁 7시/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대강당)
- 주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주관: 통일맞이 늦봄 문익환목사 기념사업
- 문의: 02-762-8201/745-5872/708-4980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1월 12일(화)

제 128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겨울철 강제철거 안한다더니

인천 철거용역 발가벗고 부녀자 폭행

영하 12도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지역에서 강제철거가 진행돼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오전 5시 30분, 청송건설용역은 직원 30~40여명과 포크레인 3대를 앞세워 인천시 송현동 재개발지역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섰다. 철거소식을 듣고 달려나간 마을 주민 20여 명은 철거용역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철거용역 중 한 명은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강제철거를 막고 있던 부녀자들에게 덤벼들어 부녀자 몇 명이 콘크리트 바닥에 나뒹굴었으며, 이어 철거용역들이 달려들어 구둣발로 가슴과 허리 등을 구타해 윤달순(65) 씨와 유순금(53) 씨가 허리와 골반 등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또한 주민 김원창(38) 씨는 구타를 당해 이빨이 하나 부러지고 상복부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역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삶의 터전을 지키는 싸움

송현동은 93년 인천시청에 의하여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후 98년 감정평가 실시되었으며, 당시 대부분의 주민들은 마을을 떠났고 감정평가를 거부한 30세대만 남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철거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가 시기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데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제공한 인천 번두리 가수용단지로 들어가게 될 경우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철거반대가 아니라 가수용단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천시청과 주택공사도 지난 12월 17일 합의없는 강제철거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측에 의해 철거 하청을 받은 청송건설용역이 지난 98년 12월 23일 빈집을 임의로 철거하면서 주민들과 한차례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어 나흘 뒤인 12월 27일에는 사전협의 없이 강제철거가 시도돼 그후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11일 새벽 기습적으로 진행된 강제철거에 대해 인천시청 비서실장과 건설국장은 “일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즉각 시정조치해 철거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철거용역은 물러가지 않았고, 오후 10시 현재,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전국철거민연합 회원과 대학생 등 약 1백명과 철거용역원 간의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알고보니 인권유린 대통령”

송현동에서 3대째 살고 있다는 주민 김은형(52) 씨는 “갈 곳이 있다면 떠나

겠지만 떠날 곳이 없다. 인권대통령이라고 믿었는데 알고보니 인권유린 대통령이었다”며 “김영삼 시절에도 겨울에는 철거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 추운겨울 한파에 어디로 가라고 강제철거를 진행하는지”라고 한탄했다. 송현동 부근에서 막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주민 한홍구(55) 씨 역시 “번두리 지역 가수용단지도 이주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터인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거리로 내몰아 얼어죽는 것을 의미한다”며 “왜 하필 이렇게 추운 때에 철거를 진행하는지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안양 유진상가에도 철거 위협

인천 송현동 외에 안양시 유진상가에서도 철거를 둘러싼 용역들과 영세민들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유진상가 상인들의 경우 이곳에서 주거와 생업을 계속해왔는데 지난 12월 4일 한차례의 강제철거가 진행된 후 계속적으로 철거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7가구의 영세민들은 위험상황을 대비하여 어린이들을 친척집 등에 보내놓고 있으며,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철거에 대한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동절기에는 절대 강제철거가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그 약속이 겨울 한파 속에서 속절없이 문허가고 있다.

.....주요 공판 안내

- ▶ 1월 12일(화)
 - 단병호(업무방해)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1단독, 선고
 - 김철민(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 ▶ 1월 14일(목)
 - 김미자(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신건
 - 유덕상 외5(업무방해 등) 오전 11시, 서울지법 317호, 3단독, 속행
 - 권영길(일반교통방해 등) 오후 4시, 서울지법 317호, 3단독, 속행
- ▶ 1월 15일(금)
 - 김창현 외14(국보법, 영남위 사건) 오전 9시, 부산지법 103호, 선고
 - 노재중(횡령·폭행 등, 양지마을 사건) 오후 3시, 대전지법 231호, 속행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제주 4·3을 다룬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됐던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에 대해 법원이 이적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강남 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송의근(창원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씨 선고공판에서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해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레드헌트의 내용에 폭력, 기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를 폐지, 전복할 것을 유도·선동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 <레드헌트〉는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됐으며, 이로 인해 당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이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구속되는 등 파문을 일으킨 영화다.

〈판결문 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중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중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항은 그 개념이 다의적이고 광범위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헌법상의 언론, 출판, 학문, 예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아니하는 합헌적인 해석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적용범위를 축소, 제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할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등의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의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형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표현물의 불법성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반국가활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축소, 제한해석을 하여야 할 것… (후략)

주/간/인/권/호/름 (99년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 ◆ 1월 4일(월)
사북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하던 도중, 이를 불량배로 오인하고 달아나는 고교생 2명을 붙잡아 연행하는 과정에서 곤봉 등으로 때려 물의/김원기 노사정위원장, 구속노동자 석방 건의키로/서울시, 서울역 등 지하도 봉쇄하고 노숙자들 대거 '자유집'으로 입소시켜/노동부, 올 6월 30일 이전 실업급여 지급이 만료되는 실직자에 한해 실업급여의 70%를 최고 60일간 연장해 지급하기로
- ◆ 1월 5일(화)
보건복지부, 태아 성감별 의사 면허취소키로/서울대 교수 4명, 재임용탈락에 대한 교육부 재심 신청이 각하되자 헌법소원 제기/국회, “스크린쿼터제 사수” 결의/전국 민족민주유기협 소속 회원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 ◆ 1월 6일(수)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및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남녀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남녀차별금지구제법 제정안 국회 통과/박상천 법무장관, “구속을 남발하거나 다른 검찰청에 비해 구속률이 높은 일선 지검·지청장에 인사 불이익 주겠다”고 밝혀/서울시, 시내 30개 복지관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 377건에 이르는 운영비리 드러났다고 밝혀/미국 '전국노숙자 및 빈곤자 법률센터', 미국 경찰이 노숙자들을 거리에서 추방하기 위해 공권력 동원을 늘리고 있다고 밝혀/성남시 분당구청의 서현역 앞 노점 단속 과정에서 임산부 포함된 노점상들, 단속반원에 집단폭행당해/
- ◆ 1월 7일(목)
노동부, 앞으로 남녀차별하는 사업장은 그 사례와 이름을 일반인에게 공표하기로/브라질 포드자동차 공장 노동자 5천여명, 해고에 항의하며 파업/구조조정 반대 파업 진행중이던 충북 옥천 조계장에 경찰력투입
- ◆ 1월 8일(금)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경찰 간부후보생 모집 조건이 여성의 응시를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경찰청에 시정 요구/전국대학 감사노동조합, 시간감사 신원조사 실시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신원조사를 거부하기로 해/노동계,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강경투쟁 선언/미군기지 되찾기 대구시민모임, 대구 주둔 미군기지인 캠프헨리와 캠프워커 등 2곳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실태조사결과, 미군쪽이 종량제 봉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혀
- ◆ 1월 10일(일)
80년 이후 후방 방공포기지들 주변에서 발포지뢰 1290발이 유실돼 아직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한 지난 11월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률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1월 13일(수)
제 128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곤

영터리 신원기록에 멍든 시민

담당 경찰서, 기록 공개·수정 거부

멸명한 시민이 정부의 공문서 상에 '정신 이상자'로 기록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몇 달째 벌여 오고 있다.

성남에 사는 이철용(34·성남건설일용노동조합원) 씨는 지난해 여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가다가 자신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에 특이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성남남부경찰서가 작성한 이 회보서에는 "97년 6월 머리를 다쳐 입원후 퇴원, 정신이 이상한 자로 수시로 집을 가출하고 있으며, 현재 거처 않고 있음"이라는 엉뚱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조희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이철용 씨가 이미 원하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반문했다. 담당 형사는 "신원조회 내용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다시 "뒤져봐야 한다"고 번복해가며 신원조회 내용의 변경 여부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이 담당 형사는 "행정기관 사이에만 오가는 신원조회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본인에 대한 잘못된 기록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 누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또 본인에 대한 공식기록조차 열람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행정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시급히 요구된다.

멸명한 시민이 '정신이상자'로 이 씨는 97년 6월 서울시내에서 한층련 시위를 구경하던 중 시위대로 오인데 전두경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바 있으며, 그후 폭행후유증으로 머리에 통증을 앓아오고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해 왔다. 또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닿기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회보서의 내용과 같이 "수시로 집을 가출"하거나 "주거지가 없음" 처지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 씨는 성남남부경찰서 정보과를 직접 찾아가 자신에 대한 신원조회 내용을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12일 이 씨는 제차 성남남부경찰서로 연락해 신원조회 내용이 수정되었는지를 문의했으나, 경찰은 확인을 거부했다. 담당 형사는 "이 씨에 대한 입원기록이 있고, 담당의사도 '머리가 아프고 회복이 안됐을 것'이라는 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그같은 신원

한편, 이철용 씨는 자신의 신원조회 내용이 수정되지 않자, 지난해 8월 담당 형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 씨는 "신원조회 내용을 수정하려면 행정소송을 해야하는데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으면 스스로 고쳐야지 왜 내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분당 노점탄압 중단 촉구

노점상 8백여명 대규모 집회

전국노점상연합회 회원 8백여 명은 12일 성남 분당구 서현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6일과 8일 진행된 분당구청의 노점단속을 강력히 규탄했다. 노점상들은 △노점에 대한 탄압 중단 △성남시의 피해보상 △노점상 폭행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신원조회 말썽 어물쩍 넘어가려고?

교육부, 방침철회 유보...피해 강사 구제도 안해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신원조회를 부활시켜 말썽을 빚고 있는 교육부의 이해찬 장관이 11일 "신원조회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의 발언은 논란을 잠시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12일 모임을 가진 서울대 인문대학 시간강사들은 "신원조회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를 계속 남겨두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신원조회 방침 전면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다음주중으로 서울

대 교무처장을 만나 '신원조회 방침'의 공식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러한 움직임에 다른 단과대학 강사들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의 신원조회 실시로 인해 첫 희생양이 됐던 조선대 사회교육원 강사 이윤정 씨는 아직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1998년 12월 24일자).

이 씨는 "아직 조선대학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며 "학교측이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신원조회 실시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이윤정 씨가 입은 피해부터 구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고> 동암재활원 사태의 전개과정

윤찬영(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해 연말 이후 전주에서는 동암재활원의 인권유린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상규명 작업중인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윤찬영 교수로부터 사태의 경과를 들어본다<편집자주>.

지난 98년 11월 초, 동암재활원 직원에 의한 원생 성폭행 사건이 입건되어 언론에 보도가 난 뒤, 우연한 계기에 동암재활원생 김모 군으로부터 재활원 뿐만 아니라, 동암재활학교와 동암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몇 건의 의문사, 계속되어 온 성폭행과 구타, 식사의 부실 및 각종 처우문제, 수영장의 돈벌이 문제 및 물리치료실 문제, 작업장의 저임금과 원생들의 임금 횡령 문제 등 그 내용을 접하는 순간 또 하나의 양자마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평소 사회복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 오던 전주시 의원과 전북도의 원에게 제보를 하여 도움을 청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12월 19일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시의회에 동암재활원에 대한 조사 보고를 했으나 동암 측의 입장이 주로 전달되었을 뿐이며, 일부 문제를 시인하여 보조금을 환수하고 직원을 해임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미흡했다. 이에 12월 21일 시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조사하기 위한 특위가 구성됐다. 그러자, 동암 측은 재활원 시설 폐쇄신고를 내고 시의회 앞과 동암사태를 폭로한 시의원 집 앞에서 직원과 장애인 및 그 부모들을 동원하여 항의 농성을 벌이는 등 사태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연료비 절약 등의 이유로 2주일이나 앞당겨 조기방학을 했던 재활학교 학생들을 긴급히 소집해 농성을 진행한 것이다.

또한 동암의 교직원들이 언론과 시의회에서 증언하거나 진술한 재활원생과 재활학교 학생들을 집으로까지 찾아다니면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하거나 회유하고 있어서 해당 장애인들은 힘든 도피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에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등 7개의 시민단체가 모여서 동암재활원 뿐만 아니라 동암사회복지법인 산하의 모든 시설의 비리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지난 12월 29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그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기자들의 거친 꾸지람(?)이 쏟아지는 등 분위기는 험악했다.

지역 여론 양분
동암측의 시설폐쇄신고를 기점으로 전주MBC, 전북일보, CBS 등이 동암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 전주KBS, 전라매일, 내일신문, 한겨레신문 등이 비교적 동암의 문제를 파헤치는 보도를 했다. 이러한 연유로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동암법인 이사장인 양복규 씨를 애써 옹호하려는 측과 장애인으로서 사회사업을 한다더니 시설을 이런 식으로 운영했느냐고 분노를 제기하는 측으로 양분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 내부적으로도 인식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즉, 양자마음사건 이상으로 충격적이어야 사회적으로 쟁점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제기되어 답답함을 느끼게 한 것이다. 게다가 사회복지관련 단체에서는 자신들의 처부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행히

전북사회복지사협회가 뜻을 함께하기로 결정을 했다.

또한 이 사태의 전개과정을 통해 공무원, 기자, 지방의원, 일반인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장애인과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의 낙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다. 장애인은 모두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으며, 따라서 그들의 증언은 믿을 게 못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낙후된 인식들

실제로 공대위 구성 초반에는 내부적으로도 장애인들의 진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을 정도다. 그러자 하면 장애인에게 국·도·시비를 들여 숙식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기본은 유지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건들은 우연적인 것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점차 입증되자 동암 측의 편을 드는 언론들은 사회복지시설 일반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입장을 들고 나왔다.

장애인도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권의 주체라는 점과 사회복지사업은 돈과 어느 정도의 동정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지역사회 지도층 전반에 매우 희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사태의 해결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거대한 하나의 빙벽이다. 따라서 시민단체 공대위는 이제 이러한 거대한 빙벽을 깨뜨리는 싸움에 나선 것이다.

♣...새로 나온 책

『양심수 없는 나라』

민권공대위 역음/살림터 펴냄/271쪽/7천5백원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민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등)가 지난 한해 동안의 활동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양심수 없는 나라』는 한총련·범민련의 정당성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글, 준법서약을 거부한 양심수들의 편지, 보안관찰법 폐지와 언론개혁에 대한 글 등을 담고 있다. (문의: 02-3141-6553)

50년만의 정권교체에 취해 '아직도 국가보안법 타령이냐'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큰 어른의 꾸짖음처럼 다가온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1월 14일(목)

제 128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곤

전자신분증 '통제강화' 논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RF카드 도입

최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전자신분증 도입을 앞두고, 작업장감시와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김체원)은 지난 11일 전자 신분증인 RF(라디오 주파수) 카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자들의 반발로 인해 지급기일을 26일로 연기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RF카드는 관독기에 직접 접촉해야 인식이 가능한 기존의 IC카드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로, 초단파를 이용해 기록된 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최첨단 인식카드다.

회사측은 "현재 노동자 '근무태만'에 대한 관리는 관리자가 일일이 눈으로 체크하고 손으로 기록하는 60년대 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카드 도입시 컴퓨터가 자동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므로 관리자의 일손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출퇴근 체크용"... "통제수단 악용가능"

그러나 일부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활동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많다"며 RF카드의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카드를 도입한 이후 공장 곳곳에 카드 관독기를 설치할 경우, 작업장뿐만 아니라 휴게실, 화장실 등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공간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출퇴근 확인용 카드라는 회사측 설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현장 내 활동가 조직들을 중심으로 8일 구성된 'RF카드 일방적 지급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700명 이상 수거)에서 "RF카드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터뷰>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임미령 위원장 “할 일 많아 행복해요”

지난 11일, 국내에서 최초로 지역여성노동조합이 창립되었다. <인권하루소식>은 창립 이후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임미령 위원장(42)을 만났다.

“가장 보람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을 만든 일이지요.” 옆집 아줌마 같은 편안한 인상의 임 위원장이 상기된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말문을 열었다.

“20년 넘게 일했는데 여성노동자의 작업환경은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힘도 미약하고요. 그래서 95년부터 뜻 맞는 사람들과 외국 사례도 조사하고 구로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각 사업장마다 친목회를 결성하며 차근차근 지역노조를 만들 꿈을 키워온 거죠. 작년에 IMF 여파가 밀려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IMF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노동자였거든요.” 실제로 IMF 이후 여성은 해고 우선순위 대상자로 분류되어 여성노동자의 수는 지난 상반기에 비해 10.2%나 감소되었고(남성 6.2% 감소) 계속해서 퇴직·권고사직 등을 종종받고 있는 형편이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6일 ‘남녀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사업장에서 얼마나 지켜질지도 의문이고, 또한 대다수 여성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데 거기엔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없어요. 대사업장의 경우도 여성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7%밖에 되지 않아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는 한계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해요. 서울을 시발로 조만간 전국 8개 지역의 여성노동조합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힘을 하나로 모아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여성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지역 여성노동조합 상근자

는 2명뿐. 하지만 25명의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부지런히 조합 일을 보고 있다. 이들은 오전 9시 사무실에 모여 하루일정을 공유하고 회의를 한다. 지역노조이다보니 각 사업장별로 돌아다니며 조합원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가 되는데, 작은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일의 양도 많고 여유 시간도 적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지 않다. 또한 아직 사업장별 모임이 친목회형태로 유지되는 곳이 많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일도 만만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미령 위원장은 조합원 모두가 해야 할 일, 하고픈 일이 많아 행복해한다고 말한다.

“여성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과 업종을 떠나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3백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원을 제외하고는 서울여성노동자 모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은 열려있고 언제나 환영합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임 위원장. 그녀의 얼굴에서 희망찬 서울여성노동조합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교육부 ‘안면물수’

이윤정씨 강단복귀 학교에 미뤄

교육부의 신원조회로 인해 강단에서 쫓겨난 조선대 사회교육원 이윤정 씨가 당분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1월 13일자).

조선대 사회교육원 조하행 원장은 13일 “3월 새학기 강의 일정이 이미 결정되었다”며 “이윤정 씨를 다시 채용하는 문제는 가을 학기에 가야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당초부터 신원조회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라며 “이 씨가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윤정

씨가 채용에서 탈락한 것은 해당 학교 자체의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이 씨를 다시 채용하는 문제는 해당 학교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부실경영자엔 64조 평평

기초생활보장법 “재원없다” 보류

민주노총, 참여연대, 일용직저소득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 등 사회단체들은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번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경유착과 기업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무려 64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면서도 한계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2조여원의 예산부담을 이유로 보류하는 것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아직도 실직자들의 69.7%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생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임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근본적 대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최근 국무조정실장이 “재원”을 이유로 심의 보류를 요청해 법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98년 국정감사 자료집 판매

- 환경노동위 I 총708쪽 45,000원
- 환경노동위 II 총702쪽 45,000원
- 환경노동위 III 총412쪽 25,000원
- 환경노동위 IV 총537쪽 30,000원
- 법제사법위 I 총452쪽 25,000원
- 법제사법위 II 총348쪽 20,000원
- 교육위원회 총132쪽 10,000원
- 외무통일위 총193쪽 12,000원
- 과학기술정보위 총253쪽 15,000원
- 행정자치위 총537쪽 30,000원
- 보건복지위 총662쪽 40,000원

▶ 한질 구입시: 할인가 25만원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1월 15일(금)

제 128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민간사찰 대응 고삐진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불법 사찰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사찰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경찰을 상대로 사회단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전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총 등 5개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찰청이 사회단체 임원 및 구성원에 대한 자료와 인물존안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자치부장관 앞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장은 15일 접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12월 5개 단체들이 사찰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7일자). 그러나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가 거부할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비공개대상정보 가운데 하나로 “다른 법

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고 있지만, 경찰은 공개를 거부한 자료들이 어느 법률과 명령에 의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7조의 비공개대상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된 정보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번에 수집된 자료들은 ‘단체 및 그 구성원의 인적사항 및 교우관계, 정책선호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 수집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소장에서 “경찰이 범죄예방이나 수사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범 죄 혐의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해 범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주권자인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 단체들은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7일 사찰 자료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동암재활원 인권유린 확인”

시민단체, 탈법행위등 추가폭로

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동암사태 진상 규명과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암 내의 각 시설과 학교에서 상습적인 성폭행과 구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암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12월 29일 결성된 공대위는 그동안 인권침해 사실 등에 대한 증언청취, 자료분석 등의 활동을 벌여왔으며, 그 결과를 이날 공개한 것이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암 재단의 △수영장 편법 운영을 통한 돈벌이 △탈법적 원생증원 △허술한 회계장부와 보조금의 부적절한 운영 △사고입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무책임한 처우 등을 추가로 폭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동암은 장애인 재활을 목적으로 설치된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일반인 이용자에게 후원금 명목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암은 일반인에게 이용료를 받을 경우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 때문에, 수영장을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97-8년에 국·도비 4천8백여 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들은 거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또한 순수재활원생 이외에 40여 명의 학생이 탈법적으로 편입되었는데도 시·도는 아무런 조치없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 2면으로 이어짐

자유복한인(탈북자) 인권침해 방지 및 생활정착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

· 4: 1월 15일(금) 오전 10시

· 곳: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주최: 민변, 전주교인권위,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피노체트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영국대사관 앞 시위

· 4: 1월 15일(금) 낮 12시

· 곳: 영국대사관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14일 박종철 열사의 12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최근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이길상 씨의 자살사건(본지 12월 10일자 참조), 이을호 씨의 병원 입원 소식(상자기사 참조) 등이 전해지면서 과거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사건의 진상규명과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고문피해자의 수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5·6공 시절과 김영삼 정부 시절에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만도 남매간첩단 사건의 김삼석 씨, '부여간첩 김동식 사건'의 박충렬 씨, 범민련 나창순 씨등이 물고문, 성기고문 등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고문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는 우선 국내 법원을 통한 수밖에 없다. 그러나, 96년 12월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고문을 당했던 김형찬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듯, 국내법원에서 고문피해를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김 씨의 경우, 고문을 당한 정황증거가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증거가 달리 없다"며 이를 인정치 않았던 것이다.

또 고문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것 역시 고문피해구제와 고문의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95년 3월 헌법재판소는 황대권 씨 등 장기수 8명이 "고문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내자 이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군사정권 아래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이제 국내 법원에서 구제를 받을 길이 막혀 버리고 말았다. 이는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치 않는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도 위배되며, 영미법이나 유럽대륙법에서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를 철폐하거나 제한하는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국내 법원을 통한 고문피해 구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피해자가 구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길 뿐이다. 이는 고문방지위

원회 또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전자마저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0년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했지만, 고문피해자가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22조 등은 비준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길상 씨나 이을호 씨의 경우처럼, 독재정권 아래 고문을 당해 지금까지도 통발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그리웠다” 고문피해자 이을호 씨 가족의 끝모름 고통

지난 7일, 전두환 정권 아래서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아왔던 이을호(45·전 민청련 상임집행위원) 씨가 다시 병원으로 후송돼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3일 오후 이을호 씨의 부인 최정순 씨는 자신과 가족이 겪어야했던 아픔을 털어냈다.

“너무 외로웠다고 하더군요. 자신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요. 지난 45년 동안 30년은 미친듯이, 15년은 살기 위해 살아왔는데 이젠 너무 지쳤다고요.” 어렵게 말문을 연 최정순 씨는 남편의 심경을 전하면서 끝내 북받쳐오는 슬픔에 눈물을 보였다.

85년 민청련 사건으로 구속된 이을호 씨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에 의해 물고문 등 혹독한 고문 속에 조사를 받던 중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게 시작했다. 가족들이 그의 석방을 호소했지만 그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으며 이듬해 6월에서야 정신분열증이란 진단을 받고 풀려날 수 있었다. 일단 귀가는 했지만 이씨의 증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 15년 동안 이 씨는 4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매년 12월이 되면 발작현상을 보였다. 그때마다 가족들은 불안으로 밤을 새웠고 아이들은 정신병자의 자식이란 손가락질을 감수해야했다. 마을 사람들의 반발에 이삿집을 꾸리기도 수 차례. 어렵게 찾아간 병원의 의사들조차 정신분열증이란 대답만 되풀이 할 뿐, 고문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해 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그 모든 것을 남편과 가족들이 감수해야한다는 철지한 고립감이었다”고 최 씨는 말한다.

“남편은 일을 하고 싶어했지만 보통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번번히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친하던 사람들도 그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의 상태가 악화라도 된 때면 그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했지만 마땅히 부를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아야했죠. 옆에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최 씨의 마지막 바람은 남편과 같은 고문피해자에게 국가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남편과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다.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울고 말았다”며 쓸쓸한 미소를 짓는 최정순 씨, 그 뒷모습엔 지난 시간에 대한 진한 아픔이 배어 나오고 있었다.

다. 더불어 고문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국제인권조약에 부응하는 제도적 보완만이 고문없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1면에서 <동암사태>

이밖에 성폭행, 구타 등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최근 3년간 약 3건의 의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대위는 “동암사태는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당연한 결과였다”며 주무관청인 전라북도도와 전북도 의회의 적절한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확증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판이 계속되는 속에서 국내 법원이 또 다시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국내외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1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영남위원회’사건 1심 선고재판에서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권오봉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제3조)를 적용, 박경순, 김창현(울산동구청장) 씨 등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3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검찰 증거 그대로 인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들이 경·검찰에 의해 제시된 문서, 감청자료 등의 내용이 조작되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내용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여러가지 증거들로 추정하였을 때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두고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반국가단체인 영남위원회를 구성, 활동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야·시민단체 “사법부 폭거” 비난 그러나 이날 선고에 대해 재야와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해 1심 선고 결과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등 9개 사회단체는 “반국가단체임을 증명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작 가능한 컴퓨터 디스켓과 불법 도감청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내려진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폭거”라고 주장하며 “선

고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국내외적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강력하게 벌여 나겠다”고 선언했다(공동성명서 3면 참조). [영남위원회 부산·울산 공동대책위]도 재판이 끝난 뒤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선고는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사상,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송두리째 묵살하는 치욕적인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인권,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고 스스로 반인권적인 정부임을 드러낸 재판”이라며 정부와 사법부가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철회하고 관련자 전원을 석방할 것을 주장했다.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받겠다” 한편 관련자 전원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3백여 방청객들은 재판관을 향해 강력한 비난을 보냈으며,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은 가족과 방청객 등을 향해 “우리는 석방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와 민중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해 방청객들의 오열을 자아냈다.

<선고형량>

- 박경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 임동식: 징역 9년 자격정지 9년
- 정대연: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
- 김이경: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
- 김창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 김명호: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 방석수: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 이은미: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이철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1999년 1월 16일(토)

제 129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김성관: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김용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천병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이정희: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홍정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 이희: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피노체트 기소하라”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영국 대법원 재판부의 심리가 오는 18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15일 영국대사관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피노체트의 기소를 촉구하는 국내 사회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17일 영국 대법원은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최근 이 판결을 무효로 하고 18일 새로운 심리를 갖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승리21, 청년진보당, 구속노동자후원회 등은 “영국 대법원이 자국내 보수세력과 미국, 칠레 정부 등의 보수세력의 국제적 압력에 굴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새로운 심리에서 피노체트에게 관용을 베푼다면 이는 영국 대법원이 피노체트와 한면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반인륜적 범죄자에게는 외교적 면책특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노체트를 기소할 것을 영국 대법원에 강력히 촉구했다.

◎ 판매합니다 ◎

「98년 국정감사자료집」

「한국감옥의 현실」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정보자료실
(02-741-5363 / 담당: 엄주현)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가혹행위 등 폭로

1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4개 인권단체는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거주 탈북자들이 겪은 충격적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했다.

공항부터 시작되는 폭설

탈북자들이 겪은 인권유린행위는 입국 직후부터 시작됐다. 공항에서 정착보호시설로 이송되는 때부터 안기부 직원들의 욕설과 모욕적 발언들이 쏟아지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족을 버리고 온 인간쓰레기"라는 욕설은 가장 고통스럽고 참기 힘든 모욕이라고 탈북자들은 밝혔다. 그렇잖아도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을 가진 이들에게 이같은 욕설은 육체적 고문 못지 않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이어 대성공사(영등포구 신길동 소재)라 불리는 정착보호시설에 도착하면 고문과 가혹행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기부, 기무사, 경찰, 국군정보사령부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는 '위장귀순'인지 여부를 가린다는 목적 아래 약 1주일에서 한 달 가량 신문물을 벌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수한 폭행이 가해지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합동신문조는 "말 안 들으면 오늘밤이라도 판문점으로 보내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퍼부었으며, 심지어 옷을 벗기고 생식기를 만지는 고문까지 자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은 탈북자 가운데 약 80%에 이른다고 인권단체들은 밝혔다.

국적 취득 후에도 기본권 제한이처럼 고문을 당하다보니 후유증을 겪는 사람도 잇따랐다. 이정국 씨는 몽둥이로 매질을 당하다 손가락이 돌아가는 부상을 입었고, 엉덩이를 무수히 구타당해 지금은 노동능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밝혔다. 또 허철수 씨는 공황장애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고, 이민복 씨는 불면증 때문에

육군통합병원 정신과에서 두 차례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은 조사과정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계속되었다.

이들은 국내에 입국한 뒤 2년이 경과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비로소 국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들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삶을 누릴 수가 없었다. 안기부, 경찰의 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최저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가운데 직업이 없는 경우는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기부, 탈북자 모임 화해공작

또한 이들은 결사·표현의 자유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각종 기본권마저 제한당하고 있다. 이민복 씨는 안기부의 승인없이 신문 등에 글을 기고했다는 이유 때문에 대성공사 지하실로 끌려가 구타와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열악한 탈북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자유북한

인협회'가 결성되기도 했으나, 안기부는 이마저도 각종 회유와 협박 등을 통해 와해시키려 했다고 탈북자들은 밝혔다.

탈북자들은 대개 남한 사회에 동경을 품어오다, 남한에서 뿌린 뼈에서 "귀순하면 25평의 집과 정착금 5천만원,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한 사람들이라고 인권단체들은 밝혔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이런 꿈은 입국과 동시에 산산 조각나고 그동안 가문대 상당수는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는 처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인권단체, 법적 대응키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인 인권단체들은 "탈북자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원 또는 북한을 비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도적 시각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하며 △고문 내지 가혹행위의 중단과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탈북주민에 대한 당국의 조사 방식 개선 △2년을 경과한 탈북주민들에 대한 근거없는 감시와 감독 중단 △탈북주민 정착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탈북주민 지원업무에서 안기부 간여 최소화 △탈북주민의 결사·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국제적십자사와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탈북자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는 한편, 탈북자를 조사한 수사관에 대해 형사제소와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와 동정

- 문익환 목사 5주기 묘소 참배 및 출판기념회
 - 묘소참배 : 1월 17일(일) 오후 2시 / 마석 모란공원
 - 출판 기념회 : 1월 18일(월) 오후 7시 / 기독교연합회관 2층
 - 주최 :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02-762-8201)
- <시민토론회>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
 - 때 : 1월 18일(월) 오후 2시 - 곳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 (02-723-9581)
-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평화사랑 큰마당'
 - 때 : 1월 23일(토) 12시-오후 2시 - 곳 : 철학마당 느티나무
 - 주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02-2264-8649 / 담당 : 장혜민)
- '한국여성의 전화' 상근자 모집
 - 모집분야 : 정책/ 교육조직/ 정보화 담당할 3인의 상근자
 - 서류접수 : 1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통신
 - 문의 : 02-2269-2962-5 (담당 : 박정임 사무국장)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오늘 부산지방법원 합의2, 3부는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여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7월 현 정권 들어 최초로 반국가단체 혐의가 적용된 이 사건이 미칠 파장 때문에 오늘의 선고 결과에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강령과 조직체계 및 지휘통솔체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불법 도감청에 의한 녹음테이프와 누구나 조작할 수 있는 얼굴없는 제3의 협조자에 의해 제시된 컴퓨터 디스켓과 같은 것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몇 년 동안 치밀하게 수사하여 왔다는 사건의 명칭에 대해서 검·경마저도 네 번이나 명칭을 바꿔 왔다는 점은 더욱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이유였다.

1. 재판부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를 저질렀다.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일관되게 부인해왔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제3의 인물을 법정에서조차 내세우지 못하는 검찰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기를 고대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유령과도 같은 제3의 협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는 컴퓨터 디스켓과 오랜 시간 개인의 사생활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로써 50여 년 동안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짓눌러온 국가보안법이 용기 있는 재판부의 결정에 의해 철폐를 맞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던 국내외의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세력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져 버렸다.

2. 이른바 영남위원회 피고인들이 반국가행위를 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

한 걸음 양보하여 피고인들이 이른바 영남위원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한 것이 국가의 안보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쳤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행하였다는 활동이 산재·해고 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주부학교, 노래교실, 한글교실, 풍물교실, 주부글쓰기반, 좋은 아버지모임, 백혈병 어린이돕기모임, 가족등산모임 등과 같이 그 지역의 현안

과 깊은 관련이 있는 활동들이었고, 전국적으로 진행된 북한동포돕기,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같은 것이었다. 이런 활동들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이었고, 이런 것이 과연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데 기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이사회가 결정한 바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제7조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 2항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조약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결정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국가보안법 7조만 아니라 다른 조항들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3.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위해 국내외 역량을 집중해 투쟁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사상의 자유는 특정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 사상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사상을 고백할 것을 강제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또 사상의 자유와 깊은 관련이 있는 표현의 자유는 의견을 가질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포함한다.

국가보안법은 이런 기본원칙을 무시한 반인권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라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치욕스럽게도 인권침해국의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비겁하게 검찰 등 공안세력들의 반인권 논리에 굴복하여 이번 판결을 내린 점을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이제 인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세력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의 운명을 끝장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또 다진다.

아울러 이번 선고결과를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알려내고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거센 압력을 가하고 말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운명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고야 말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사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9년 1월 15일

부산울산지역 용공조직사건 전국대책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국제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국민승리21/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1월 19일(화)

제 129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 · 사법부에 또 빨간칠

시민단체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한국논단>이 아직 이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논단>의 이도형 발행인은 99년 1월호에 실린 '합법적으로 언론탄압하는 법원과 시민단체는 답하라'는 글에서 "민노총의 주장은 북괴와 비슷하다"며 종전의 비방을 되풀이하고 나섰다.

"정치세력화는 노동당운동"

이도형 씨는 이 글에서 "북괴측은 국가보안법을 가리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라 하였고, 민노총은 국보법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반민주악법'이라 하였다"며 "노동자가 왜 정치세력화해야 하는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곧 '노동운동'이 아니라 '노동당운동'이 아닌가?"라고 억지를 부렸다.

또한 '북괴의 기관지 · 기관방송 등은 수십년 전부터 남조선의 노동자들에게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여 근로민중이 참된 주인이 되는 새 사회를 건설하라'고 부추겨왔다'며, "이에 화답하듯 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민주사회를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어 "민노총이나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심지어는 KBS의 PD(남성우)마저도 대뜸 한국논단의 악점이 될 듯싶은 꼬투리(몇몇 표현)를 잡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통일전선전술로밖에 볼 수 없는 아비한 정치적, 합법적 수법으로 한국논단의 언론활동을 실질적으로 교묘하게 방해하고 궁극으

로는 압살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 씨는 글 마무리에서 시민단체와 서울지방법원 판사 앞으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첫째는 법원이 도합 4억7천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판결한 산출근거가 무엇이나는 것이며, 둘째는 시민단체들이 소위 손해배상금을 무엇을 위해 무슨 목적으로 어디다 쓸 것인가를 명쾌하게 답변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씨가 정작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 대목과 관련, "손해배상금이 '노동당 적화사업'에 쓰일 것"이라는 주장을 예들려 표현한 것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이 씨는 "나는 그대들이 몰락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글을 마쳤다.

"치열하게는 좌경용어?"

한편 <한국논단> 1월호는 최장집 교수 기사와 관련, 월간조선 배포 및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지방법원 박성수 판사에게도 한 시사평론가의 입을 빌려 '색깔'을 칠하고 나섰다.

기고자 이기봉 씨는 박 판사가 법원 내 컴퓨터 통신에 게재한 글 가운데 특정 단어를 트집잡는 "전술"을 구사했다. 조선일보에 대한 반박문으로 작성된 박 판사의 글 가운데엔 "조선일보의 최장집 교수에 대한 표현이 과연

신청인 최장집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치열하게' 다루어졌고..."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기봉 씨는 여기서 '치열하게'라는 단어가 "80년대부터 주로 좌경학생운동권에서 성행한" 말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용어는 북한에서 단골로 사용하고 있는 전투적 용어인 '가렬치열'에서 본따온 '가렬치열'과 함께 우리나라 좌경운동권에서 곧잘 사용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상도동 시위 수배자 구속

지난 14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제청문회 증인출두 등을 촉구하며 상도동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김재돈(97년 서울대 농대 학생회장), 이영수(97년 서울대 농대 부학생회장) 씨에게 16일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사람은 97년 한홍련 5기 대의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수배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8월부터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18일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은 두 사람의 구속과 관련, "이들의 행동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제청문회 증인 출두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었다"며 두 사람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사 농성단은 또 "집결여당과 검찰측은 정치수배자 65명에 대한 불구속 처리 약속을 하고도 이들을 구속한 것은 규탄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영남위원회 사건 선고에 대한 법원 앞 항의집회

· 때: 1월 19일(화) 낮 12시-2시
· 곳: 서초동 법원 정문 앞(옛 삼풍백화점 쪽은 법원 동문입)
· 주최: 부산울산지역 용공조작사건 전국대책위원회 등

"국방부 진상조사 의지없다"

천주교인권위, 김중위 조사단 탈퇴

[김훈 중위 사망 사건관련 특별합동조사단] (단장 양인목 중령, 이하 특조단)에 참여했던 천주교인권위원회측 자문위원 10명이 지난 15일 전격 탈퇴를 선언했다.

18일 천주교인권위원회측은 "국방부 특조단은 제조사 초기부터 실질적인 조사활동은 전개하지 않고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채 수사에 임하는 기만적인 행태로 일관, 김훈 중위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현 상태에서 특조단에 참여하는 것은 특조단 활동에 들러리를 서는 것밖에 안 된다"고 탈퇴이유를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측이 특조단 탈퇴를 선언한 구체적 이유는 우선, 국방부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점이다. 특조단 구성 당시 양인목 단장은 '모든 수사기록의 열람과 의혹지점에 대한 투명한 답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특조단은 특정 자문위원에게만 자료를 공개하고 천주교인권위원회측에는 이미 폐기된 1,2차 조사 자료만 공개함으로써 천주교인권위원회측 자문위원들의 사건 재조사할 의도적으로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천주교인권위는 "국방부에 진실규명의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14일 자문위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사건 재현'을 국방부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노여수(재미법의학자) 교수 등 천주교인권위원회측 자문위원에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끝으로, 특조단이 수사주체로서의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천주교인권위원회측은 주장했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조단이 '자살 잠정결론'을 특정언론에 흘리는가하면, 15일 개최된 토론회에는 토론회 8명 중 7명을 국방부 측 자문위원으로 배치해 공정한 토론회 불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천주교인권위는 사태의 책임을 물어 천용택 국방장관의 해임과 양인목 단장의 처벌을 요구했으며, 이 사건을 국회 국정조사위에서 책임지고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 공판 안내

- ▶ 1월 19일 (화)
 - 김중박(국보법 찬양·교무등, 안민청 사건)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 전상봉 외 2(국보법 찬양·교무등, 민예청 사건)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속행
 - 서준식(국보법 등) 오후 3시, 서울지법 서부지원 407호, 속행
- ▶ 1월 20일 (수)
 - 김경운(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박효근(국보법 찬양·교무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 ▶ 21, 22일자 공판은 내일 소개

주/간/인/권/호/름

(99년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

◆ 1월 11일 (월)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간강사 신원조회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혀/국제연세스타, 유엔 어린이권리헌장에 규정돼 있는 소년병의 최저 징집나이를 현재의 15살에서 18살로 올릴 것 촉구/유종근 전북지사,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의사 밝혀/국민회의, 노사정위원회 위상 강화 위해 특별법 제정 추진키로/인천시 송현동 재개발지역, 청송건설 소속 용역반원 부녀자 폭행하며 강제철거 시도

◆ 1월 12일 (화)
장기수 강용주 씨, "준법서약 근거 밝혀라"는 내용으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 제기/유전자 변형공이 포함된 수입콩 3만여톤이 시중에 풀려나간 것으로 드러나/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서 판사, 민주노총 단병호 부위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선고/〈워싱턴 포스트〉보도, 아이슬란드 정부가 전체 인구 25만명에 대한 유전정보 작성작업 개시해 논란/노점상 8백여 명, 분당 서현역 앞에서 집회 열고 '노점 단합 중단' 촉구

◆ 1월 13일 (수)
80년대 고문후유증으로 정신질환 앓고 있는 이을호 씨를 돕기 위해 김근태, 유시춘 씨등 '이을호를 생각하는 작은 모임' 결성

◆ 1월 14일 (목)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 "일괄사표를 받은 뒤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의 해고도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자에 승소 판결 내려/부산시 섬터에 보호중인 노숙자가 모두 68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전북지역 시민단체들, 기자회견 갖고 동암재활원 인권유린 사실 발표

◆ 1월 15일 (금)
민변 등 4개 인권단체,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탈북자들이 남한에 도착한 뒤 안기부에 의해 당한 고문, 모욕 등 인권유린 사실 폭로/참여연대 등 5개 사회단체, 경찰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인정해 징역 3-15년의 중형 선고/국민승리21 등 국내 사회단체 회원들, 영국 대사관 앞에서 "피노체트 기소 촉구" 시위

◆ 1월 17일 (일)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1단독 박동영 판사, 안방출입금지 명령 무시한 50대 남편에 대해 한달간의 구치소 유치 결정/정부, 탈북자에 대한 제한적 의무고용제 도입 추진키로/정부, 올 1분기중 35만명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키로/국립소록도병원, 정부의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의료인력 부족 몸살/한국교육개발원 박경숙 박사팀, 전국 57개 초·중·고교생 6893명과 교사 573명, 학부모 5485명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학생의 24.2%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권 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얼마전 여고생을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20대 남자가 피해자 부모로부터 "딸이 자란 뒤 결혼하라"는 합의를 받아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7세 여학생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끌고가 강간한 가해자는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위의 합의를 조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지겠다'는 논리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위의 판결은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관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주 4.3 항쟁 당시 이승만 정권을 대변하며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서북청년단원이 지역 여성을 성폭행하고 결혼한 사례가 떠오른다. 권력을 이용하여 강간을 서슴치 않았던 남성과 강제 결혼하여 평생 불행한 삶을 이어온 여성들...

결혼은 면죄부일 수 없다

성폭력은 '폭력'이다. 그것은 성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한다는 논리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다. 강간범이 피해자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빌어 책임진다는 것에 찬성한 판결은, 성폭력 피해를 순결의 상실로, 순결의 상실을 곧 여성의 가치 상실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강간을 저질렀다해도 결혼으로 '책임'지면 언제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가 피해자를 '책임'진다는 것의 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처벌을 달게 받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이다.

그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책임'지는 것이 될 수 없다. 성폭력 범죄의 처리 과정은 철저히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때까지 주

변의 인식 변화와 사회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여고 2년생이 겪었던 정신적, 육체적 피해와 충격을 뒤로 한채 강간범이 '그녀가 자란 뒤 결혼해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무마해 버리는 것은 가해자 중심의 사고이다.

앞으로 그녀의 삶은 어찌 될 것인가? 남성중심적 성윤리에 익숙한 어른들의 일방적 합의가 그녀의 삶을 짓밟아 놓은 것은 아닌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저려온다.

즉속을 강요하는 가부장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

남성중심적 성윤리에 익숙한 어른들이 다시한번 그녀의 삶을 짓밟은 것은 아닌가

같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사회적 출신과 지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1, 2조는 '차별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도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라는 말이 따로 생길 정도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우리 사회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러울 때도 있다. 특히 남성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성윤리가 여성에게는 일생을 좌우하는 족쇄로 작용하곤 한다. 성윤리가 남녀에게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제는 정숙한 집단과 이에 결속사유(?)를 갖는 '전환' 집단으로 여성을 이분화시키는데 있

다.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의 일차적 존재의미를 남편 집안의 정당한 계승자를 낳는 역할에서 찾는다. 따라서 여성의 정절은 존재 의미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여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그 여자의 능력이나, 인격, 품위 등에 우선한다. 아니 생명보다 우선하여 평가될 때도 많다.

성폭행당한 여학생이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을 두고 순결을 위해 목숨을 버린 고귀한 희생 운운하던 방송의 보도는 이를 대변한다. (만약 같은 경우 남학생이 자살했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을까?) 성에 대한 이중성은 여학생에게만 순결교육과 성교육이 같은 의미로 적용되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성은 성차별의 지렛대이다.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규범이 성(Sexuality)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가부장제는 전통과 관행이라는 껍데기를 번갈아 쓰면서 끊임없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합법화, 구조화시킨다. 1년에 3만명이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여아라는 이유로 살해되고 있다. 남성임금의 60%도 안되는 여성임금, 정리해고 1순위가 여성인 것이 당연한 현실. '170cm 이상, 몸무게 50kg 이하'라는 노예시장에나 있을 법한 채용기준을 둔 기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1999년에서야 의결되었다는 것은 차별이 얼마나 뿌리깊은 것인지를 보여준다.

남녀에 대한 차별은 성별 구분 그 자체에 이미 녹아있고, 성별 구분을 조지 원리로 삼은 가족제도, 노동시장, 정치, 경제, 지식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지지받고 있다.

이 모든 것과 부딪혀서 여성이 세상의 주체로 선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새해에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가 군대 경력처럼 '가산점'주며 인정되는 나날 이기를 감히 소망해본다. 물론 군대와는 비교하기도 어려운 가치있는 경력이지만 말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1월 20일 (수)

제 129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전화 엿듣는 게 경찰의 일?

민에청 사무실, 9개월간 장기도청

경찰이 한 청년단체 사무실을 장기도청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는 전상봉(서청협 의장) 씨, 감효식(사무국장) 씨에 대한 구형공판이 19일 서울지법 311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민에청 사무실에 대해 오랜 기간 전화 도청을 해 왔음을 증인 심문 도중 무심결에 드러냈다. 증인으로 출두한 홍길표(민에청 회원) 씨의 조서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다루던 중 하인수 담당검사는 "증거를 대라"는 홍 씨의 요구에 "전화 도청 친구에게 하는 말을 들였다"고 답했던 것이다.

이에 홍 씨와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은 "불법도청이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고, 김 검사는 "영장이 발부된 합법적인 감청"이라고 주장했다. 방청객의 반발이 누그러들지 않자 "영장을 보여줄 수도 있다"며 검사는 말머리를 돌렸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 정작 영장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실에 찾아가 민에청 관계자들에게 검사는 "영장이 현재 홍제동 대공분실에 있어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해 불법도청에 대한 의혹을 부채질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홍길표 씨, 이수정 씨, 서효정 씨 등 민에청 회원 6명은 "민에청은 통일을 염원하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대중조직"임을 강조하며 민에청을 이적단체로 규정짓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전상봉 씨와 감효식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민에청이 표방하는 자주·민주·통일이 북의 지령을 받았다는 검

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전 씨와 감 씨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2월 2일 서울지법 311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

영남위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연합 등 재야 및 사회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낮 서초동 법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

노수희 전국연합 상임의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현재의 김대중 정부는 인권대통령이 아닌 인권탄압 대통령"이라고 못박고 "확증없는 반국가단체 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가족대표로 나온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의 부친은 "자녀 이름 바로 이 자리에서 아들의 무죄를 눈물로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며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무죄석방의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말해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강령도 규약도 없는 반국가단체를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는가? 조작 가능한 자료와 불법 도·감청 내용을 증거물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가 도

독놈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법원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재판진행으로 반국가단체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치고 노수희 직무대행과 진관섭 등 각 단체 대표들은 대법원장 앞으로 영남위 1심 선고결과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안민청 항소심서도 '이적' 판결

김종박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남용사건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안민청(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김종박(안민청)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합의5부)는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안민청의 규약과 조직노선을 문제삼은 경찰에 의해 회원 8명과 함께 구속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씨 등은 이적단체 구성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당시 김 씨를 제외한 8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날 재판으로 안민청 회원들은 모두 석방됐으나 이적단체로 규정됨에 따라 앞으로의 활동이 불투명해졌다.

.....주요 공판 안내

- ▶ 1월 21일 (목)
 - 공승현(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 5부, 속령
 - 김철민(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3부, 선고
- ▶ 1월 22일 (금)
 - 안중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신건

<독자투고>

대학사회에 '언론의 자유'는 과연 있는가

서울시립대 언론탄압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지난 해 11월 30일 서울시립대신문이 제작중지됐고, 12월 1일에는 신문사 편집국장과 업무국장이 해임됐다. 이 해임 문건에는 '동아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김진현 총장의 친필 싸인이 들어 있다. 두 학생기자는 학교당국의 일방적인 간사제 도입, 공간이동에 대해 재논의하자고 요구했을 뿐인데도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학교측의 언론탄압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 95년 동아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김진현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총장은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취임식이 1면 TOP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신문을 배포중지시켰다. 당시 총장은 "총장직을 관두면 관렸지 절대 배포못한다"라고 말했다. 98년 3월, 학교는 "전농동 철거민 연행, 전교조 위원장 인터뷰 이런 기사를 빼고 총장 입학식사, 졸업식사 전문을 실어라"고 강요했다. 언론인 출신 총장이 대학언론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권위적인 태도를 취했다. 98년 상반기에 학교당국은 언론 3사 예산의 55%와 학생복지비를 전액삭감함으로써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과 학생자치권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했다. 두 명의 학생기자에 대한 해임조치는 상반기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학언론 탄압은 서울시립대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학에서 언론의 자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학사행정에 대해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양심 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광고를 게재하고자 했던 조선대신문사의 발행중지, 98년 1학기 개강호부터 신문발행이 중지되고 급기야 신문사가 폐쇄되고 편집국장이 무기정학 당한 인제대 신문사, 대학당국으로부터 기 자선발권, 편집권, 재정권 등이 좌지우지되면서 6년간 신문발행이 중단되고 있는 세종대 학보사, 최근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사실을 실었다는 이유

만으로 배포중지를 받은 성대신문 등 전국 곳곳에서 대학언론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학생자치권 탄압으로 이어져 대학 언론에 대한 탄압은 96년 연대 사태 이후 본격화되었고, 당시 시립대 등 전국에서 30여개 대학 신문이 한총련 관련기사로 인해 제작중지, 배포중지 되었다. 또 교육부는 97년 하반기에 '98학년도 면학 질서 확립을 위한 학생지도 철지'라는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 이 문건에는 대학 언론매체의 지도 강화뿐만 아니라 교내의 불법·불건전 학생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금지, 한총련 탈퇴지도 등 학생자치권과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에서는 패차기가, 경희대에서는 교내 음주가 금지되었다. 이는 대학 언론에 대한 탄압이 학생자치권,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과 결코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님을 입증해주는 사례다.

각 대학에서 대학언론과 학생자치권,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는 이유는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비롯된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 마디로 대학 교육에도 '시장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

다는 것이고 교육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축소된 예산을 가지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대학만을 집중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각 학교에, 더 근본적으로 학생들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다. 한정된 예산을 획득하기 위한 대학간의 경쟁에서 학생들의 진정한 교육여건개선의 요구는 묵살되고 있다. 오히려 교육여건의 전반적인 악화와 학생복지 관련예산의 대폭 삭감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8년 상반기에 서울대, 외대, 서울시립대 등을 비롯한 각 대학에서는 학생자주화투쟁을 벌였다.

정부와 학교측은 대학언론을 탄압함으로써 학생들의 불만을 통제하려 한다. 뿐만아니라 김대중정부는 최근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지난 1월 1일 고대 신임 총학생회장 등 5명의 7기 한총련대의원들이 불법연행되었다. 정부가 한총련을 탄압하는 것은 이들이 이적단체여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해 투쟁하는 것을 억누르고 나아가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시립대 학생들은 대학 언론 탄압에 맞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학내에서 대학 언론의 자유와 학생자치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뿐만 아니라 타 대학과 연대하여 정부와 학교당국의 학생운동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다.

▶...한 권의 책 「탈북자의 삶 - 문제와 대책」

이영선 · 전우택 편/도서출판 오름/139쪽/6천원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인권실상 가운데 일부가 지난 1월 15일 인권단체들에 의해 폭로돼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도 뚜렷이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6년 발행됐던 「탈북자의 삶」은 탈북자 인권문제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제의식을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90년 이후 남한으로 들어 온 21명의 탈북자와의 면담을 통해 그들이 남한 땅에서 겪은 어려움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등을 나름의 시각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탈북자 문제는 통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미리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1월 21일 (목)

제 129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젯더미 꽃마을 복구지원 안돼
"무허가" 이유...1백여 세대 앞날 캄캄

폭격을 맞은 듯 마을은 젯더미로 변해버렸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주민들은 불타버린 잔해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수심에 깊이 잠겼다.

19일 새벽 2시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곳 비닐하우스 27개 동이 전소되고, 비닐하우스내에서 살던 1백17가구 3백67명이 오갈 데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공공근로나 일용직노동 등에 종사하는 영세민들이기에 재해복구는 염두조차 내지 못한 채, 주민들은 "외부의 지원, 특히 구청의 지원"을 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할 송파구청의 입장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 지역이 불법 무허가 주거지이기 때문에 복구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파구청 담당 공무원은 "3일 간 구청에서 지원을 나가겠지만, 그 후부터는 주민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벽 잠자리에서 느닷없이 화를 입은 탓에 "종이 한 장 들고 나오지 못했다"는 주민들은 현재 화재피해를 입지 않은 10여 동 이웃주민 집과 마을회관, 친척집 등에 분산 숙박하고 있다. 한 주민은 "울거릴 만한 곳이 있다면 이런 곳에서 살았겠냐"며 "겨울철이라 일거리도 없는 데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화재 위험 안고 사는 영세민들 젯더미로 변한 화훼마을은 지난 86년부터 영세민들의 거주가 시작된 지역이다. 당초 꽃을 재배하기 위한 비닐하우스단지였지만, 토양이 맞지 않아 주거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초기

50여 세대에 불과했던 주민의 규모도 현재는 2백17세대에 이르고 있다.

화훼마을은 3년 전에도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이번 화재의 원인 역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무판자로 지붕을 엮은 비닐하우스 건물이기엔 빗물이 자주 새고, 따라서 주민들은 항상 전기누전과 그에 따른 화재의 위험 속에 살아온 것이다.

주민들은 관할 관청이 이곳을 정식 주거지역으로 인정해줬다면 이번과 같은 재해는 예방 또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무허가 주거지라는 이유로 주거환경에 대한 당국의 지원과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커다란 재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마을 대표 서명택 씨는 "수돗물이라도 공급됐다면 이렇게까지 불타버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주소지 인정이 숙원

한편, 화훼마을 주민들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당국이 이곳을 정식 주거지역으로 인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정식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겪어온 피해가 적지 않았던 탓이다. 화훼마을엔 주소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마다 자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자녀들은 주민등록지에 따라 먼 곳에 학교를 배정받고 장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또 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는데, 철분이 다량 포함된 지하수다 보니 손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등 늘 피부병을 안고 살아야 한다. 결국 식수는 인근 약수터에서 길어다 쓰거나 천천히 수

돗물을 얻어다 끓여 먹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의 숙원은 주소지를 부여받는 것이다. 그러나, 관할 관청은 "원예용으로 지어진 비닐하우스는 주거지역으로 인정하기에 부적합하며, 불법점유지를 주거지역으로 인정할 경우,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로 화훼마을을 정식 주거지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근 문정동 개미마을 주민 윤복영(주소지확정기운동본부 본부장) 씨는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주민들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며 "어서 이 지역을 재해구역으로 지정하고 복구작업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즐기는 '이적단체' 판결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지

19일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진보민청청년연합(진보민청)도 항소심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본지 1월 20일자 참조).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린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합의 4부)는 김봉태 의장과 김경윤 사무처장에게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진보민청이 추구하는 이념인 노동해방 인간해방은 맑스주의에 입각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적단체" 규정을 내리고, 김봉태 의장과 김경윤 사무처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노동현장, 쇠파이프 용역 다시 등장

현대석유화학, 노조대의원 농성 방해

쇠파이프를 든 용역이 노동현장에 또 다시 출현했다.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현대석유화학 관리직 직원과 용역 등 12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노조 사무실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사무실에 있던 노조대의원 최병욱(40세, 현장동지회 대표)씨 등 조합원들을 강제로 끌어들였다.

현대석유화학은 지난해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명분 하에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에게 퇴직을 강요해왔고 이를 거부하는 7명의 노동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최 씨 등 노조대의원 및 조합원들은 "현장동지회"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고용안정 보장과 노조 민주화 등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18일 회사측이 "사조직을 결성해 사내 기초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최 씨에게 2개월 정지 처분을 내리자 최 씨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도 명시되지 않은 부당징계"라며 19일 노조 사무실에서 농성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한편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는 "현대석유화학 쇠파이프 난동은 충남서부지역을 포함한 모든 민주노조에 대한 자본의 선전포고"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응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IMF여파, 성폭력상담 증가

취업·고용 불미 성폭력 빈발

1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성폭력 상담건수가 97년도의 2천2백95건보다 28.5% 증가한 2천9백48건이 접수됐고, 총 상담횟수도 97년 3천4백24회보다 25.1% 증가한 4천2백85회를 기록하는 등 성폭력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는 "IMF의 여파로 고용 불안이 심해지고 특히 여성에 대한

감염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업무상 접대나 회식을 빌미로 한 부당한 성취 접근과 요구가 빈번했다"고 밝혔다. 또 취업과 고용을 미끼로 한 성적 폭행과 희롱도 증가했다고 상담소측은 밝혔다. 지난 한해 직장내 성폭력 상담은 모두 3백4건으로 97년 2백16건에 비해 대폭 늘어났으며, 언어추행 41건의 가해자는 대부분 직장상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단능력과 방어능력이 부족한 하청전 유아에 대한 성추행 문제도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소측은 특히 유아 성추행사건의 경우, "유아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리되는 사례가 많아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폭행 피해자 가운데 유아 피해자는 9.4%를 차지했으며, 청소년과 어린이 피해자도 각각 21.9%, 1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성교육과 보호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스토킹이 사회문제로 대두되

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상담이 증가했으며, 신앙을 빙자한 성직자들의 성추행 사건도 심각했다고 상담소측은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성폭력 상담이 늘어난 데 대해 상담소측은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이 98년 1월부터 시행된 점과 우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발족

정정보도 청구, 소송등 대리

잘못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법률지원본부가 만들어졌다.

지난 18일 외신기자클럽에서 발족식을 가진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위촉했으며, 상담창구를 통해 피해를 접수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본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구제절차를 알려주거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할 예정이다.

·상담창구: 전화 02-732-7319
팩스 02-732-7076

만화사랑방

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1월 22일 (금)

제 129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내란·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전두환·노태우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을까?

현행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대상 범죄로서 국가보안법 외에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및 음모죄, 군형법상 반란죄와 반란에비죄, 음모죄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두환 씨 등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 씨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은 모두 보안관찰을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21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인 정화려 씨가 법무부장관 앞으로 내란학살 범죄자들이 보안관찰 처분을 받지 않는 까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정 씨는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5·18 사건 관련 범죄자들 14명은 모두 보안관찰 처분을 받지 않고 있다"며 "전두환, 노태우 등 범죄자들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킨 후 면제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의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안관찰법 제11조와 그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보안관찰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거가 일정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생업이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정 씨가 자료공개를 요청한 대상은 전·노 씨 외에 정호용, 황영시, 차규현,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최세창, 장세동, 신

유희, 박종규 씨 등이다.

정 씨는 또 "제14대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4년 현재 보안관찰 대상자가 모두 6천1백89명이고, 이는 해방 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중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거의 망라되어 있는 셈"이라며, 해방 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보안관찰대상자 중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받은 사람의 명단과 사유에 관련된 자료의 공개도 청구했다.

9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구국전위 사건)로 구속됐던 정 씨는 지난해 8월 15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출소와 함께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지정된 정 씨에 대해, 검찰은 최근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과학기술 인간파괴 막자'

시민단체, 생명공학법 개정 촉구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간복제'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무제한적 발전에 따른 인간파괴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생명안전·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국회 전자공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인간

복제를 목적으로 한 연구만을 금지대상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치료 목적의 인간복제 연구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조작된 유전자가 다음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연구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지된 연구개발을 할 경우, 신체형 등의 처벌조항이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환경연은 또 '생명공학 안전·윤리 심의기구'의 설치문제와 관련, "과학기술부 산하에 심의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생명안전·윤리의 전반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심의기구는 대통령 산하 또는 국회 산하에 설치하고 그 구성에 일반시민의 참여가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공학의 문제는 과학기술부만이 아니라 교육부·농림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형태로 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생명공학의 발전과 관련, 유네스코는 97년 11월 '인간계놈과 인권에 대한 보편선언'을 채택해 과학기술의 무제한적 발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유럽연합도 새로운 생물학적·의학적 기술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96년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또 97년에 미래의 인간을 변화시킬 어떠한 유전자 실험도 금지하는 '생물윤리강령'을 마련하기도 했다.

◎ 판매합니다 ◎

「98년 국정감사자료집」

『한국감옥의 현실』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정보자료실
(02-741-5363 / 담당: 엄주현)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 당국 의지 필수

공안당국의 불법 도·감청 행위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에서 한총련 수배자의 여자친구 자취방에 설치된 도청장치가 발견된 데 이어, 19일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구속자들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검사도 도청 사실을 영검결에 털어 놓기도 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0일자). 얼마 전 1심 재판이 끝난 영남위월회 사건에서도 경찰의 감청 자료가 주요 증거물로 제출된 바 있다.

“전화감 수시로 떨어져”

이같은 도청행위에 대해 당국은 “영장을 발부박은 합법적 감청” 또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 자취방’ 사건에서 드러나듯, 당국의 불법도청은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얼마 전 주요 인사와 사회단체에 대한 경찰의 사찰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사찰의 주요 수단으로 불법도청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사무실 전화의 감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비밀비밀하다”며 “도청을 당하는 게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단체 관계자도 “도청에 대한 의심은 있지만 물증이 없을 뿐”이라며 “단체 내부의 이야기나 중요한 이야기는 전화로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도청에 대한 의심과 공포는 이미 사회단체들 내에선 만성화된 모습이다.

제도적 방지책 미흡

그러나 이같은 도청행위를 근절하기엔 제도적 허점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도·감청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개정안 역시 불법감청을 제한하기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문제가 되

어 온 긴급감청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감청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등 감청납용을 방지할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원회에 계류중이다.

발각해도 수사 흐지부치

또한 도청 근절을 위한 당국의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도청행위가 발각되더라도 그 관련자들이 색출돼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자체가 흐지부치 종결되기 마련인 것이다.

지난 95년 9월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의 옥상 단자에서는 1층 창고로 연

결된 도청기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등 부산을 떨고,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되기도 했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다.

또 96년 8월 대전 범민련 사무실 전화 단자함에서도 도청장치로 추정되는 부착물이 발견됐다. 이에 범민련 관계자들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이 사건 역시 슬그머니 종결됐다.

한편 수원 도청장치 발견사건과 관련,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동부연합 회원들은 20일부터 연일 경기도경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동부연합은 “이번 사건은 아직도 평범한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받고 있다는 불안감을 다시 한 번 불러 일으키는 사건”이라며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경찰의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노동자 "함께 실 권리 찾기"

백화점 주 1일 정기휴점제 요구

유통업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다.

전국상업노동조합연맹 등 유통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주휴제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형근, 조성희 등)」는 오는 25일 서울 종로 공원에서 “백화점 주 1회 휴점제 쟁취를 위한 전국 유통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유통업체 노동자의 공동 휴식권을 요구하기로 했다.

유통업체들은 지난 97년부터 경제위기를 이유로 주 1회 휴점제를 폐지하고 순번제로 휴무(대체휴무)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대체휴무가 ‘장시간 근무’ 등 각종 피해를 낳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기본적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유통업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공대위의 김형근 공동대표(전국상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는 “업체측이 ‘연중무휴제를 하더라도 대체휴무를 철저히 해 근무시간에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연중무휴제를 시행하게 되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리휴가, 월차 등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근무일수가 대폭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대체휴무로 운영되면서 산술적으로 기존인원의 20%가 줄게 돼 노동강도가 이전보다 강화됐다”며 “연속성을 띤 업무나 급작스런 업무와 관련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쉴 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대체휴무 제도는 유통업체의 특성상 인간관계를 왜소화시키는 폐해도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공대위측은 “유통업체의 특성상 노동자들이 쉬는 날은 평일일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가족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결국 직장 동료들과의 친목관계가 거의 유일한 인간관계인데, 연중무휴제 실시로 인해 그러한 관계마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주 1회 휴무제’를 요구하며 구성된 공대위에는 현대백화점, 한신코아 등 전국상업노동조합연맹 소속 20여 개 사업장 노조와 롯데쇼핑노동조합, 신세계근로자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1월 23일 (토)

제 129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교도소와 관련된 내용의 신문기사와 책이 재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무부가 주장해 온 열린 교정과 상반되는 사실이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장전섭(28) 씨는 이번 주 내내 너털너털한 신문을 받아볼 수밖에 없었다. 신문에 실린 교도소 관련 기사가 전부 삭제되었기 때문이다(한겨레신문은 최근 교도소 관련 특집기사를 3일간 연재했다). 담당직원에게 항의를 했지만 “사상서적은 허락해도 정역살이에 대한 언급은 인정할 수 없다”란 대답만 되돌아왔고 장 씨는 밝혔으며, “지난 2년 동안 교도소와 관련된 기사나 책을 받아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구치소의 재소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구치소측은 교도소 관련 신문기사를 삭제한 데 이어, 한국 감옥의 실태를 분석한 『한국감옥의 현실』이란 책의 반입도 금지했다. 교도소측은 “소장을 비롯한 교도관 회의에서 책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재소자 교화상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학과 양홍길 주임은 “의설, 과도한 폭력의 묘사 등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제한하는 책을 제외하고는 모든 책의 반입을 허락하고 있다. 모 신문에 기재된 기사와 책도 문제없이 반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천, 의정부 교도소에서 신문기사와 책이 금지된 사실이 확인되자 “기사 및 도서의 금지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정시설마다 소장의 권한아래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법무부 보안2과 임승지 계장도 “신문 기사 내용이 사실보다 추측이 많고 교정시설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많아 삭제되었을 뿐, 원칙적으로 교도소와 관련된 기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운 변호사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일정한 통제를 인정한다고 해도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차단하는 것은 알 권리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교도소가 열린 행정을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닫힌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통령 · 민가협 오찬

양심수 가족 등 20여 명 참석

민가협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난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김정숙)는 23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을 만나 오찬을 갖고 ▲양심수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국가보안법 등 비민주적 법률 개정 ▲과거 인권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등 전반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는 김 대통령의 초청에 의해 마련됐는데, 김 대통령은 야당총재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면 민가협 등과 만나 함께 인권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23일 오찬에는 김정숙 상임대표와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 윤해경 장기수가족협의회 회장, 남규선 총무 등

민가협 관계자들과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구금중인 강용주(안동교도소·14년 구금·구미유학생 사건), 조상록(안동교도소·21년 구금·일본관련), 정병기(경주교도소·3년 구금·4기 한총련의장) 씨의 가족 등 2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한편 민가협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예기를 나눠줘야 알겠지만 일단 여러 인권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이 민간 인권단체를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와 동정

- 진보정당 창당제안 원탁회의
 - 때: 1월 25일(월) 오전 9시-12시
 - 곳: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참가비: 20,000원
 - 문의: 02-369-8822
- '99 겨울 대학언론 강좌
 - 때: 1월 25일(월)-29일(금)
 - 곳: 민연연 교육관
 - 대상: 대학언론 일꾼/언론진출 희망자/단체 홍보담당자
 - 주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실업극복 이산운동 본부 발족식 및 기자회견
 - 기자회견: 1월 26일(화) 오전 10시 / 익산시청 기자회견
 - 발족식: 1월 26일(화) 오후 6시 30분 / 북대원 예식장
 - 문의: 익산 노동자의 집 (0653-852-6949)
- 청소년 · 대학생 통일교육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워크숍
 - 때: 1월 29일(금) 오후 6시 30분
 - 곳: 기독교연합회관 9층 902호
 - 참가비: 3,000원
 - 주최: 청소년 · 대학생 통일교육문화재단 설립 기해단

준법서약해도 '재범우려' 감시 청구

검찰, 정화려 씨 보안관찰처분 청구

"전두환·노태우 등 내란학살 범죄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한 근거가 무엇이나"며 21일 관련자료의 공개를 법무부에 청구한 정화려 씨(관련기사 본지 1월 22일자 1면). 그는 지난해 12월 말 자신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이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정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김오수 검사는 "피청구자(정화려)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안재구, 류라진이 현재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에 복역중"이고 "지금도(정화려 씨) 안재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는 희한한 논리를 들이댔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출소 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만날 기회조차 없는 과거 사건의 공범들을 왜 거론하는지, 무슨 근거로 안재구 씨를 따르고 있다고 단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곧바로 법무부에 반박의견서를 보냈다.

법무부 논리 스스로 부정

정 씨에 대해 보안관찰을 청구한 김오수 검사의 논리는 지난해 8월 그를 석방한 법무부의 논리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방조죄 등)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정 씨는 지난해 8월 안동교도소에서 준법서약서를 제출했다. 서약서의 요지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겠다"는 것. 그리고 법무부는 정 씨의

준법서약을 근거로 8월 15일 그를 가석방했다.

준법서약과 관련 박상천 법무부장은 "석방된 후에 국법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준법서약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과감하게 석방할 생각"(월간(말) 98년 8월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의 언급에 따르면, 정 씨는 죄어도 준법서약 이전과 이후, 두 차례의 준법서약 확인 및 심사과정을 통과한 셈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검찰은 다시 정 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정 씨로서는 아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 씨는 "김 검사로부터 '과거의 세계관과 현재의 입장'에 관한 글을 두 차례 요청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의 요청을 거절한 검찰의 답변이 바로 보안관찰처분 청구였던 것이다.

정 씨는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들, 심지어 대통령조차 인권개선의 획기적 조치라고 자화자찬했던 '준법서약'제도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보안관찰 처분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차라리 죽고 싶은 때도 있었다"

삼미특수강 해고자 가시밭길 투쟁 2년

삼미특수강 해고자들은 어느덧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투쟁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97년 2월 날벼락같은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 벌써 2년 가까이 투쟁의 행군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7년 3월부터 7개월 간 지속된 서울 상경투쟁, 그해 10월부터 20일 간 진행된 44명의 집단이사단식투쟁, 가족협의회 삼미본관 점거투쟁, 그리고 올해 서울역 집단노숙투쟁 등 삼미 해고자들이 걸어온 길은 말 그대로 가시밭길이었다.

그같은 투쟁의 과정에 중앙노동위에서 "해고무효" 결정이 내려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중노위 판결을 존중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하지만 포철측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그럴수록 노동자들은 더욱 지쳐 갈 수밖에 없었다. 삼미특수강 고용특위 위원장 김현준 씨는 "덜듯 말듯 안될 땐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2년 가까운 투쟁 속에 해고자들의 가정이 겪은 고통 또한 말로 다할 수 없다. 직접적인 생계의 위협은 물론, 아이들의 학원수업이 중단되는 등 가족들의 고통도 가중됐다.

중간에 이탈한 해고자도 있었지만, 1백50여 명의 대오가 거의 고스란히 1년 가까이 버티낸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정년퇴직을 앞두고도 투쟁에 나선 나이 드신 형님들, 동료들이야말로 내가 버틸 수 있는 동력이었다"고 회고했다. 해고자 신동국 씨는 "노동단체와 사회단체들의 지원도 우리를 지탱해준 기둥이었다"고 말했다.

이제 법원에서도 삼미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포철측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해고자들은 "정의가 살아있는 한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말한다.

법원 "삼미특수강 해고 부당"

포철측 대법에 상고키로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이 법원에서 원지복직 판결을 받아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특별9부(재판장 조종환 부장판사)는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참원특수강(포철 계열사)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98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법원에서도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해고자들의 복직전망은 한결 밝아지게 됐다. 그러나, 포항제철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해고자들이 복직되기까지는 한 번의 난관이 더 남게 됐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삼미특수강 해고자들은 "판사의 용기있는 결정이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1월 26일(화)
제 129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지난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민가협 의장단 및 회원 20명과 오찬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국가인권위 설립 등 각종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민가협은 이번 간담회에서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의문사문제 등 과거청산 △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양심수 군문제 해결 등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고, 이 가운데 김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국가인권위 설치 문제였다.

민가협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증가와 정부 산하 단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민간에서 국가기관으로 만들 것을 계속 요청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민간단체와 국민회의측은 독립된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을 요구한 반면, 법무부는 특수법인 형태를 고집해왔다. 민가협측은 "대통령이 국가인권위 설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며 "민간단체들이 좀 더 적극성을 띤다면 독립된 위상의 국가인권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보법 종전 입장 되풀이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최근 유엔에서 국보법 제7조가 인권조약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덜지 않은 시기에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며 법무부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보법 처리의 형태와 그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

급은 피했다. 이와 관련 민가협측은 "대통령에게 '대체입법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어떻게든 국가보안법 문제를 정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삼 확인했다"고 말했다.

준법서약 철회의사 없는듯

양심수 문제에 있어서, 김 대통령은 "아직 양심수가 많이 못 나왔다"고 말하며 양심수 석방의 의지가 있다는 점만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가협은 비전향 초장기수(29년 이상 구금자)와 강용주, 조상록 씨등 장기 구금 양심수들을 포함해 양심수 전원의 석방을 요청했으나, 김 대통령은 "3·1절에 대서면을 하고 싶다"는 언급 외에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지난해 8·15 때 다 해결하고 싶어 고심 끝에 만든 건데...여기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는 3·1절 서면에서도 준법서약서를 석방 기준으로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현 정부에서도 양심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사실상 사상전향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민가협측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은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가협측은 "이날 모임에 참석한 양심수 가족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돌아왔지만, 준법서약제로 인해 다수가 석방되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과거청산 인권위에서"

그밖에 수배자 및 미사면복권자와 관련, 김 대통령은 "복권되지 못한 사람은 다 복권시키고 도피중인 사람도 다 해방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의문사 및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민가협측은 전했다.

"비전향장기수 준법서약 생략"

7년 이상 구금자 모두 24명

25일 정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비전향 장기수'에 한해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고 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방침에 해당하는 국내 비전향 장기수는 우용각(71·남파사건·41년 구금) 씨 등 29년 이상 구금중인 초장기수 17명과 손성모(남파사건·17년 구금) 신광수(남파사건·14년 구금) 씨등 19명이며,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는 장기수로는 조상록(일본관련·21년 구금), 강용주(구미유학생 사건·14년 구금), 최호경, 장창호, 조덕원(이상 남한조선노동당사건·7년 구금) 씨 등이 있다.

민가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양심수는 모두 301명이다.

.....주요 공판 안내

- ▶ 1월 26일(화)
 - 정태홍(국보법 잠입·탈출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진
 - 김미자(집시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 ▶ 1월 27일(수)
 - 이장희 외1(국보법) 오후 4시, 서울고법 524호, 4단독, 속행

백화점 노동자 도심 시위

주 1회 휴점 · 공동휴식권 보장 촉구

'백화점 주 1회 휴점제 쟁취를 위한 전국유통노동자 결의대회'가 25일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대형유통업체 노동자 5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종로공원에서 치러졌다.

김형근 전국상업연맹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연중무휴제는 대형유통업체의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과당경쟁이 유통업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 1회 휴점제의 실시"를 촉구했다. 이어 신홍철 신세계근로자협의회 대표는 "서울시 등이 주 1회 휴점제를 위한 조정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인수 금강개발(현대백화점)노조 위원장은 "연중무휴제가 철폐되지 않을 경우 영입거부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향후 대형 3사(롯데, 현대, 신세계)를 중심으로 공동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난 후 '주휴제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김형근 등) 관계자 등 30여 명은 백화점협의회(상공회의소 건물 내)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백화점협의회가 주 1회 휴점과 과당경쟁 근절을 위해 공대위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백화점협의회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교보문고, 종로서적 등 대형서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함께 참여해 공동휴식권의 보장을 촉구했다. 서비스유통업체 노동자들이 공동휴식권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꽃마울 "재해구역 선포" 요구

송파구청 "법적 지원 불가" 방치

지난 19일 대형화재로 1백17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한 서울시 송파구 잠지동 비닐하우스 주거지역에 1주일째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1일자).

이재민들은 관할 송파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재해지역 원상 복구 △수도물 공급 및 소화전 설치 △한시적 생계보조 등을 요구했으나, 송파구청측은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법적 지원이 불가능하며 예산도 없다"는 이유로 복구지원을 거부했다. 구청측은 "대신 민간단체에게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주민들의 나머지 요구사항도 모두 거부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 지역을 재해구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석촌호수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천막 등에 분산 숙박중인 주민들에겐 인근 지역사회 단체 등에서 의류와 음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자용 숙옷 등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곧 개학할 학생들의 공부방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 지역사회단체 회원은 "법으로 따지면 할 말이 없지만, 그렇다고 죽는 걸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주간/인/권/호/름 (99년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 1월 18일(월)
루마니아 광원 1만여 명, 탄광폐쇄 결정 철회 및 35%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수도 부쿠레슈티까지 350km 도보 행군 시작

◆ 1월 19일(화)
경기지방경찰청, 한총련 수배 대학생의 여자친구 자취방에서 발견된 무선 도청장치에 대한 수사 착수/영국(BBC), 북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영국 로슬린연구소가 인간복제 추진중이라고 보도/한국성폭력상담소, 지난 한 해 IMF여파로 직장내 성폭력 등 성폭력상담 증가했다고 밝혀/전국연합 등 재야·시민단체 회원 150여명, 법원 앞에서 집회 갖고 '영남위' 사건 유죄선고한 사법부 규탄

◆ 1월 20일(수)
서울시 도봉구 민원통계 결과, IMF 전보다 이혼신고가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울고법 합의4부, 진보민청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 유죄 판결

◆ 1월 21일(목)
의료보험연합회, 98년 상반기 500명상 이상 110개 병원 및 대학병원이 진료비로 청구한 1조5754억원 가운데 259억원을 부당청구했으며, 특히 상위 10개 병원 가운데 8개 병원이 국·공립 또는 국립대학병원이었다고 밝혀/교육부의 학술연구지원비가 서울·연·고대 등 3개대에 30%가까이 집중된 반면, 지방 29개 대학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동해안 어민들, 어장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 결성키로/국보법 전력 출조사 정화려 써, 전두환 등 5·18, 12·12 사건 관련 범죄자 14명이 보안관찰 처분에서 면제된 사유를 알고 싶다며 법무부에 관련정보공개 청구

◆ 1월 22일(금)
통계청 발표, 지난해 12월중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7.9%, 실업자수는 166만5천명 기록/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조준환 부장판사), "자산매각 방식으로 공장을 인수하더라도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영입인수나 다름없다면 고용승계 의무를 떠맡아야 한다"며 포철 계열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대구시 98년 주민등록인구 통계 결과, 대구지역에서 태어난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는 117명으로 성비불균형 더 심해져/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순경, 정지상태의 차량도주범에 총기 난사

◆ 1월 23일(토)
김 대통령, 민가협과 간담회 갖고 "3·1절 대사면" 시시/경남 함양·진주·산청경찰서, 피의자들에게 족쇄 채워 말병

◆ 1월 24일(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 96년 시위도중 숨진 노수석 씨의 유족들이 낸 6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배상책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기획예산위원회, 올해 정부와 공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5만명 이상 감원 계획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1월 27일(수)

제 129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주택가 유인물배포 학생 연행

경찰, 옥외광고물관리법 · 국보법 적용

주택가에서 시국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던 대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오후 4시50분 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주택가를 돌며 집집마다 유인물을 배포하던 서강대학교 박 아무개 씨 등 3명이 경찰서로 연행됐다.

'서강대학교 제7기 조국통일위원회(건)' 명의로 배포된 이 유인물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김대중 정부를 비판하며"라는 제목 아래 미국의 전쟁책동 분쇄 △주한미군 철수 △IMF 경제실태 완전청산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조국 건설 등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들은 유인물을 통해 "미국은 94년도 이북과의 핵협상 이후 다시 제기되고 있는 북미협상 현안에서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대화'를 하려하기 보다는 '협상대이탈을 꾀하려는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동북아에서 미국은 이북에 대한 방어를 위한다면 군사적으로 위협수위를 넘길 만큼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북을 완전히 섬멸한다는 신5027계획을 공개하고, 미국의 주도하에 한미일 군사공조체제가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으며, '미래 1999'훈련 등 실질적인 대규모 핵전쟁 연습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은 전쟁계획을 중단하고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주장했다.

◆인권하루소식은 여러분의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주변에 구독을 권유해 주시면 하루소식에 큰 힘이 됩니다.

한편, 학생들을 연행한 마포경찰서측은 "유인물에 국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많아 감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 가운데 두 명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한 명은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쐬기

시민의 사생활과 신체의 자유 등을 함부로 침해해온 불심검문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장홍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으로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경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장 씨의 가방을 수색한 처사는 경찰관지무집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장 씨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가방을 뒤졌으므로 장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불심검문의 원칙과 요건을 재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로 경찰의 검문관행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불심검문 대상은 수상한 거동을 보이거나 범행 경력 및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야 한다는 점 △경찰관이 검문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과 질문 목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점 △소지품 내용을 물어볼 수 있지만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 △수갑을 채우거나 다른 방법으로 검문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답변강요에 준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 △검문대상자가 흥기를 소지했다는 높은 개인성이 있을 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개봉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상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일반 소지품을 조사하는 것은 불심검문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 △흥기소지 여부의 조사는 의복 또는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장 씨의 경우, 전경들이 주민등록증과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30여분간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한 것은 '최소한의 시간 내에 검문을 마쳐야 한다'는 검문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사실상 불법구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장 씨는 97년 6월 10일 지하철 시청역 부근에서 전경에 의해 불심검문을 받았으며, 다짜고짜 검문을 요구하는 경찰에 대해 거부의를 밝혔으나, 경찰은 강제로 가방을 뒤지며 모욕적 발언을 했다. 이에 장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그해 11월 1심 재판부(서울지법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과 관련, 지난해 서울대·한양대·연세대생 등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 소송 역시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군 사망 의혹, 군 당국이 부채질 천주교인권위 '군 의혹사건' 70건 접수

'김훈 중위 사망사건 특별조사단'(특조단)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인권위(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26일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사망 의혹사건' 자료들을 특조단에 넘겨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조단은 김훈 중위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각종 군내 사망 의혹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주교인권위는 지난해 12월 9일 김중위 사건이 불거진 이래 1백여 건의 전화상담을 받았으며, 서류로 접수된 사건만 70건 가까이 이른다.

현재까지 천주교인권위에 접수된 사망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군 당국의 불성실한 조사와 사후처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인권위의 고상만 간사는 "군 당국은 공통적으로 유족들의 수사기록 확인 요청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유족들이 사건현장을 확인하기도 전에 현장을 훼손하는 등 유족들의 의혹을 오히려 부채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 당국이 잠정적으로 내려진 결론(자살)을 입증하는 쪽으로 조사의 초점을 맞춰온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상만 간사는 "군 현병단의 수사책임자는 자살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에만 집중하는 등 수사전문가라기 보다 자살종결전문가라는 인상을 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자살이든 타살이든 죽음의 원인만 명확히 밝혀지면 이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며 "형식적 수사는 결국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수사 투명성 확보 방안

이같은 군내 사망사건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사과정에 객관적 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고상만 간사는 "유족이 추천하는 대리인이 수사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유족들이 제기해온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족의 현장접근 허용과

수사기록 공개 등에 있어 군내에 일관된 지침과 기준이 없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에 접수된 사망자의 80%가 이등병과 일병 등 하급병이었으며, 사고장소는 대체로 초소나 초소 부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당국은 자살로 판정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을 대부분 '내성적 성격' 또는 '군복무 염증에 따른 자살'로 결론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상만 간사는 "실형 자살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군 입대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가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군내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추모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폐공 노동자, 노사정위 농성 "노사정 합의 이행" 촉구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해오던 조폐공사 노조원들이 26일 노사정위원회에 기습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8시간여 만에 자진 해산했다.

26일 오전 9시 30분경, 조폐공사 조

합원과 간부 7명은 노사정위원회 정세균 간사 사무실을 점거한 후 "조폐공사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과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강희복 사장의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조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조폐창 통합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조폐공사의 졸속적이고 반개혁적인 창통합 추진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중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조폐공사 노사와의 관계를 파국으로 내몬 주범은 조폐공사 사장인 강희복 씨"라며 강 사장의 문책과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김원기 노사정위원장은 조폐공사 노조원들이 농성을 벌인지 7시간만인 오후 5시경 면담을 갖고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강사장 문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노사합의 사항 이행에 대한 요구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성자들은 김원기 노사정위원장으로 부터 강 사장에 대한 문책 약속을 받은 후 오후 6시경 자진 해산했다.

조폐공사측은 지난 1월 7일 옥천 조폐창에 경찰력을 투입해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한 후 "3년간 무쟁의 노사 평화선언, 쟁의 관련 고소고발자 징계자에 대한 선별처리, 임금납입"등을 노조측에 강요해 강한 반발을 사왔다.

새로운 책

『해바라기』

(외국인여성노동자 교육자료집)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엮음

열악한 노동임금, 육아에 대한 부담, 작업장 내 성희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자료집이 발간됐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는 지난 98년 진행했던 외국인여성노동자 교육프로그램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자료집 『해바라기』를 묶었다. 이 자료집은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관광서 이용하기 △산업재해 △성이야기 등 외국인여성노동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외국인노동자센터 실태조사보고서 등이 부록으로 담겼다.

·문의: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고동실 간사/ 02-708-418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1월 28일(목)

제 129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체벌허용, 교육개혁 역행 일선교사에 책임 떠넘기기 지적도

교육부가 '교육현장 내 체벌허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방향에서 크게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새 학기부터 일선학교 교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념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규정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교육부의 방침은 최근 체벌을 당한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일부 교사들 사이

에 '교권침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공여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라는 캠페인을 전개해오던 교육당국이 갑작스레 체벌 허용을 공식화한 것은 여론무마에만 신경 쓰는 근시안적 교육정책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부의 방침은 기존의 정책과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체벌을 인정하는 것은 그동안 체벌금지를 요구해온 여론의 방향을

괴청년들의 배후를 밝혀라 단국대생 집단폭행사건 물의

이른바 '운동권' 대학생들이 운동권 노선에 반대해온 전임 총학생회 간부와 괴청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2일 단국대학교 천안교정에서 박성재, 장연준 씨 등 6명은 전용서(98년 총학생회 사무국장) 씨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청년 30여명에 의해 학교 소각장으로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했다. 피해자 장연준 씨는 "전용서가 일행 30여 명을 밖에 세워둔 채 삼으로 온몸을 구타했다"고 밝혔다. 이날 폭행으로 박성재 씨는 턱뼈가 부러지는 전치 6주의 증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다섯 명의 학생들도 전치 2-3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폭행의 정도와 가담 학생의 면모 등에 비해 그 배후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가해학생이 천하교수 인사로 불려온 전임 총학생회 간부인데다, 30여 명의 청년의 정체를 몰아내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 직후 경찰의 수사태도 역시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신안파출소 측은 가해학생들을 신원보증만 받고 풀어줬으며, 피해자들에게 "진단서를 끊어야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며 사건조사를 미뤘었다. 이후 가족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26일 밤에야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가해학생 두 명은 이미 도주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30여 명의 청년들의 신원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들은 "이번 사건은 학생자치권을 말살하기 위한 책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배후에 보안수사대와 학교가 개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장연준 씨는 "전용서 등이 폭행을 가하면서 '학내문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되돌림으로써 이후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일선교사 쪽에선 현실적으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며,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한 일선교사는 "대부분의 체벌행위가 감정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체벌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정해둔다면, 교사들의 순간적 체벌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교조도 "체벌금지 원칙이 일선교사들로부터 외면당하자 교육부가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방침"이라고 해석하며 "체벌에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무조건 체벌을 반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침으로 인해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책임을 일선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 일선교사는 "교사들은 체벌을 하지 않고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원한다"며 "적정 하급인원 배정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교사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불법사찰 정보공개 요구

전북 사회단체, 행정소송 제기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평화약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7개 사회단체들은 경찰의 불법사찰 행위와 관련, 27일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이 사찰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청구한 행정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서울지역 5개 단체들도 지난 15일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

· 사건: 98나467 손해배상(기)
· 원고, 피항소인: 장홍석
·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11. 27. 선고 97가소316755 판결

(생략)

나. 판단

(2) 위 규정에 의하면 불심검문의 대상은 합리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수상한 거동을 보이는 사람, 죄를 범하였다고 보이거나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 이미 행하여진 범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야 하고, 경찰관이 검문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려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행선지나 용건 또는 성명, 주소, 연령 등을 묻고 소지품의 내용을 질문하여 수상한 점을 밝힐 수 있으나, 이러한 직무질문은 임의수사의 필조이므로 상대방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여서는 아니되고,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하는 동안 상대방에 대하여 수갑을 채우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중략) 흥기 소지 여부의 조사는 임의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복 또는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방법(소위 step and frisk의 방법)으로 흥기 소지 여부를 탐지하여야 하고, 당해인이 흥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만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인에게 소지품을 개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중략) 소지품 조사를 빌미로 하여 범죄수사에 있어서 요구되는 영장주의를 탈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관은 당해인이 위 제3조 제3항의 규정과 달리 흥기 이외의 다른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지품을 개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중략), 당해인의 의사에 반하여 흥기 아닌 일반 소지품을 조사하는 것은 이미 불심검문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사전에 수색영장을 받아야 하고 긴급한 경우 같은 법 216조 3항에 따라 수색영장없이 수색할 수는 있으나 이 때에도 사후에 지체없이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 할 것이다.

(3) (중략) 첫째로 원고는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수상한 거동을 보였거나 혹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을 위반 등의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하려 하고 있거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위에서 본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그곳을 통행하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 중의 한사람이라는 사실 이외에는(중략) 다른 수상한 점은 찾아볼 수 없는 바, 단지 젊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수상한 거동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불심검문의 대상자가 아니라 할 것인데

도 전경들은 원고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게시하였고, 동시에 (중략) 자신들의 신분과 성명을 밝히지도 아니한 채 불심검문을 게시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요구하는 불심검문 게시의 요건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며, 둘째로, (중략) 불심검문을 최소한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시간 내에 끝마쳐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주민등록증과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어긋나게 30여분간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하였으므로 사실상 불법 구금을 하였다 할 것이고, 셋째로, (중략) 원고가 흥기를 소지하고 있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으므로 전경들이 원고의 가방을 개봉하여 흥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경들은 원고의 가방을 먼저 손으로 만져 조사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아니하면서 주위를 에워싼 채 소지하고 있던 권봉으로 땅바닥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응할 것을 강제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흥기 소지 여부에 대한 조사 여건을 어긴 것(이하 생략)

1999. 1. 20
재판장 판사 정은환
판사 김환수

만화 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1월 29일(금)
제 1299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목요집회, '준법서약서' 비판

"준법서약서를 강요하며 사람의 양심을 재단하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반대한다."

28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257회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에서 임기란 민가협 전 삼임대표는 양심수 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김대중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집회장 주변은 '간헐 양심, 빼앗긴 자유'라는 피켓과 양심수들의 사진과 소개를 담은 선전물들로 메워졌다.

'장기수들에 대한 조건없는 사면'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날 목요집회엔 장기수들의 가족이 참석해, 그간 겪어온 아픔을 이야기하며 비전향장기수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남과간첩 혐의로 구속돼 37년째 복역하고 있는 홍명기 씨의 가족은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니 한없이 죄스럽다"는 홍 씨의 서신을 공개했다. 이어 홍 씨의 가족은 "어머니를 만나러 온 것이 죄가 돼 37년째이나 구금되어야만 하느냐"며 홍 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30년째 복역하고 있는 김은환 씨의 가족 또한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탄원서에서 "형님이 나올 수단 있다면 제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부디 단 하루만이라도 형님과 살게 해 주십시오"

- ◆ 구독료 납부 바랍니다.
- ◆ 인권하루소식은 여러분의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 ◆ 주변에 구독을 권유해 주시면 하루소식에 큰 힘이 됩니다.

시오"라고 밝혀 주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은 "70세를 넘은 노인들이 사회에 무슨 해가 된다고 준법서약서를 강요하면서 가둬 놓느냐"며 "이제 죽음을 문턱에서 있는 노인들이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복에 가족을 둔 비전향장기수들의 경우 준법서약서 없이도 사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강용주(구미유학생 사건·15년 제 구금) 씨등 나머지 양심수들에 대해선 석방의 조건으로 계속 준법서약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

김대중 인권의지 고작 이 정도였나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시정" 요청 거부

27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시정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사를 밝혔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1년간 국내 인권문제를 외면해온 데 이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마저 현실팩처럼 차버림으로써, 더 이상 '인권정부'를 표방하기엔 낯뜨거운 처지가 돼버렸다.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이사회는 89년 국가보안법(제7조)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박태훈 씨 사건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한국정부는 박태훈 씨에 대해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통보해 왔다. 그리고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법원에 통보할 것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번역해 공개할 것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것 △금전배상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그 동안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국제사회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확대해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권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국가보안법 개혁 등의 조치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무부의 주장은 이미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난 상황이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열달 동안 무려 374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됐고(이는 같은 기간 김영삼 정권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그 가운데 359명이 제7조의 탓에 걸려 구속된 사실은 이를 입증해준다.

또 법무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을 국내에 홍보하라는 요구조차 "번역작업을 진행중"이라는 핑계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단 하루면 번역할 수 있는 문서를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번역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상 이 문제를 국내에 공개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국내 인권단체들은 즉각 항의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고,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퇴출노동자 한스러운 삶 마감 현대중기 육경원 씨, 투쟁도중 암재발

"바쁜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어? 우리 일 해결되기 전에 나 눈 못 감으니까, 나 꼭 일어나 갈테니까 어서들 들어가, 어서."

27일 기나긴 투쟁과정 도중 지병으로 사망한 육경원(현대중기 퇴출 노동자·52) 씨가 면회 온 동료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육경원 씨는 1979년 현대중기건설에 입사한 이래 국내의 건설현장 등에서 반평생을 건설 노동자로 살아 온 사람이었다. 96년 암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98년 현대중기가 퇴출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그도 동료들과 함께 일자리에선 일방적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투쟁을 시작했

다. "재발이라도 하면 어쩌냐"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고 생각하고 있는데 혼자 편할 수는 없다"며 투쟁의 현장으로 달려나갔다.

그렇게 투쟁에 참여한 지 1년, 과도한 스트레스로 암은 재발됐고, 27일 "억울해서 이렇게는 눈을 감을 수 없다"는 한 마디를 남긴 채 그는 동료들 곁을 떠났다. 퇴출된지 2백41일만의 일이었다.

"항상 대일 맨 앞에 서있던 사람"으로 육 씨를 기억하는 건설노련 부위원장 유기선 씨는 "퇴출노동자의 한을 품고 갔다"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20년간 동고동락했다는 임길상 씨 역시 "지난 반평생 현대가 잘되면 우리도 잘되는 거라 믿고 죽도록 고생만 했다. 그토록 가고 싶던 현장에 아직 못 갔는데 죽었다"며 터져나오는 울음

을 막지 못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를 잃고도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현대중기 퇴출노동자들은 7개월 가까운 농성 때문에 건강이 심하게 악화된 상태다. 퇴출노동자 가운데 박종안 씨는 직장압을 앓고 있고, 문종범 씨는 당뇨로 투병 중이다. 또한 모두가 절박한 생계문제에 직면해 있다보니 가족내 불화도 피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현대 본사 앞에 남편의 시신을 놓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싸우고 싶다"는 육 씨 부인의 뜻처럼 현대중기 퇴출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쟁취하는 날까지 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육 씨의 빈소는 서울대 영안실에 마련돼 있으며, 장례는 오는 29일 오전 6시 영결식에 이어 현대 본사 앞 노제를 지내게 된다. 장지는 전남 화순이다.

조선일보 문제 끝나지 않았다 취재거부 운동 등 계속돼

최장집 교수 사상검증과 관련된 논쟁이 최근 최 교수의 소송취하와 함께 수그러들고 있지만, 조선일보의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는 28일 "공대위의 활동은 최 교수 개인의 문제에 대한 활동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극우파시점적 언론행태'에 대한 대응이었다"며 "조선일보가 뚜렷한 변화의 모습을 보일 때까지 조선일보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극우적 편파·왜곡보도로 문제를 일으킨 조갑제 편집장과 우종창 기자 등 주요 당사자에 대한 문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선일보의 반성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조선일보 취재거부와 구독거부, 보도자료 안보내기 운동 등을 오는 3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89년 시국사건 출소자, 동향파악 시달려 경찰 "일상적 방법순찰" 해명

89년 이른바 '프락치시망사건'에 연루돼 3년여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장 아무개(고려대 83학번) 씨는 최근 경찰의 전화연락을 받고 더 이상 분을 참을 수 없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경찰의 동향파악이 또다시 시작됐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93년 출소한 장 씨는 94년부터 해마다 한 번 꼴로 반감지 않은 경찰의 방문을 맞이해야 했다. 찾아온 경찰들은 장 씨의 직업과 가족관계, 심지어 부인의 직업을 캐물어왔고, 이에 대해 장 씨는 "내가 왜 그러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장 씨는 89년 당시 상해치사죄로 구속됐기 때문에 '보안관찰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안관찰은 이른바 '공안사범' 출신들에게만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 씨는 경찰이 자신의 동향을 파악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었고, 관찰파출소를 찾아가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28일 장 씨를 만난 파출소장은 "파출소에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방범심방'에 불과하다. 장 씨의 전력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방범외방을 위해 무작위적으로 관내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것이며 동향파악은 아니니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단 한차례도 방범심방을 받지 않는 가정이 있는 데 반해, 유달리 장 씨에게만 방범심방이 계속되는 이유를 파출소장은 설명하지 못했다.

다시는 아픈 기억을 상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경찰의 방문 때마다 기억을 상기해야 했던 장 씨. "다시는 방범심방을 가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는 파출소장의 약속만으로 위로를 받을 수는 없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1월 30일(토)

제 130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국제앰네스티 영남위선고 비난 영남위 사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증명이 선고된 대해 국제인권단체의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8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영남위사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관련자 전원의 석방을 촉구했으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권고했다.

앰네스티는 이 서한에서 "영남위원회 사건은 한국 정부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정치적 신념에 기반해 정당한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을 구금하고, 사회불안의 시기에 비판을 억누르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활동을 가로막는데 국가보안법이 악용돼 왔다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앰네스티는 "영남위원회 사건 당시 제출된 증거는 장기간 진행된 도청자료와 불법적으로 획득된 자료들이었다"고 지적하고 "영남위사건 관련자 15명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근거해 불 때 비폭력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건없이 관련자 모두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지난해 9월 국가보안법을 따른 시일

안에 재검토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또 최근 대통령이 다시금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 우리는 고무받았다"며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또 다른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지시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유연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27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7조 관련 유연결정안사회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회단체들의 항의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29일 성명을 내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정부가 내세운 '인권의 신장과 발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치"라고 규정하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정부가 조약 준수의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확대해석을 금지해 유사한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작년에만도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해 359명이 구속된 사실은 법무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유연결정안사회의 결정을 즉각 수용할 것 △유연결정안사회의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반인권적 법이란 비난과 함께 개정 및 폐지의 대상이 되어

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도 28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7조가 과거와 똑같이 남용되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소중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는 즉각적으로 거부방침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연결정안사회의는 지난 12월 우리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7조 위반혐의로 89년 구속된 박태훈 씨의 의사표현 행위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쳤음을 입증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국내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박 씨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포함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고발당한 "표현의 자유" 수원시, 인권영화제 검찰에 고발

인권영화제에 대한 사전심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3회 인권영화제의 상영작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회 수원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철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지난주 수원 중부경찰서로 소환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수원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때에도 당시 집행위원장이던 권영택 씨를 같은 이유로 고발한 바 있으며, 법원은 권 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린 제3회 인권영화제와 관련, 영화제 주최측이 고발당한 것은 수원이 처음이다.

- ◆ 구독료 납부 바랍니다.
- ◆ 인권하루소식은 여러분의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 ◆ 주변에 구독을 권유해 주시면 하루소식에 큰 힘이 됩니다.

<인권하루소식> 99년 1월분 총목차(1281-1300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281	1/5	1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①
		2	연초부터 '한총련' 탄압 박차 - 고려대 신입 총학생회장단 구속/영남위 김창현 구청장 징역 8년 구형/주간인권흐름(98년 12월 21일-99년 1월 3일)
1282	1/6	1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②/특별법 제정 날새고 있다 - 유가협 농성 63일째
		2·3	98년 12월 총목차 (1261호-1280호)
1283	1/7	1	'529'호, 안기부 개혁 계기로 - '민생현안 우선 처리'...시민단체계 반응/경찰, 사찰카드 공개 거부 - '비밀 보관 자료' 핑계/〈만화사랑방〉529호실 사건
		2	노숙자대책 여전히 주먹구구 - '자유'의 집 9백명 몰려... 서울시는 수용 급급/〈광고〉 98년 국정 감사 자료집 판매합니다.
		3	〈관결문 발췌〉 시위금지 통고 처분 취소 판결 -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돼"
1284	1/8	1	노점단속 강패 동원했나 - 아이 업은 임신부 넘어뜨리고 폭행/공공부문 정리해고 신평탄 - 육천 조폐창에 경찰력 투입
		2	〈관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전교조 "교육개혁 술선" 다짐 - 참교육 실천대회 정례회 등
1285	1/9	1	분당, 노점단속 이수라장 - 구청 공무원 "노점 원천봉쇄가 목적"/투쟁 참가 뒤 병세 악화 - 목포 결핵병원 결핵환자들/사이버권리는 현실의 권리 - 통신연대, 통신시명 작업 진행
		2	"반국가단체 증거 없다" - 시민대책위, '영남위 사건' 무죄 주장/조폐창 경찰력 투입 규탄 - 민주 노총 긴급 기자회견
1286	1/12	1	겨울철 강제철거 안한다더니 - 인천, 철거용역 발가벗고 부녀자 폭행
		2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 왕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 해야"/〈관결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주간인권흐름(1월4일-1월 10일)
1287	1/13	1	영터리 신원기록에 명든 시민 - 담당 경찰서, 기록 공개·수정 거부/신원조회 말썽, 어물쩍 넘어 가려고? - 교육부, 방첩철회 유보... 피해 감사 제도도 안해/분당 노점단속 중단 촉구 - 노점 상 8백여명 대규모 집회
		2	〈기고〉 동암재활원 사태의 전개과정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새로 나온 책〉 "양심수 없는 나라"
1288	1/14	1	전자신분증 '통제강화' 논란 - 현대 자동차 전주공장 RF카드 도입/〈만화사랑방〉경찰, 국민 사찰
		2	〈인터뷰〉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임미령 위원장 "할 일 많아 행복해요"/교육부, 신원조회 '안면몰수' - 이윤정씨 강단복귀 학교에 미뤄/부실 경영자엔 64조 평평 - 기초생활보장법 "재원없다" 보류
1289	1/15	1	민간사찰 대응 고삐 죄다 -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동암재활원 인권유린 확인 - 시민단체, 탈법행위등 추가폭로
		2	고문피해자 속출... 구제조치 없어 -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그리웠다 - 고문피해자 이을호 씨 가족의 끝모를 고통
1290	1/16	1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피노체트 기소하라 -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앞 시위
		2	탈북자들 '인권쓰레기' 취급 받아와 -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가혹행위 등 폭로
		3	〈공동 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된 사법부를 규탄한다.
1291	1/19	1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철/상도동 시위 수배자 구속
		2	"국방부 진상조사 의지 없다" - 천주교인권위, 김중위 조사단 탈퇴/주간인권흐름(1월 11일-17일)
		3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정유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인권하루소식> 99년 1월분 총목차(1281-1300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292	1/20	1	전화 엿듣는 게 경찰의 일? - 민예청 사무실, 9개월간 장기도청/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안민청 항소심도 '이적단체 판결' - 김종박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2	〈독자투고〉 대학사회에 '언론의 자유'는 과연 있는가 - 서울시립대 언론 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한 권의 책〉 『탈북자의 삶 - 문제와 대책』
1293	1/21	1	젓더미 꽃마을 복구지원 안돼 - "무허가" 이유, 1백여 세대 앞날 캄캄/줄 잇는 "이적단체" 판결 -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죄
		2	노동현장, 쇠파이프 용역 다시 등장 - 현대석유화학, 노조 대의원 농성 방해/IMF여파, 성폭력 상담소 증가 - 취업·고용불미 성폭력 빈발/언론피해법률지원 본부 발족 - 정정보도 청구, 소송등 대리/〈만화사랑방〉 정계개편보다 우선은 인권
1294	1/22	1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 내란·하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과학기술 인간과괴 막자 - 시민단체, 생명공학 개정 촉구
		2	특명! 도청을 막아라 - 제도적 방지책·당국 의지 필수/유용노동자 '함께 설 권리 찾기' - 백화점 주 1일 정기휴점제 요구
1295	1/23	1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김 대통령·민가협 오찬 - 양심수 가족 등 20여명 참석
		2	준법서약해도 '재범유려' 감시 청구 - 검찰, 정화려 씨 보안관찰 청구/차리리 죽고 싶을 때도 있었다 - 삼미특수감 해고자 가시발길 투쟁 2년/법원 '삼미특수감 해고 부당' - 포천출 대책에 상고기로
1296	1/26	1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 모임서 밝혀/비전향 장기수 준법서약 생략 - 7년 이상 구금자 모두 24명
		2	백화점 노동자 도심 시위 - 주 1회 휴점·공동유식권 보장 촉구/꽃마을 '재해구역 선포' 요구 - 송파구청 '법적 지원 불가' 방치/주간인권흐름(1월 18일-1월 24일)
1297	1/27	1	주택가 유인물 배포 학생 연행 - 경찰, 옥외광고물관리법·국보법 적용/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쫓겨
		2	군 사망 의혹, 군 당국이 부채질 - 천주교 인권위원 '군 의혹 사건' 70건 접수/조폐공 노동자, 노사정위 농성 - "노사정 합의 이행" 촉구/〈새로 나온 책〉 『해바라기』 (외국인 여성노동자 교육자료집)
1298	1/28	1	체벌허용, 교육개혁 역행 - 일선교사에 책임 떠넘기기 지적도/괴청년들의 배후를 밝혀라 - 단국대생 집단 폭행사건 물의/불법사찰 정보공개 요구 - 전북 사회단체, 행정소송 제기
		2	〈관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만화사랑방〉 경찰 인권침해 배상판결
1299	1/29	1	비전향 장기수 전원 석방 촉구 - 민가협 목요일집회, '준법서약서' 비판/김대중 인권의지 교착 이 정 도였다 -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시정' 요청 거부
		2	퇴출노동자 한스러운 삶 마감 - 현대중기 육경원 씨, 투쟁도중 암재발/89년 시국사건 출소자, 동향파악 시달려 - 경찰 '일상적 방범순찰' 해명/조선일보 문제 끝나지 않았다 - 취재거부 운동 등 계속돼
1300	1/30	1	국제엠네스티, 영남위 선고 비난 - 영남위사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민변 등, 유엔인권이사회 결정안 수용 촉구 성명/교발당한 "표현의 자유" - 수원시, 인권영화제 검찰에 고발
		2-3	〈인권하루소식〉 1월호 총목차(1281호-1300호)

인권하루소식

99년 2월

(제1301호 - 제1317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2월 2일(화)

제 130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법무부가 지난 1월 십여 명이 넘는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렸다.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동향을 보고해야 하며, 경찰의 감시도 합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처분은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는 근거 아래 결정되고 있다.

지난해 8·15 가석방으로 출소한 박동운(행방불명자 가족사건, 17년 구금) 씨는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검찰측 주장에 근거해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또 변의숙(남한조선노동당 사건, 6년 구금) 씨에 대해서는 "안정된 직업이 없고 지난 3·13 사면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단식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 보안관찰처분의 근거로 제출됐다.

박영희(방북 사건, 6년 구금) 씨도 "출소한 이후 함께 구금됐던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보안관찰처분의 이유가 됐으며,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4년 구금) 씨 역시 "같은 사건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아직도 복역 중"이라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청구된 상태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8·15 사면 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사람이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조치는 더욱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게다가 당국은 보안관찰처분자에 대해 소명기회조차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보안관찰법 13조는 '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

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하는 데만 급급할 뿐, 대상자들에게 소명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삼석(남매간첩사건, 97년 만기출소) 씨는 "보안관찰대상자들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처분을 내리는 것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검찰이 은근슬쩍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소명기회를 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명기회도 갖지 못한 채 보안관찰처분결정을 통보받은 이경섭(남한조선노동당 사건, 8·15 가석방) 씨는 당국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해 2월중으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낼 예정이다.

유가협, 국방부 조사 거절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1일 80년대 이후 군내 의문사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 배은심)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 의장 이창복)는 국방부 특조단의 재조사 방침을 거부하며, '의문사 진

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통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협과 추모연대는 "김훈 중위 사건의 재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 사건이 발생한 해당기관에서 진상조사를 맡겨질 경우, 조사는 결국 요식행위로 끝나고 말 것"이라며 "특별위원회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만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건있는 수배해제

법무부, '자수' 원칙 고수

구 정권시절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문제에 있어 법무부가 결립들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회의가 최근 양심수 석방문제를 언급하며 수배해제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지만, 법무부는 지난 1일 수배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자수를 해야 선처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이에 대해 정치수배자 오창규(94년 남측연 의장) 씨는 "자수할 경우 선처하는 것은 일반 형사범에게도 적용되는 당연한 논리"라며 "부정부패의 주범들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반해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수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과연 현 정부가 인권정부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남아있는 구 정권의 정치수배자는 58명으로, 이들 중 9명은 △조건없는 수배해제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를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1백80여 일 채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위한 캠페인

· 때: 2월 3일(수)부터 매일 낮 12시-1시 · 곳: 서울역

· 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결핵환자 40명 대거 상경시위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철회 촉구

지난 1월 3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결핵환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반대와 국민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였다.

오전 7시경 목포결핵병원을 출발해 낮 12시경 서울에 도착한 40여명의 결핵환자들은 김밥과 차가운 음료만으로 요기를 한 뒤 곧바로 가두시위에 나섰다. 흰 환자복의 결핵환자들과 흰 가운을 입은 보건의료계 관계자 등 2백여명의 참가자들은 광화문빌딩 앞에서 경복궁까지 행진을 벌였다. 불과 1km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결핵환자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행진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때문에 중간중간 쉬어가기도 했고, 전투경찰들과의 힘겨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복궁 앞에서 마무리집회를 가진데 이어 환자들은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진출을 시도했지만, 전투경찰의 벽에 막혀 되돌아서고 말았다.

이날 상경한 환자 가운데엔 약제내성(약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걸린 박원용(목포결핵병원 환자 비상대책위 홍보부장) 씨를 비롯해 중환자병동에 입원중인 환자도 6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배상훈 환자비상대책위 위원장은 "환자들이 집회를 마친 뒤 구토하거나 탈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이 대거 상경투쟁을 벌인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두 번째. 벌써 3백40여 일째 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지난 연말 정기국회는 올 하반기부터 병원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배상훈 위원장은 "환자들 가운데엔 '왜 사람들이 분신했는지 이유를 알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소개하며 "환자들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다"고 말했다.

30일 투쟁을 마치고 목포로 내려간 결핵환자들은 이날 투쟁에 상당히 고무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투쟁기금이 부족한 환자들로서는 이후의 투쟁을 다시 준비하기조차 버거운 형편이다. 배 위원장은 "투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쟁지원금 계좌: 국민은행 배상훈 552-21-1034-557)

.....주요 공판 안내

- ▶ 2월 2일(화) 전상봉 외1(국보법 찬양·고무 등, 민예청사건)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선고
- 오진석 외8(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 ▶ 2월 5일(금) 박효근 외10(국보법 찬양·고무 등, IS사건) 오전 10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선고
- 안중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속행
- 노재중(폭행·협박 등, 양지마을 사건) 오후 4시, 대전지법 231호, 선고

주간/인권/호/름

(99년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 1월 25일(월) 대형백화점 노동자들, 공동휴식권 보장 요구하며 도심 시위/이라크관영 (INA통신), 미국이 인구밀집지역에 미사일공격 가해 여성·어린이 등 수십명 사상했다고 보도

◆ 1월 26일(화) 서울지법 민사합소2부, 불심검문시 강제로 가방을 수색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피해자 장 아무개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교육부, 학교내 제한적 체벌을 허용하고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의 재택학습 허용하는 학생선도대책 밝혀/영국 노동당 정부,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기판매 64건을 극비에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조폐공사 노동자, 노사정위 기습집회 시위

◆ 1월 27일(수) 법무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피해자 구제결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동아대 간첩단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 "인도주의적 차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정부가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북한어린이살리기운동본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인도네시아 정부, 동티모르 독립가능성 시사/현대중기 퇴출노동자 육경원 씨, 장기간 투쟁도중 위암 재발해 사망

◆ 1월 28일(목) 노동부, 노사정·민간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산업재해 은폐 조사단' 구성기로/서울시내 노숙자보호시설에 수용된 노숙자 3천9백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1.8%(462명)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엘지반도체 서울본부 및 구미·청주공장 직원 8천여명, 여의도에서 '합병반대 및 생존권확보 결의대회' 개최/국제연세스티,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 보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 1월 29일(금) 헌법재판소,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7조1항에 대해 합헌 결정/법무부 교정관계법심의회, 형형법 개정심의 착수/현대전자, 엘지반도체 직원에 대한 1백% 고용승계 원칙 합의/정부, 올해 1/4분기 공공근로사업 투입인력을 하루 40만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 1월 30일(토) 목포결핵병원 환자들, 청와대 앞길에서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철회" 요구하며 시위

◆ 1월 31일(일) 주한유엔군사령부와 국방부, 비무장지대 생태 촬영 불허/국가정보원, 84년-92년 사이 월·납북자 22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며 유엔인권위에 진상조사 촉구키로했다고 밝혀/국세청, 97년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소득 1억원 이상 신고자가 전년보다 21.6% 증가한 2만8200여명이라고 밝혀

인권 시평

구걸이 직업인 장애인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월간 『함께걸음』 편집부장)

장애인 잡지를 만들다보면 다양한 장애인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소외계층으로 불리는 장애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얼마전 장애를 가진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이 여성은 은어로 '기바리'라고 부르는, 거리에서 바다를 거머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을 해서 먹고사는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소아마비로 양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고, 나이는 마흔두살이었다. 그녀가 거리에서 구걸을 하게되기 까지는 사연이 있었다.

'기바리' 여성

그녀는 어려서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어려운 가정 형편이 부모로 하여금 그녀를 재활원에 맡기게 했을 것이다.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재활원에서 자란 그녀는 재활원에서 겨우 초등학교를 마치고 나이 스무살 때 사회로 나왔다. 장애 때문에 몸도 팔 수 없었던 그녀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동양자수 놓는 일을 기술훈이라고 배웠는데 수요가 없어 유일하게 배운 기술이 생계를 이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몇 군데 전자부품 조립 공장을 전전했고, 그러다가 그녀 나이 서른세살 때 공장에서 만난 같은 처지의 장애인 남성을 만나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부부는 어렵게 아이도 하나 낳았다.

아이가 생기면서 부부는 정말 열심히 일 했다. 하지만 저임금은 세 식구 생계를 이어가는데도 턱없이 부족했고, 그나마 다니던 공장이 일감을 확보하지 못해 문을 닫으면서 부부는 거리로 나앉게 됐다. 처음 그녀는 어떻게든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마흔이 넘는 나이에다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그녀를 고용하겠다는 직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같은 처지의 남편 역시 직장을 알아보기가 취업이 안 되자 낙심해 주저앉아 버렸다. 남편은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고, 술만 먹으

면 울분을 그녀에게 쏟아냈다. 남편은 그녀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내몰면서 구타를 해댔다. 별 수 없이 그녀는 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길을 걷거나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을 하는 장애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들 장애인들 모두가 여성처럼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구걸을 하는 장애인들 다수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구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느새 장애인들에게 구걸이 하나의 직업이 된 것이다.

구걸을 인간의 자존심을 포기해야 가능한 행위다. 구걸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수치심도 느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구걸을 하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려도 수없이 많이 되뇌인다고 한 시각장애인은 말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장애인들로 하여금 인권이라는 말이 무색한 구걸 행위에 나서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우선 구걸을 하는 장애인들 대다수가 성인장애인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성인장애인들은 대부분 경제 형편이 어려웠던 오욕십년대에 태어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때는 소아마비가 창궐했으며, 기타 전염병으로 시력이나 청각을 잃는 아이들이 많았다. 이렇게 개인의 잘못 때문이 아닌 어려운 나라 형편 때문에 생겨난 장애인들은 또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신 장애인들은 기술을 배워야 살 수 있다고 해서 기술을 배웠는데 그 배운 기술이 남자는 시계수리나 인장 새기는 기술, 여자는 수예나 편물을 놓는 사양업종이 주를 이뤘다.

결국 장애인들이 먹고 살수 있다고 해서 배운 기술은 지금에 와서는 장애

인들의 생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성인장애인들은 현재 거의 다 가계를 책임지고 꾸려야 할 위치에 있다.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일인당 10만원 안팎의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별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성인장애인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다. 그래서 성인 장애인들은 구걸을 직업으로 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구걸이 직업으로 가능한 것은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은 동정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문명사회인가?

이 모습이 이천년대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 성인장애인들의 자화상이다. 정상적인 직장은 꿈도 꿀 수 없어서 사람들의 동정에 기대 겨우 생계를 꾸려가는 구걸 장애인들, 백 번 양보해도 장애인들이 구걸을 해서 먹고사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구걸로 먹고사는 장애인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그들을 격리 수용하겠다는 발상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 구걸 장애인들이 인권을 가지고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는 지금 당장 관심을 가지고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문명사회라면 당연히 사회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구걸장애인들은 차가운 거리에서 어려워진 경제 형편과 사람들의 싸늘한 눈길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 고통을 우리 사회가 꺼안고 궁극적으로는 구걸 장애인들을 우리 곁에서 찾아볼 수 없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만약 거리에서 구걸 장애인들을 만난다면 외면하지 말고 따뜻한 말 한 마디라도 건네보기를 권하고 싶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2월 3일(수)

제 130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미명 틈탄 강제 철거

안양 유진상가 주민 9명 연행

유진영세상가(안양시 호계동 소재)에 대한 동절기 강제철거가 진행돼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새벽 경기 안양시, 경찰이 유진상가 주위를 에워싼 가운데 철거용역 백여명이 유진상가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이들은 옥상에 고가사다리를 놓고 상가 안으로 들어가 연막탄을 터트린 후 안에서 잠자고 있던 상가주민 전원을 강제로 건물 밖으로 몰아냈으며,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상가주민 9명 전원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상가주민 김철환(50세) 씨는 갈비뼈 2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안경환(40세) 씨는 안면구타로 인해 이빨 두개가 부러졌고, 유창환(34세) 씨는 심한 허리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유진상가는 지난 97년 상가 주민의 부도로 은행 경매에 붙여져 신한건설에 낙찰됐는데, 신한건설 측은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은 채 재건축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상가주민들의 철수를 요구해왔다. 이에 30세대의 상가주민들은 "상가 안에 전 재산을 쏟아 부었는데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라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영구 임대 상가 건립 △가수용상가 입주 △신한건설 측에 의한 영업방해로 인한 영업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상가 안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하지만 신한건설 측은 상가주민들에게 철거날짜도 통보하지 않은 채 지난 12월 한차례 강제철거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상가주민들은 위험상황에 대비해 어린이이들을 친척집 등에 맡겨놓고 생활해왔으며, 지난 12월 초순부터는 신한건설 측의 방해

로 가게운영마저 하지 못하는 등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다.

이날 진행된 강제철거에 대해 안양시청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적인 철거"라고 대답했지만 이후 대책에 대한 대답은 회피했다. 또한 경찰은 상가주민들을 공무집회방해 혐의로 연행한 후 한동안 수사를 이유로 부상자들의 치료를 거부해 가족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샀다.

유진상가에서 7년째 가게를 운영해왔다는 정동열(57세) 씨는 "상가가 신한건설에 넘어간 후부터는 가게 운영을

제대로 하지못해 빚에 허덕이며 살아왔다"며 "상가에 온 재산을 털어넣었는데 상가에서 내쫓기고 난 지금은 오고 갈 곳도 없어 당장 오늘 저녁부터 길거리에 천막이라도 치고 살아야할 판"이라며 결국 울음을 터트렸다.

주거단지 세입자와는 달리 상가단지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구제제도가 없어 유진상가 세입자들은 더욱 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전국철거민연합 양해동 정책위원장은 "95년 동대문에 있는 율목상가(현 밀리오래 건물) 세입자들은 상가 재건축 과정에서 상권 인근지역에 설치된 가수용상가에 입주하는 등 영업상 피해보상을 받은 바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유진상가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생계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새로나온 책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펴냄

지난해 12월 10일을 기해 국가인권기구 논의가 휴면기로 접어들었다. 국가인권기구를 특수법인화하는 법무부의 주장과 독립적 위상을 가진 국가기구를 요구하는 민간단체측 주장이 팽팽선을 달려온 지도 벌써 여러 달이 지난 가운데, 민간단체공동추진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자료집을 펴내게 됐다.

이번 자료집은 △국가인권기구란 무엇인가 △법무부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대한 민간단체의 입장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주요 쟁점 비교 등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법무부측 인권기구안이 담고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바 있는 '유엔 제시 기준'이 무엇인지,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기구 설치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을 표명했는지 이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의 '문답' 코너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여러 의문점을 속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입문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02-741-5363/ 담당: 배경내)

70-80년대 조작간첩 사면복권 요청

재일동포 31명, 김 대통령 앞 탄원서 제출

70-80년대 모국 유학 또는 방문 도중 간첩 혐의를 쓰고 구속됐다가 풀려난 재일동포들이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사면복권 조치를 탄원하고 나섰다.

지난해 3월 13일 가석방 조치로 풀려난 손유형(전두환 정권아래 최초의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씨등 재일동포 31명은 지난 30일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면복권 혜택을 받았지만, 재일동포들은 항상 제외되어 왔다"며 "민주정치의 발전과 60만 재일동포의 대동단결을 위해 양심수 출신 재일동포들에게도 사면복권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탄원에 참여한 사람은 74년 '최철교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까지 선고 받았던 최철교(90년 석방) 씨, 71년 '재일동포 형제간첩단 사건'의 서승(90년 석방) 씨 등 박정희 정권 시절 구속자 18명과 이현치(81년 구속, 96년 석방) 씨 등 전두환 정권시절 구속자 12명, 노태우 정권 시절 구속자 서순택(90년 구속, 98년 석방) 씨 등이다.

민가협, '사면 캠페인' 들입

사면복권 · 수배해제 신청 접수

3·1절 사면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김정숙, 민가협)는 3일부터 한달간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민가협은 "최근 각 교도소에서 양심수들에게 교도소 관계자와 검사들이 준법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8·15사면 당시처럼 또다시 준법서약서가 사면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가협은 또 미사면복권자와 정치수배자들 위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접수된 내용을 2월 12일경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전상봉 씨등 집행유예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제7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2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2부(재판장이윤승 부장판사)는 민애청 회원 전상봉(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한

대웅, 강효식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애청의 규약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여타 자료집을 검토해볼 때 이적성을 띠고 있으며, 민애청과 다른 단체(범민련)와의 관계 여부를 살필 때 이적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민애청 규약은 △자주민주통일 조국을 이루는데 앞장선다 △회원들의 세계관을 올바르게 세운다 △자립적 노동생활·경제생활을 기본 덕목으로 삼는다 △건장한 청년질서 함양, 민족문화 창조와 향유에 앞장선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오티스 해고자 복직투쟁

천안...서울...당진, 고된 행군

한국오티스 충남 당진공장 노동자들이 미국 자본가에 맞서 힘겨운 해고철회투쟁을 벌이고 있다. 엘리베이터 생산업체인 한국오티스는 1백% 미국자본으로 구성된 회사다.

한국오티스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은 지난해 10월.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불법파업을 벌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해고자들은 회사측이 치밀한 계획 아래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해고했다며 벌써 1백여일 이상 해고철회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한국오티스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을 진행 중이던 노동자들은 임금동결과 단체교섭안 양보 대신 회사측에 고용안정특별협약의 체결을 요구했고, 이에대해 사측과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어 노조 집행부는 회사측과의 합의안을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가결시켰으나, 갑자기 대표이사(브래들리 K. 벅터)가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파기시키면서 사태는 불거지게 되었다.

노사합의안 파기에 이어 회사측은 느닷없이 직원 1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해왔고, 이로 인해 노조 간부들과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8월 하순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리고 8월 28일부터 한달 간 총파업투쟁이 벌어지자, 회사측은 드디어 파업과 근무지 이탈(서울 집회 참가) 등을 이유로 노조간부 10명에 대해 해고를 결정한 것이다.

이후 한국오티스 해고자들의 고된 투쟁은 시작됐다. 천안 노동사무소 앞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한달여 간 노숙투쟁을 벌였으며, 12월 중순부터는 한달 보름 동안 서울 여의도 본사 앞 상경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신인식 해고자복지투쟁위 위원장은 "없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사회라는 점을 새롭게 깨우치게 됐다"며 "회사측 정세가 부당해다 이번 해고가 사실상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이상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천안·서울 등지에서 기나긴 장외투쟁을 벌였던 한국오티스 해고자들은 지난 1일 충남 당진공장으로 되돌아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2월 4일(목)

제 130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78년 1월 15일 영장도 없이 중앙정보부로 끌려간 뒤 벌써 21년, 조상록(54·무기정역·안동교도소) 씨는 '간첩'이라는 낙인 아래 기나긴 감옥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77년 일본 유학(명치대학 대학원 정치학)길에 나섰던 조 씨는 방학을 이용해 잠시 귀국했다가 중앙정보부로 연행됐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일본에 사는 친형 조상호 씨로부터 공작금 22만원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다는 혐의(간첩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정작 조상록 씨는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당했을 뿐이라며 간첩혐의 일체를 부인해왔다. 조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 단지 여과와 이력서, 사진 뿐이었다는 사실은 '사건조작'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런 조 씨에게도 석방의 기회는 찾아왔다. 지난해 8월 준법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석방이 가능했던 것이다. 70·80년대의 술한 조작간첩사건 연루자들은 이때 대부분 석방됐다. 그러나 20년을 복역한 조 씨는 석방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조 씨가 사상전향과 준법서약 제출을 거부해 온 이유는 간단했다. "사건이 조작되었는데 내가 왜 전향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최근 3·1절 사면결과 함께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석방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그 가족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조상록 씨의 석방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비전향장기수에 한해 준법서약 없이 석방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조 씨는 '남한에 가족을 둔' 비전

향장기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준법서약서가 석방의 조건으로 요구될 것이 예상되며, 그 경우 조 씨가 준법서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또 다시 기약없는 감옥생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전향장기수 현재 24명

한편 현재까지 흘러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북한에 가족을 둔' 비전향장기수 가운데 일부에게도 준법서약이 석방조건으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용각 씨등 초장기수 17명 외에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신광수(71세·15년 구금), 손성모(71세·19년 구금) 씨 역시 '북한에 가족을 둔' 비전향장기수에 해당되지만, 이들은 초장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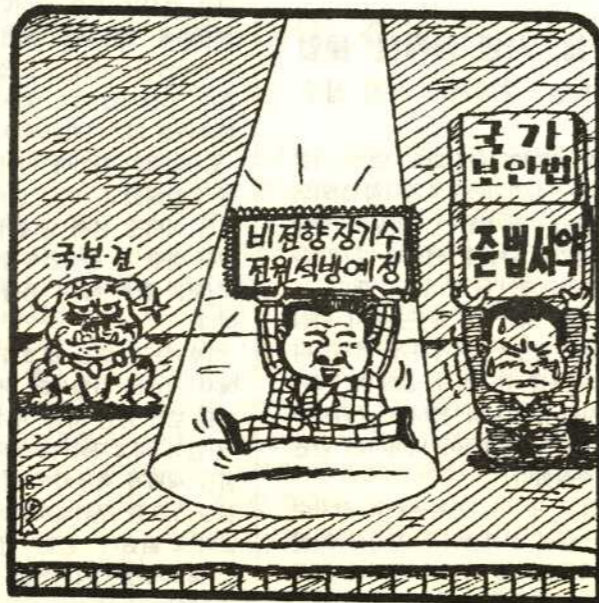
들과 별도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광수 씨와 손성모 씨는 모두 한국 전쟁시 월북했으며, 80년대초 남한에 입국했다가 간첩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 무기정역(신 씨는 88년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형을 살고 있다.

이와 관련, 3일 '전북 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 김승환)는 "신광수, 손성모 씨가 인구에 회자되는 '17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화와인권연대를 비롯한 전북지역 인권단체들은 손성모, 신광수 씨에 대한 석방운동을 각계에 요청하고 나섰다.

그밖에 최연소 장기수로 알려져 있는 강용주(38세·구미유학생사건·15년 구금) 씨와 92년 남한조선노동당사건(또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민예전 사건)으로 구속된 최호경, 장창호, 조덕원 씨도 비전향장기수에 포함되지만, 석방여부는 미지수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이름없는 내 형제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고상만 (천주교 인권위원회 간사)

기고

98년 5월 15일.

2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찾아왔다. 그는 군대에 가서 숨진 자신의 형 문제에 대해 2시간 동안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고 묻자 그는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다가 형에 대해 이야기하자 미용실 아주머니가 이곳을 찾아가 보라고 해서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관동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숨진 김훈 중위의 남동생이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찾아온 사연은 이랬다. 이 만남이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김훈 중위 사건에 관여하게 된 동기였다.

다양한 사연에 한가지 결론

김 중위 사망 의혹이 제기되면서 천주교 인권위에는 약 70여건에 달하는 군 내 희생자 가족의 사연이 접수됐다. 매일 자신의 아들, 형제,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의혹을 풀어달라는 호소가 목메인 흐느낌으로 전해져왔다.

사연도 다양했다. 현역을 비롯해 방위병에서 공익요원, 의경까지, 그리고 훈련병에서부터 대위까지, 무려 26년 전인 73년 사건부터 지난 1월 발생한 사건까지 정말 다양한 죽음의 사연들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렇듯 다양한 사건임에도 처리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일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자살 원인이다. 사망사건 대부분의 결론이 '내성적 성격에 의한 군복무 염증 자살'이었다. 즉 내성적 성격이 자살의 이유였다. 유서가 없는 자살의 원인을 군 당국은 그렇게 '처리'하지만 법의학자들은 이유없는 자살은 없다고 한다.

둘째는 수사를 착수하기도 전에 내려지는 일방적 자살 결론이다. 김훈 중위 사건에서도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자살'이라는 보도자료가 뿌려졌다. 그리고 수사관은 유족에게 묻는다. "여자와 헤어진 적이 있는가? 가정내 불화가 있는가? 성격에 문제가

있는가? 등등".

만약 이때 부모가 이혼이라도 했다면, 집이 좀 가난하다면, 하다못해 결핵이나 허리 디스크만 있어도 사망원인은 바로 '비관 자살'이 된다. 이 과정에서 유족의 상식적인 의혹이나 의문은 고려의 대상이 못된다. 자살이 진실이라고 믿는 그들에게는.

셋째는 부대측의 유족 박대다.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로 규정된 병역을 위해 옥처럼 키운 자식을 보낸 유족에게 군 당국의 박대는 자식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고통으로 남는다.

"집이 부산인데 아들 놈이 강원도 첩첩 산골에서 총으로 자살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 처참하더라구요. 하늘이 무너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부대측이 무조건 자살이라고 하면서 빨리 화장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자살을 믿을 수 없어 죽은 현장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봐야 뭐냐'며 보여주지 않고, 그럼 같이 근무한 소대원이라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면서 어서 자식이나 데리고 가라는데... 그래, 어쩔 수 없이 화장터로 가려했지만 부대측에서 시신을 신고 나올 차도 내주지 않더라고요. 어찌어찌해서 관공버스를 불러 그놈을 신고 나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나는 관공버스를 불러 자식을 데리고 나왔지만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데리고 올까 생각하니 이 나라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절규를 들으며 내내 용케 참아왔던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김훈 중위사건은

많은 이들이 묻는다. 앞으로 김훈 중위 사건은 어떻게 되냐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별합동조사단은 김 중위에 대해 이미 '자살'로 결론짓고 오는 2월 중순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특조단의 '자살' 발표는 '발표'가 아닌 '정치적 선언'이다. 여론 물이, 공정성을 상실한 비공개 수사, 자문위원 위촉이라는 복잡하고 화려한 절차를 거쳐 특조단은 어설픈 자살 결론을 선언하려는 것이다. '법의학자 공개토론회'라는 거창한 이름의 행사는 일반인의 참석이 불가능했고 사회자는 황당하게도 서울지검 현직 공안검사가 맡았다. 10가지 타살 의혹 중 8가지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이 무시되고 '오직 자살'만을 주장하는 수적 우위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관신도 집회장같은 이름뿐인 '공개토론회'에서 유족은 참담한 질망감을 느껴야 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김 중위 사망 사건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는 다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작정이다. 그리하여 힘있는 자들 다 빠져 나가는 '아름다운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머리 뺨뺨 꺾고 입대하여 참혹하게 숨겨진 힘없고, 맥없고, 권력없는 이 땅의 이름없는 내 형제들 넋을 달래주기 위해 우리는 묵묵히 갈 길을 갈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은 각종 인권 현안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 인권하루소식 기사에 대한 의견(반론 또는 찬성의견) 등을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제기를 통해 <인권하루소식>이 좀 더 풍부한 인권토론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2월 5일(금)

제 130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노점상 집결, 성남시 '들썩'

폭력단속 중단·생존권보장 촉구

4일 오후 1시 성남시 모란역 앞 공터. 성남을 비롯한 서울, 시흥, 수원 등 수도권 일대 노점상 1천여 명이 집결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노점단속 중단! 생존권 보장! 노점금지구역 폐지! 노점합법화!" 등을 촉구하는 노점상들의 열기가 추위도 녹이는 가운데, 연단에 선 권영길 국민승리21 대표는 "노점을 허용하지 않겠

다면 너희가 우리를 먹여 살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노점상들의 생존권 투쟁을 격려했다.

전국노점상연합(의장 이영남, 전노련)이 주최한 이날 집회는 최근 성남 시에서 벌어진 일련의 노점단속 사태와 성남시의 반(反)노점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본지 1월 8, 9일 자 참조). 성남시는 시내에서 일체의 노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

수해 왔으며, 지난 1월초엔 서현역 앞 노점에 대한 폭력단속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이영남 전노련 의장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독 성남시만 노점 불가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노점이 허용되어야만 빈민들과 실직자들의 살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살기 위해 꿈틀대는 것마저 단속하는 것은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며 "김대중 정권이 반민중적 정책을 펴는 이상, 우리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집회에 앞서 전국노점상연합은 오전 10시 성남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계 철거단속의 중단과 생존권 보장 △폭력단속 책임자 처벌 및 구형 단속반 해체 △서현역 앞 단속으로 부상을 입은 노점상에 대한 치료비 배상 △전노련 지도부에 대한 탄압 중단 △노점 절대금지구역 철폐 및 노점상 합법화 등을 촉구했다.

<인터뷰> 전국노점상연합 의장 이영남

"기업형 노점, 우리가 막는다"

전국노점상연합 의장을 맡은 뒤에도 주말이면 청량리 로터리 부근에서 인형장사를 하며 활동비를 마련한다는 이영남(39) 의장. 4일 성남 모란역 앞 집회에 참석한 이 의장을 만났다.

◆ 성남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게된 이유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백여 곳 가운데 유독 성남시만 노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1월 6일 폭력단속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성남시는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공공근로사업 기금도 이미 바닥 난 성남시가 노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업자들의 자활의지마저 꺾는 것이다."

◆ 전국적으로 노점상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1백만명 정도로 집계된다. IMF이후엔 노점이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가운데 전노련 회원은 4-5천명 정도다."

◆ 일부에선 전노련을 기업형 노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기업형 노점은 관청의 비호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 전노련은 생계형 노점의 전국조직일 뿐이다. 전국 노점 가운데 3-4%가 기업형 노점으로 추측되는데, 기업형 노점을 막는 것은 전노련 조직의 의무이기도 하다."

◆ 전노련 회원과 비회원 간에 마찰이 잦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먹고살기 위해 하는 일이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노점금지구역이 철폐된다면 노점상 간의 자리다툼이나 마찰도 피할 수 있다."

◆ 전노련 간부들에 대해 경찰이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유는

"폭력단속 관련자들은 밀짚이 두면서, 1월 12일 집회에서의 몸싸움을 이유로 이필두 고문 등 전노련 간부 3명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노점상들의 생존권 투쟁이 거세지니까 이를 막기 위한 의도인 것 같다."

"허구로 드러난 인권정책"

청년진보당 등, 유엔결정 수용 촉구

지난달 27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시정조치'를 거부한 것과 관련, 청년진보당(대표 최혜)과 한국국제문제연구소(대표 이창수)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정을 수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관련 기사 본지 1월 29일, 30일자).

청년진보당은 "인권과 민주주의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는 법무부의 반인권적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문제연구소도 "법무부의 입장은 김대중 정권의 이른바 인권정책이 허구 또는 거짓임을 스스로 공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국제사회주의자(IS) 사건 재판 계류자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2백여 명이 참석한 속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김대중 정권 1년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김삼석(민권공대위 집행위원) 씨는 "반민주적인 정부일수록 공안기관, 공안관계법, 공안사법이라는 3자가 국가권력과 법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며 "김대중 정권은 역대 정권보다 더 철저한 공안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우봉(IS사건 재판 계류자) 씨는 "국가보안법이 노동자 운동과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을 국가보안법 철폐 캠페인에 동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시절에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안한 민주질서수호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더욱 정교화한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개정 또는 대체입법 따위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호(청년진보당 정책국) 씨는 "국가보안법은 계급중의 이념적 기반인 반공주의를 제도화한 법"이라며 "국보법의 폐지는 곧 도덕화된 '반공주의'의 폐기"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또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계층·연령에 파고들 수 있는 다양한 논리개발을 통해 사회전반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위해 '국보법 철폐를 위한 전세계 민중과 국제네트웍 1천만 인 서명운동'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종자하는 '가상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이 제안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조건없는 석방 △범민련, 한총련, 국제사회주의자에 대한 이적규정 철폐 △영남위원회 반국가단체 규정 철폐 △준법서약제 철폐를 주장했다.

강제철거 끝나자 주민구속

안양시 유진상가

지난 2일 강제철거를 당한 안양시 유진상가 주민들이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유진상가 주민과 오전동 철대위 주민, 학생 등 70여명은 3일 오후 2시 유진상가 앞에서 강제철거규탄 집회를 열고 이미 철거된 상가터에 천막을 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철거용역과 경찰의 방해로 천막은 설치되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철거용역과 주민들의 몸싸움이 발생, 몇몇 주민들이 철거용역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

주민들은 오후 5시경 다시 한번 천막 설치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자진 해산했다. 하지만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이동하던 주민들은 느닷없이 뒤따라 온 경찰에 의해 포위당했으며, 곧이어 유진상가 철대위 위원장 정동열(56세) 씨가 연행됐다. 정동열 위원장은 지난 2일 연행된 안재삼(30), 유세문(34), 김현원(40) 씨 등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관련 청년진보당(대표 최혜)은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경찰력을 동원해 철거를 자행하고 구속까지 서슴지 않는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고 규탄하며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재개발법에 명시돼 있는 영구임대상가 건립과 가수용상가 입주를 보장 시행할 것과 구속된 주민들을 즉각적

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일 철거과정에서 부상당한 유진상가 주민 안경환(40) 씨는 잇몸이 함몰되어 전치 7개월 진단을 받았으며, 김철환(50) 씨 역시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군사정권 구속자 여전히 감옥에

민가협, 강용주 씨 등 석방촉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김정숙)는 4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강용주, 조상록, 신광수, 손성모, 최호경, 장창호, 조덕원 씨 등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구속된 양심수들의 석방을 촉구했다(본지 2월 4일자 참조).

이날 집회에서 강용주 씨와 조상록 씨의 가족들은 "국민을 죽인 독재자들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반면 독재에 맞서 싸우던 사람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며 군사독재시절 수감된 양심수 7명의 조건없는 석방을 주장했다.

한편 민가협은 지난 3일부터 매일 낮 12시-1시까지 서울역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건없는 석방" 촉구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의장 이창복, 추모단체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통해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추모단체연대회의는 "김대중 정권이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 할 것이 아니라 조건없이 양심수 전원을 석방해야 하며, 북측에 가족이 있는 비전향장기수의 경우, '거리'가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을 제도적으로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범민련, 한총련 등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2월 6일(토)
제 130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국정원, 대질 한 번 해볼까”

탈북주민들, 국정원에 공동기자회견 요청

국가정보원(구 안기부)의 인권유린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던져줬던 탈북 주민들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원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요청하고 나섰다.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협회" (회장 한창권, 이하 북한인협회) 소속 탈북주민들은 지난 1월 15일 인권단체들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입국 직후부터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당한 고문등 인권침해를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 국정원측이 내의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뿌리며 탈북자들의 폭로내용이 거짓이라고 홍보하고 나서자, 탈북주민들이 국정원측과 공동기자회견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국정원은 언론사에 뿌린 해명자료에서 "국정원의 가혹행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인권유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작금에 불만을 품은 극렬 소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4일 성명을 발표한 북한인협회는 "누가 진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지 밝히기 위해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정말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 이는 공권력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므로 우리를 고소하라"며 "우리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창권 회장은 "기자회견 이후 국정

원측에서 접촉해 온 적은 없지만, 북한인협회 소속이 아닌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회유하고 있다"며 "이번 요청에 대해서도 아직 국정원측의 반응은 없었다"고 밝혔다.

양지마을 이사장 4년 선고

인권유린 · 재산착복 인정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행위 등으로 인해 구속기소된 양지마을

전 이사장 노재중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5일 대전지법 재정합의 5부(주심 이강훈 판사)는 폭행·감금·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양지마을 원장 박종구 씨와 송현원 원장 박정자 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고, 양지마을의 비위사실을 눈감아줬던 연기군청 공무원 이규성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재중 씨의 인권침해 및 재산착복의 정도가 지나쳐 중형이 마땅하며, 공무원 이규성 씨는 실질적 감독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법무부는 정말 재미있는 부서다. '합리'를 중시하는 법률가들이 많이 모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지'와 '궤변'에 더 능숙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국가보안법 전력자인 정화려 씨가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이 무슨 이유로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며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상 등은 보안업무조정규정에 의해 3급 비밀로 분류·관리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우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내세운 이유들은 선뜻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다. 법무부는 △보안관찰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보안관찰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며 △자료공개가 피관찰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북한의 흑색선전 자료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되묻고 싶다. 이미 정해진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 되지도 않는 이유를 내세워 감시·통제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야말로 사생활 침해가 아닌 가? 지난 93년 감수령 국회의원이 보안관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검찰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95년 내무부장관의 국회보고와 96년 전남지방경찰청장의 국회보고를 통해 보안관찰 관련 내용이 일부 알려졌지만, 북한의 흑색선전에 이용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정화려 씨는 법무부의 자료공개 거부에 대해 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리는 만무하다. 자료를 공개해봤자 '불합리'한 보안관찰 처분의 실상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제1회 인권대회 개최 ◆
· 일시 : 2월 6일(토) 낮 2시30분
· 장소 : 종묘공원

'진실'마저 가두는 교도소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다시 미궁으로

지난해 11월, 전주교도소에서는 재소자 배재문(당시 40세) 씨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교도소측은 "배 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가 유족과 함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두달 여간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문만식(평화와인권) 편집장)씨의 얘기를 들어봤다.

■ 사건에 개입하게 된 이유는?
"교정시설에서 재소자가 사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지만 번번이 죽음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곤 했다. 이번 사건도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누군가 그 의혹을 밝혀야한다고 생각했다."

■ 진상규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검찰은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 법무부측 역시 부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배 씨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단정하는 등 교도소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교도소측의 태도였다."

■ 교도소측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모든 사안에 대해 비협조적이고, 사건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다. 교도소측은 사건현장을 공개하지 않다가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서야 깨끗이 정리된 현장을 공개했고, 배 씨가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가 뒤에 가서 유서 2통을 공개했다. 또 교도소측은 가족들에게 '사망전날 배 씨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입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말을 뒤집었다. 이렇듯 비협조적이고 일관성 없는 교도소측의 태도는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강하게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 사인규명을 위한 결정적 단서가 교도소측에 의해 고의로 손실됐는데?

"국립과학연구소는 목을 맨 끈이 사인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가족들은 교도소측에 끈을 줄 것을 요구했고 교도소측은 며칠 후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교도소측은 약속을 저버리고 그 끈을 불태워버렸다. 이로써 배 씨의 사인을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손실되었고 결국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 의혹은 결국 풀릴 수 없는 것인가?
"배 씨의 사건에서와 같이 교도소내 사망사건의 의혹을 해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피해자는 죽은 뒤고 유족들은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교도소측만이 사실을 밝힐 수 있는데 교도소측은 사건공개조차 꺼리고 있고, 자료 및 현장공개를 요구해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거부한다. 따라서 유족과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인 진상규명에 나선다해도 교도소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사건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 배 씨의 죽음이 결국 자살로 결론이 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왜·축소에 급급하고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교도소측의 관행을 바꿔나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계획이다."

"국보법 문제가 있긴 한데..."

IS 항소심 유죄 선고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IS)그룹 관련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형사2부, 부장판사 박승하)는 원심대로 박효근(징역 2년) 씨등 4명에게는 실형을, 주수영(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씨등 7명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보안법에 (피고인 주장처럼) 그런 점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된 만큼, 법률상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 IS 재판계류자들은 "승리한 재판"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는 담당재판부인 형사2부가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의철 씨를 법정구속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2부는 이의철 씨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계속 '사회주의자'임을 선언하자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날 불구속재판을 받았던 한 IS 관련자는 "이의철 씨를 법정구속한 재판부였기 때문에 우리도 법정구속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재판부가 종전의 입장을 번복한 것은 우리 투쟁의 성과"라고 밝혔다.

민청노회 구속자 첫 재판

검찰·피고인 '이적단체' 공방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청노회(민청노회) 회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5일 오전 10시 형사합의 3부(부장판사 김옥신) 심리로 인천지법 104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심문에서 "민청노회는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이적단체로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왔다"며 "그 활동의 일환으로 조직확산과 조직원 교양을 위해 '민족사랑의 길'이라는 기관지를 발간·배포하는 한편 범민족 대회에 참여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선규(30세) 부회장 등 구속자 7명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민청노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 방식의 통일, 평화협정 체결 등의 내용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한 바 있고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2월 22일 오후 2시.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양심수 석방’ 시선집중

김수환 추기경 “폭넓은 사면” 요청

국내외 각계로부터 양심수 석방에 대한 요구와 입장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은 8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해, 오는 3·1절 특사에서 양심수를 폭넓게 석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추기경은 또 재외 한국인들의 사면복권과 입국 허용, 사형수 전제천 씨의 사면복권 등도 함께 요청했다.

김 추기경은 이날 서한에서 사면대상인 양심수들의 명단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대대적인 석방조치를 촉구했다. 김 추기경은 세계최장기수 우용각(42년 구금) 씨 등 초장기수 17명에 대해,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에 병약한 사람들”이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안재구, 류라진, 조상록, 이화춘, 강용주, 최호경 씨 등 장기복역중인 양심수들의 석방도 요청했다. 더불어 “설중호 씨등 학생운동 사건으로 구속 중인 모든 학생들을 석방해 학업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형수 전제천 씨 사면도 요청

이날 김수환 추기경이 사면복권을 요청한 대상에는 양심수 외에 무기 또는 사형수로 복역중인 외국인노동자들도 포함됐다. 김 추기경이 석방을 요청한 사람은 조선족 동포 전제천 씨와 파키스탄인 무하마드 아지즈, 아미르 자밀 씨 등이다.

전제천 씨는 지난 96년 ‘페스카마호 선상난관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돼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며, 김 추기경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전 씨의 사면을 탄원해 왔다. 또 92년 성남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두 파키스탄인들은 각계의 탄원 끝에 지난해 8·15특사에서 무기로 감형된 바 있으나, 김 추기경은 이번 서한에서 “이들을 사면해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재외 한국인 입국허용 요청

김수환 추기경은 아직 사면복권이 아닌 재외 한국인에 대한 선처도 요청했다. 김 추기경은 “이철, 서승, 손유형 씨등 70-80년대 모국을 방문했다가 구속됐던 재외 한국인 31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했으며, “제3국에 머물고 있으면서 민주화운동 경력 때문에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외 한국인 31명은 지난달 30일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사면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

엠네스티 ‘준법서약 우려’

국보법 개정도 촉구

국제엠네스티는 8일 한국정부에 초장기수 17명에 대한 석방을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엠네스티는 “초장기수 17명의 석방은 이미 이뤄졌어야 할 문제였다”며 “한국정부는 양심수 사면에 이들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엠네스티는 또 “강용주, 조상록 씨등 다른 양심수들이 준법서약을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면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비폭력적 활동으로 인해 수감중인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1999년 2월 9일(화)

제 130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이러 엠네스티는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보법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석방된 양심수들도 다시 재수감될 것이고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취하·수배해제도’

전북지역 5개 단체 기자회견

전북 민가협 등 전북지역 5개 단체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손성모, 신광수, 최호경 씨 등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손성모(71·19년 구금), 신광수(71·15년 구금) 씨가 북에 가족을 둔 비전향장기수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구금연수가 20년이 넘는 ‘초장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면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양심수 석방의 결집돌인 준법서약제 폐지 △조사중이거나 재판중인 모든 양심수에 대한 공소취하 △정치적 수배자에 대한 수배조치 해제 등을 촉구했다.

.....주요 공판 안내

- ▶ 2월 11일(목)
 - 장민철(반국가단체구성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신건
 - 정태홍(국보법 잠입·탈출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선고
 - 유덕상(업무방해 등) 오전 11시, 서울지법 317호, 3단독, 속행
- ▶ 2월 12일(금)
 - 안용정(보안관찰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9호, 특별 9부, 속행

대학교수 “양심수 군 면제” 촉구

738명 서명받아 대통령에 탄원

김영삼 정권 아래서 구속돼 2년 미만을 복역하고 나온 청년 양심수들의 군 문제와 관련, 대학교수들이 이들의 군 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강정구(동국대), 유초하(충북대),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등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육화관(조계사 옆)에서 ‘청년 양심수 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교수 대표단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교수 7백38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발표했다. 7백38명의 교수들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탄원서에서 “민주화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심수들은 이미 수배와 구속을 거치며 군대 입영 연령기를 초과한 상태”라며 “이들이 군대에 입영해 또 다시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국방부가 조속히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년 양심수들의 사회 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정권 아래서 구속됐던 청년 양심수 가운데 복역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사람은 약 4백여 명에 이른다. 또한 이들 중에는 두 차례 이상 구속돼 복역기간이 모두 3년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단일 복역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136조는 ‘단일 복역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군대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자리 요구’ 시위, 폭력진압 발생

경기 광주 일용노동자 ‘군민대회’ 도중

일자리 마련과 생계대책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의 집회를 경찰이 폭력을 사용하며 진압해 발생을 빚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4시 경기도 광주군청 앞에서는 광주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광일노조) 주최로 ‘건설노동자 생존권쟁취를 위한 3차 광주군민대회’가 열렸으며, 집회에 이은 노동자들의 행진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이 행사됐다고 광일노조 측은 밝혔다.

광일노조측은 “약 4백여 명의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광주군청을 향해 행진하자 경찰이 길을 막고 강제해산에 나섰다”며 “우리가 ‘평화적 집회’임을 주장하며 항의하자 경찰은 곤봉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무차별하게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과정에서 여성노동자 박 아무개 씨가 경찰에게 가슴을 잡히고 얼굴을 구타당하는 등 성추행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공개사과를 요청했다.

한편 광일노조는 “광주군청측이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는 노동자에게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구체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히며, △조합 탄압금지 △무료취업알선센터에 대한 지원 △생존권보장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주간/인/권/호/름

(99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 2월 1일(월)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 80년대 이후 발생한 군내 의문사 사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혀/택시회사 금강운수, 노동부가 금강운수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의 철회를 요구하자 오히려 징계 강화해 물의/부산지역 오징어잡이 어민들, 한일 어업협정 백지화 촉구하며 30여 척 어선 동원해 해상시위

◆ 2월 2일(화)

안양시 유진상가에 새벽녘 철거용역 들이닥쳐 건물 강제철거하고 주민 9명 연행/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지법, 어린이들을 인터넷 포르노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에 대해 “법 취지는 이해하나 보호라는 명분으로 장차 어린이들이 온전히 물려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위헌판정 내려

◆ 2월 3일(수)

경찰청, 전국 경찰서에 보관중인 호송 피의자용 족쇄를 전량 폐기하라고 지시하고 피의자에게 족쇄를 채운 함양경찰서장 면직 처분/공보실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법 앞에 불평등하다”고 답변

◆ 2월 4일(목)

대구시립합창단 여성단원 16명, 상임지휘자 노 아무개 씨에게서 성희롱과 전화공세에 시달려왔다고 폭로/탈북주민들, 과거 안기부 인권유린 사실의 진실규명을 위해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에 공동기자회견 제안/대전지방법원 재정합의 5부, 양지마을 노재중 이사장에 대해 폭행 및 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전국노조정상연합 회원 1천여명, 성남시에서 집회 갖고 “폭력단속 중단, 생존권 보장” 촉구/일본 정부, 외국인등록법에 규정된 지문날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불법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재죄’를 신설해 단속 강화키로/미국 뉴욕경찰 소속 백인 형사 4명이 비무장 상태인 흑인 시민에게 총알 41발 발사해 숨지게 함

◆ 2월 5일(금)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 같은 위안부 출신으로 중국에 살고 있는 문명금 할머니의 귀향비용 마련 나서/서울시교육청,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학생지도방안을 담은 ‘집단따돌림 이렇게 지도합시다’는 책자를 펴내 시내 초·중·고교에 배포/시카고 교도소에서 17번째 사형수로 복역중이던 앤서니 포터 씨, 진범이 잡힘에 따라 풀려나

◆ 2월 7일(일)

보건복지부, 오는 3월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의료보험료를 현재의 4.2%에서 5.6%로 높이겠다고 밝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2월 10일(수)

제 130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국방부는 '진상규명' 횡방꾼

"군 의문사 조사, 제3기관에 맡겨야"

"군"이라는 장막 앞에서는 아무 것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각종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방부가 의문사 재조사 방침을 밝히고 나섰지만, 정작 '군'이 진상조사의 주체로 나서는데 대한 회의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군 의문사 처리과정의 개선'을 위한 설명회에는 유가족 1백여 명이 참석해 군 당국의 무성의한 조사실태와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기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1일 아들의 사망소식을 접했다는 이정균 씨는 "사인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한계를 느낀 채 결국 아들을 화장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48가지의 의문점을 보름간 정리해 군 당국에 보내봤지만, 이 미 자살로 결론을 내린 헌병대가 재수사를 해봤자 헛일이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심지어 군 당국이 '민사소송이나 하지 어찌 왜 왔냐'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유족에 대한 박대 뿐 아니라, 군 당국의 부실한 초동수사와 증거 훼손 등의 문제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설명회를 주최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사망한 한군수 씨의 경우, 군 당국이 유력한 증거물인 '피묻은 목도리'를 유족이 확인하기도 전에 세탁해 버렸다"고 밝혔다. 당시 군 당국은 "목도리가 한 씨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부대원들이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천주교인권위는 전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고상만 간사는 "군에서 발생한 사건을 군에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군 내 사망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또는 검찰 등 제3의 기관이 조사를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가족협의회의 허영춘 씨는 "지난해 의문사 진상규명 캠페인 도중 누군가가 영정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며 "증언에

따른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많은 증인들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훈 중위 사건과 관련, 이덕우 변호사는 "군 당국이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 특별합동조사단에서 밝힌 어떠한 것도 당초 천주교 인권위나 노여수 박사가 제기한 타살 의혹을 불식시킬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예외적인 사실만 들어 자살 쪽으로 끼워 맞추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군내 의문사 사건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기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화해마을 이재민, 기독교회관 농성 돌입

"가난한 이웃의 존재 알리고 싶다"

지난 1월 19일 발생한 화재로 117가구 373명이 이재민으로 전락한 서울 송파구 화해마을. 화재 발생 후 20여일째 구청에 재해복구 지원을 요청해오던 주민들이 9일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에 돌입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1일자). 이재민들은 복구지원을 거부하는 구청에 항의하며 2월 2, 4일 이틀간 노숙 투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구청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집단농성을 통해 시민들의 응원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9일 오후 기독교회관 7층에 모인 1백50여 명의 주민들은 열심히 '투쟁가'를 부르며 결의를 다졌고, 이어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와 감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 등 종교·시민단체들은 "화해마을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구청의 말처럼 오로지 법대로 한다면, 이곳 주민들은 그냥 죽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호 목사(감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13년간 쓰레기더미 위에서 수돗물도 없이 살아온 이웃들을 외면할 수 없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주민들이 생활의 안정을 되찾도록 주거공간을 복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이번 화재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벅찬 것이었지만, 민고 호소한 관청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우리들 내쫓았다"고 설움을 토로했다. 또한 "우리는 불난 것을 계기로 한몫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가난한 이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화재 이전 상태로의 원상복구 △생계능력이 상실된 화재민에 대한 한시적 생계보장 △수돗물 공급 △제해지역 선포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오는 11일까지 사흘간 철야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백주대낮 도심 '납치극'

동의대생 9시간 동안 불법 구금

최근 부산 동의대생이 공안기관에 의해 납치돼 9시간 동안 불법 구금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컴퓨터통신을 통해 폭로된 이번 사건은 부산지역 보안 수사대의 '작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은 피해를 당한 동의대 김선우(영문과 92학번, 학원자주회추진위원장) 씨의 진술을 토대로 구성한 사건 개요며, 이는 공안세력이 여전히 불법 인권유린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지난 1월 30일 오전 7시, 김선우 씨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느닷없이 나타난 두 남자에 의해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졌다. 두 남자는 김 씨의 눈을 가린 채 40여분 동안 이동했고, 일행이 도착한 곳은 참고 비슷한 건물이었다.

▶ 그로부터 1시간 뒤, 김 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너도 한사모(한총련을 사랑하는 모임, 98년 12월 동의대생 3명이 이 조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됨) 조직원이지?"(수사관) "작년에 친구들이 잡혀가면서 처음 들어본 조직이다. 조직체계도를 갖고 있다면 내 이름을 확인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김 씨)

수사관들은 두꺼운 서류봉투를 들고와 살펴보니 "이름이 없다"고 말했다.

◎ 자료집 판매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부를 이 자료집에 담았습니다. △왜 국가인권위원회는 설치되어야 하는가 △법무부 인권법안은 무슨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의 주요 쟁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 가격: 1천원

· 문의: 배경내 (02-741-5363)

다. 이후 수사관들은 김 씨에게 구속된 학생들과의 관계를 계속 캐묻다가 조사를 중단했다.

▶ 오전 11시경, 김 씨에 대한 조사가 재개됐다.

"너 한총련 대의원이지?"(수사관) "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도 아닌데 어떻게 대의원이 될 수 있는가?"(김 씨) "봐라 너희 학교는 학자추장(학원자주회추진위원장)도 대의원이 아니냐?"(수사관) "어디에 학자추장이 대의원으로 표기되어 있는가?"(김 씨)

수사관들이 들고 온 책자엔 '간선직 대의원 2인'이라는 문구만 있을 따름이었고, 수사관들은 더 이상 김 씨를

추궁하지 못했다.

▶ 오후 12시 20분경.

"한총련 탈퇴서다. 써라."(수사관) "내가 가입하지도 않은 조직의 탈퇴서를 쓰라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김 씨)

수사관들은 이번에도 말문이 막혔다.

▶ 오후 2시 30분경.

"지난 00일 00집회에 간 적이 있는가?"(수사관) "없다."(김 씨) "증거를 가지고 있다. 사진이랑 다 있다. 시치미때도 소용없다."(수사관) "사진이랑 자료를 보여달라."(김 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수사관들은 이어 합법집회 참석 여부까지 추궁하고 나섰다.

▶ 오후 4시경.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한 수사관들은 김 씨의 두 눈을 가린 채 다시 승용차에 태우고는 김 씨를 집 근처에 데려다놓고 사라졌다.

◆...새로나온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1999/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박지현 /123쪽

최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전력자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주고 있다. 도대체 보안관찰이란 무엇인가?

보안관찰이란 특정 범죄사실(국가보안법 위반죄, 내란죄 등)로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들에 대해 석달에 한 번 씩 동향신고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한마디로 출소자들에게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합법화하는 조치다. 보안관찰법은 이같은 보안관찰처분의 목적을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올해 서울대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지현 씨는 자신의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안관찰법은 그 입법목적, 대상자, 집행되는 내용, 절차, 실효성 등 모든 면에서 헌법 및 형사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안관찰법은 양심·사상·집회 및 결사·표현·거주이전·사생활·통신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면서도 그 침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헌법률"이라고 결론지었다.

지난 97년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보안관찰법의 법적 성격 △보안관찰법의 비교법적 고찰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현행 보안관찰법의 해석 및 운영실태 △보안관찰법상 형사처벌규정의 문제 △사상범 처벌의 비교법적 고찰 등을 통해 보안관찰법의 법적·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한편, 이 논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보안관찰대상자는 최소 6천여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자는 국정감사 결과 94년 현재 보안관찰대상자의 수가 6천1백89명이었다고 소개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타입)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2월 11일(목)

제 130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

지난해 12월을 고비로 한풀 켜었던 국가인권기구 설치 논의가 다시 급류를 타고 있다.

9일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재계된 국가인권기구 논의는 김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이달 안으로 결론을 보게 될 전망이다. 여기엔 김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일 당정협의에서도 법무부가 '특수법인 형태의 국가인권기구'안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인권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민간단체들은 10일 앞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등 긴급대응에 나섰다. 민간단체들은 "독립적 국가기

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거듭 촉구하며, 독립성 보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무부와 박상천 장관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변, 전국연합, 경실련 등 31개 민간단체가 소속해 있는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자신의 기득권 유지·확대를 위해 외국의 입법례를 왜곡하는 등 제변과 부도덕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민주개혁국민연합,

민가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도 10일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권력의 시너로서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쓰게 했던 법무부가 여전히 부처이기주의와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박상천 장관의 퇴진 △충분한 조사권과 실질적 구제권한, 예산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공공근로 임금 삭감

실직자 극빈화 우려

공공근로의 하루임금이 올 들어 평균 3천원씩, 최저 1만9천원까지 삭감돼 실직자들이 점점 극빈의 나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IMF로 시중임금이 떨어진데다 일부 3D업종과 농촌인력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물리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제대로 된 실업대책 하나 없는 현실에서 공공근로는 실업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며 "이번 조치는 공공근로 임금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업자의 처지와 불가상승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전주실업자지원센터는 "즉각 임금삭감 철회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심수 사면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관련 3단체 공동기자회견

- 때: 2월 11일(목) 오전 10시
- 곳: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주최: 한국인권단체협의회/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종교 4개 단체(천주교/불교/기독교/원불교)

만화사랑방



이동수

유가족, 눈물의 백일기도

국회앞 농성 1백일...기약없는 명예회복

가슴속에 묻은 자식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유가족들의 농성이 어느덧 1백일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4일 '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 인도에서 시작된 유가족들의 농성은 한겨울이 다 가도록 그 끝을 보지 못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바람막이 벽조차 없는 인도 위에 장판 한 장, 비닐 두 겹으로 천막을 엮었고, 식수·전기·화장실 등 무엇보다 갖춰지지 않은 농성장에서 간이 난로의 온기에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이미 60줄을 넘어선 노인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왔고,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을 쫓아다니며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고령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같은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에는 국민회의가 '민주화운동관련 유가족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진전을 보게 됐고, 유가족들은 한 순간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도 벌써 두 달. 차일피일 특별법 제정은 미뤄져 왔고, 법안은 다른 산적한 서류들과 함께 의사당에서 잠자고 있는 형편이다. 법 제정을 추진했던 국민회의측은 설날 연휴가 끝나고 가동될 임시국회에서 명예회복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시 한번 유가족들을 달래고 있지만,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는 국회가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11일로 농성 1백일 제를 맞지만 유가족들은 오히려 답답한 모습을 보인다. "일이 추진되는 동안에는 우리에겐 첫날이나 1백일 제나 똑같은 날이지. 여기 있는 모두가 항상 처음이라는 각오로 일에 임하려고 노력하는 거지"라며 미소짓는 유가족. 그의 주름진 얼굴 곳곳에 피로한 기색이 가득했지만, 인젠가 찾아올 봄날을 기다리는 희망의 빛도 서려 있었다.

◎ 자료집 판매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부를 이 자료집에 담았습니다. △왜 국가인권위원회는 설치되어야 하는가 △법무부 인권법안은 무슨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의 주요 쟁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 가격: 1천원 / 문의: 배경내 (02-741-5363)

<기고> 체벌옹호는 강자의 논리

이동욱(경희대생, 서울 중랑구 중화동)

"한국사회에서 가장 힘이 약하고 가장 억압받는 집단은 어떤 집단일까요?" 만약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청소년"이라고 답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억압은 오래 전부터 너무나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 청소년에 대한 억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고 심각한 억압은 바로 체벌이다. 체벌옹호자들은 교육을 위하여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목적이 체벌이라는 폭력적 수단을 정당화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논리는 명백히 잘못된 논리다.

교육을 위해 체벌을 한다는 얘기 자체부터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체벌 자체가 반교육적이기 때문이다. 체벌의 확실한 효과는 폭력 가르치기다. 맞고서 자란 사람은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때리는 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반교육적인 일인가? 영화에서 조금이라도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면 청소년 관람불가로 만들어버리는 체벌옹호자들이 폭력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체벌에 대해서는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니 이는 명백한 모순이다.

체벌은 폭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체벌이라는 비인간적 행위가 아직 한국사회에서 지속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은 제일 힘없고 만만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힘이 없다는 것이 체벌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사실 처음부터 한국사회는 약한 계층인 청소년을 다루는 데 있어 수단의 정당성이나 인권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밤 시간대의 청소년 범죄율이 급증했다고 치자. 만약 이렇다면 한국사회는 과연 어떤 조치를 강구할까? 아마 청소년에게 야간통행금지령을 내리거나 적어도 심하게 고려할 것이다. 물론 이때 청소년의 인권은 별로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밤 시간대의 성인 범죄율이 급증했다고 치자. 이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 장담하건대 청소년의 경우처럼 야간통행금지령이 내리거나 고려되지는 않을 것이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니까...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의 해법은 인권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성인과 관련된 문제의 해법은 왜 인권을 고려해야 할까? 성인은 나이가 많으니까?

체벌은 결국 철저한 힘의 논리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폭력에 불과하다. 폭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체벌옹호자들은 교육상 청소년에 대해 체벌이 불가피하다면 성인들 먼저 체벌로 다스리기 바란다. 맞을 짓은 성인이 더 많이 하는데 왜 청소년만 맞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아무쪼록 한국사회에서 하루 빨리 체벌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2월 12일(금)

제 130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의혹!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통령에 '국가인권위' 왜곡보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문제와 관련해 유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뉴욕을 방문, 지난 2월 1일 귀국한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새로 창설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국민회의, 그리고 민간단체들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 비서관은 지난 1월말 4박5일간 뉴욕을 방문했으며, 엘리자베스 유엔고등판무관 뉴욕사무소 부소장 등을 만나 국가인권위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돌아왔다. 그러나 박 비서관이 유엔 전문가들에게 인권위 설치와 관련된 한국의 상황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의도적으로 법무부에 유리한 의견을 끌어낸 뒤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는 최근 항간에 심심찮게 돌고 있는, "유엔 전문가들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법무부 법안을 지지했다"는 소문과 관련, 이 "터무니없는" 소문의 진원지가 박주선 비서관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추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박주선 씨가 법무부 법안에 유리한 외국인 증언을 의도적으로 도출할 목적으로 뉴욕에서 활동했으며 "수집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 유리하게 왜곡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공추위는 "박 비서관이 뉴욕에서 한국의 국가인권위 설립준비와 관련한 상황을 어떻

게 설명하고 답변을 얻었는지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비서관은 11일 저녁 새정치국민회의가 주최한 '인권단체 초청 연찬회'에 참석, 민간단체들의 의혹을 부정하며 "국가인권기구가 독립적 기구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미국에서 듣고 왔고 이를 대통령에게 공정하게 정리해서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비서관은 출국 전 민간단체의 법안은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나마 국민회의 안에 대해서조차 무

지를 나타내며 "국민회의와 법무부 측 법안을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기초적 이해조차 없이 유엔 전문가들을 만난 사실을 드러냈다.

박 비서관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공추위는 "박 비서관이 한국의 상황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의 쟁점 등에 대해 왜곡된 설명을 했다는 점의 의혹을 넘어 확신의 수준에 이르렀다"며 "박 비서관은 고의가 아니었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법무부의 입장만을 국제사회에 선전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구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 비서관으로부터 왜곡된 보고를 들은 대통령이 국가인권위 설립에 대해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단체, 국민회의 점거농성

"조건없는 석방" 요구...서울도 인권·종교단체 기자회견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11일 오후 3시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구속자 가족 등 60여 명은 '조건 없는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새정치국민회의 전남도지부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광주전남연합 등은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 권한대행 앞으로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국민회의 측과 수 차례 면담을 갖고 조건 없는 양심수 사면을 건의했지만 국민회의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준법서약서를 전제로 한 석방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즉각 지지성명을 발표해 "김대중 정부는 역대 정권보다 더 많은 구속자를 양산하고 그것도 모자라 양심적인 인사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울가미를 씌우고 준법서약서를 강요함으로써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난하며, "양심수의 조건 없는 사면과 영남위 사건 무효화,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역시 성명을 발표해 "정부는 하살자이자 내란수괴인 전두환 일당에 대해서는 '준법서약서'는 커녕 국민들에 대한 반성문 하나 없이 조건 없는 사면을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수들에 대해서는 '준법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와 종교계 4개 단체 등은 11일 서울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김대중 정부는 사안마다 반인권적 처사로 일관해 왔다"며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화훼마을 이재민 한 서린 14년

"시장에서 국밥을 팔고 있었는데 동네에 불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때가 새벽 3시였는데 얼른 뛰어가 보니 이미 집은 다 타고 연기만 자욱했어요.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나오고 근처 학교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고 다음날 다시 가봤는데 흔적도 없이 다 타고 재만 남았더군요. 그제서야 실감이 나고 속이 터져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소래(60세)씨의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위로 눈물이 험없이 흘러내렸다. "애들 넷 키우면서 독하게 살아왔는데, 그 날 생각만하면 눈물이 나네요. 바보같이..."

지난 1월 19일, 서울 송파구 화훼마을 비닐하우스촌에서 불이 났다. 117 가구의 보금자리가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주민 373명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불이 난 후 구청 차원의 지원이 있기는 했지만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원은 3일만에 중단됐다. 주민들은 궁여지책으로 마을회관 옆에 천막을 쳐서 잠자리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은 막막하기만 하다.

화훼마을에 정착한지 올해로 14년이 된다는 이소래 씨 역시 이번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은 28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린 자식 넷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 품앗이로 한두 푼 모아 음식점을 시작했지만 동업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왔게 됐다. 이곳 저곳을 전전하다 결국 보따리 몇 개를 들고 찾아온 곳이 가락동.

갈 곳 없어 정착한 화훼마을

"관자집에 얹혀 한두 달 살았을까. 철거를 한다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아무 말도 못하고 짐을 싸 나오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할 지 막막했어요. 갈 곳이 없어 주변만 맴돌고 있는데 얼마가지 않아 비닐하우스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비닐하우스에 짐을 풀었어요." 이 씨는 그렇게 화훼마을과 인연을 맺었다. 연탄재로 메운 구덩이 위에 지은 비닐하우스라서 바닥에 합판이라도 깔아야했지만 합판 살 돈마저 없던 그는 12월 흑한의 땀방 위에 옷 몇 개 깔고 한달 동안을 지냈다. 밀가루 한 봉지, 연탄 두 장을 외상으로 사다가 수제미 장사를 시작했지만 한 그릇도 못 파는 날이 더 많았고, 그때마다 라면 한 개로 다섯 시구가 한 끼를 때워야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나마 몇 푼 벌여 쌀밥을 했는데 밥이 빨갛더라고요. 나중에야 물이 썩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목이 마르니 그 물이라도 먹고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애들은 매일 배가 아프다고 울었어요. 전입신고마저 되지 않아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해놓다보니 애들 학교는 멀고, 먹는 것도, 물도 시원찮은데 먼 등교길에 시달리기까지 해서, 애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학교에서 돌아오곤 했어요. 하루에도 열두번씩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을 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첫째 딸만 빼고 나머지 자식들은 중학교만 마쳤다. 화훼마을 사람들이 투기꾼이 아니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씨는 평생 방 2개 짜리 집에서, 석유 보일러가 놓인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지난 14년 동안 여기서 세금 내라는 것 다 내고 살았어요. 선거 때만 되면 구청장,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찾아오더니, 이제 오고 갈 곳도 없어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실 주민등록을 옮겨주는 것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살던 집만 원상복구 시켜주면 되는데, 거기같은 집이라도 기어들어 갈 곳만 있으면 좋겠는데..." 비정하다고 이 씨는 말했다. 없는 사람들은 제 살이라도 나누어주며 살지만 힘있는 사람들은 등돌리며 사는 세상이라고 이 씨는 말했다. 그리고 물었다. "혹시 알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하나요?" 라고...

올해에만 30명 구속

대학생 양심수 꾸준히 양산

한편에선 양심수 석방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또 한편에선 꾸준히 양심수가 양산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학생운동 관련 양심수가 올해 들어서만 30명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강현 씨 등 고려대생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래, 2월 초까지 구속된 대학생(또는 졸업생)이 최소 27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총련 대의원(이적단체 가입)이라는 이유로 구속됐으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해 구속된 사람만 19명이었다. 심지어 이강현 씨 등 고려대생 4명에겐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한총련 7기(99년)와 관련, 이적단체 구성 예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새해 들어서도 끊이지 않는 대학생 구속사태는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과 국가보안법 7조의 존재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한총련에 가입중인 대학의 경우, 학생회장 등 학생운동 지도부들은 당연직 또는 선출직으로 대의원이 되며, 대의원들은 그들의 활동내용과 관계없이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외관련, 법원이 97년 한총련 5기에 대해 이적규정을 내린 바 있으나, 그 후 구성을 달리하는 6기 한총련과 앞으로 구성될 7기 한총련에 대해서까지 공안당국은 계속 이적단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다.

한편 진급을 바라는 공안기관 수사관들의 검거 경쟁도 대학생 구속을 양산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도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말 명장도 없이 연행돼 9시간 동안 불법구금을 당했던 동의대생의 사례는 공안당국의 검거 경쟁이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중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관련기사 2월 10일자 참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2월 13일(토)

제 131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올 '한총련 사냥' 시동

공안합수부, '3월말까지 탈퇴' 강요 편지 발송

올해도 어김없이 검찰이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공안탄압의 칼을 빼들었다. 공안합동수사본부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7기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3월 말까지 탈퇴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검찰은 「공안사범 합동수사부장」 명의로 2월부터 각 대학 학생회장 앞으로 "7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탈퇴 권유문"을 발송했다. 검찰은 권유문에서 "금년 3월 말까지 한총련 탈퇴 권유기간으로 설정하고 그때까지 탈퇴하지 않을 경우 이적단체가입죄로 검거, 구속기소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족들 앞으로 "7기 한총련 대의원 학부모에 대한 탈퇴관련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이적단체가입죄라는 중한 죄로 사법처리된다"며 가족들로 하여금 한총련 탈퇴를 권유할 것을 종용했다.

학생들, 한총련 불탈퇴 움직임

검찰은 권유문에서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금과옥조로 떠받들고 있으며 진보적 변혁운동을 가장하여 극우 보수주의의 파시즘을 추종하는, 법률에 의해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 못박고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은 치료목적의 집도이나 한총련이 주장하는 대북 교류는 살인목적의 집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들에게는 "국가존망이 걸린 위기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의하여 친북 이적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로 인정된 한총련 소속의 학생 등은 화염병투척·석파이프 휴대·부석 등의 폭력투

쟁을 획책하면서 사회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운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학생운동에 대한 방향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한총련을 올바르게 혁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권이 원하는 한총련 탈퇴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경북 지역 총학생회 연합도 성명을 내 "한총련 불탈퇴 선언운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한총련 탄압의 도구가 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총련은 지난 97년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바 있으나, 당시 법원은 한총련 전체에 대해 이적 규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올해의 경우 한총련은 4월까지 대의원대회를 치를 예정이어서 7기 한총련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관련기사 2월 10, 11일자 참고>

<조계사 수배자들의 설 석기>

"차레도 올리고, 세배도 드릴 겁니다."

"환장하게 좋아하면서도/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보다가/ 나는 못내 심란해져..."

유병문(27세)씨는 또한 말했다. "아무런 염려도/ 부담도 없이 사람들/ 만나고 헤어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라며 수배생활의 아픔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고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올해도 그는 집에 갈 수가 없다. 지난 96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이 죄가 되어 수배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에 갈 수 없는 것은 유 씨만이 아니다. 양심수들은 감옥 안에서 부모님이 계시는 집을 향해 세배를 드리는 것으로 새해인사를 대신할 것이고, 김영삼 정권 시절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동료 57명 역시 지척에 집을 두고서도 돌아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꿈을 버리지 않았다. 미약하나마 3·1절 특사에서 수배자들에게 대한 수배해제가 논의되고 있고, 수배해제가 되는 날까지 계속 투쟁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수배를 받은 사람들이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기약 없는 농성을 시작한지 188일째. 수배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번 시면에서 양심수 석방이나 정치수배해제, 청년 양심수 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 정권은 과거 정권과 다를 것이 없다"고. 그리고 말한다. "아무리 가족이 그림고 수배생활이 고달프더라도 정권이 원하는대로 경찰에 자진출두를 하거나 양심을 꺾는 준법서약서 따윈 쓰지 않을 겁니다."라고.

비록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설이지만 조계사의 수배자들은 설 준비로 바쁘다. 지난 시간 전 어머니처럼 돌보아주시 민가협 어머니들과 수배자 부모님을 모시고 떡국도 대접하고 16일에는 조촐하게나마 차례를 치를 생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명절인데, 이발도 하고 청소도 좀 해야죠"라며 웃는 수배자들. 하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길은 아직은 멀다.

형기 만료 20일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

집행유예 기간 재구속, 형 확정 전 실효성 없어

법질차를 자세히 모르는 피고인이 사법기관들의 무심함으로 인해 20일 뒤 늦게 구속취소로 석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경희(26)씨는 지난해 8월 집행유예기간 중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 혐의로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김 씨는 곧바로 항소를 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17일로 1심 선고형량인 4개월 복역을 만료하게 되었다. 이에 김씨는 교도관에게 "1심에서 선고받은 기간보다 많은 시간을 복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도관은 "집행유예 기간 중 구속된 것 임으로 이전에 집행유예된 형기도 더 복역해야 한다"며 김씨의 주장을 묵살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후에나 이전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교도소 측은 이를 묵살했다.

교도소·검찰·법원의 합작품

그러던 중 김 씨는 지난 1월 6일 항소심 검류를 나갔던 길에 담당 검사로부터 "이제 오래 살았으니 구속취소 신청서를 내고 나가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김 씨는 다음날로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날 오후에 풀려났다. 결국 김 씨는 교도소측의 말을 믿다가 20여일정도를 더 복역 하게된 것이다. 하지만 김 씨의 억울한 옥살이는 교도소측과 검찰, 법원의 간과가 만들어낸 합작품.

김도형 변호사는 "김 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기간 이상 복역했다면 법원과 검사가 미리 구속취소 시켜야 했다"며 "법원과 검찰의 간과가 김씨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찬운 변호사 역시 "김 씨의 경우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집행유예되었던 형이 실효성을 지니지 못한다"며 "법원이 김 씨의 구속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보전력 여권 발급 미뤄

국정원, 궁색한 답변만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이 이미 사면복권된 국가보안법 전력을 이유로 여권발급을 미루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이광철(44세)씨는 요가연수차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전북 도청 민원실에 여권발급을 신청하고 지난 10일 여권을 찾으러갔다. 그러나, 보통 5일이면 된다면 여권은 그때까지 발급돼 있지 않았다. 이 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담당자는 "서류가 전북지방경찰청 정보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 씨가 곧장 전북지방경찰청 정보1과를 가서 알아본 결과 '국가보안법 구속수감자 등은 안기부에 통보한다'는 경찰청 예규 160호(여권발급신청자 신원조사처리규칙) 제 7조 규정에 의해 자신의 여권서류 등이 지난 3일 안기부 서울 본청으로 이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면복권된 전력도 감시대상

이 씨가 안기부 전북지부에 강력히 항의하자 안기부측은 "일이 많아 바쁘다보니 좀 늦는 것이지 때가 되면 나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여권 발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 씨는 지난 82년 광주학살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시절인 84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사면복권되었다. 그리고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이 씨는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이고 전두환시절 사건인데다 이미 사면복권된,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민인데도 신원조회를 이유로 여권발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 발급이 계속 지연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와 동정

□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이 설날을 맞아 부모님과 민가협 어머니들께 세배를 드립니다.

- 때: 2월 13일 오후 1시 30분
- 곳: 조계사 내 농성장
- 김대중 정부 실업대책 1년 평가 토론회
- 때 2월 18일(목) 오후 2시
- 곳: 종로성당 강당
- 주최: 국민승리 21 실업대책 본부 (02-369-8822)

□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촉구 집회

- 때: 2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 곳: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 주최: 인권법 및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추진위
- 문의: 배경내 (02-741-5363)

□ 준법서약서 철회와 조건 없는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대회

- 때: 2월 20일(토) 낮 12시
- 곳: 서울 구치소 등 전국 교도 및 구치소 앞
- 주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연대회의
- 문의: 전주현 (016-296-0402)

소외된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설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설날 연휴 휴간 19일자부터 다시 발행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2월 19일(금)

제 131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18일 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가 주최한 ‘김대중 정부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에서 토론회자들은 이같은 평가를 내리며, “실업문제는 실업자의 조직화와 전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 노대명(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정치연구회) 박사는 “정리해고를 용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며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위기관리 해법은 대량실업을 자초하고 사회적 긴장을 영속화시키는 대단히 비효율적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노 박사는 또 “70%에 달하는 실업자가 고용보험이나 한시적 생계지원 등 어떠한 지원 조차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발표된 실업대책은 ‘실업의 사각지대’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고 고용창출 문제는 98년 실업정책의 최대 실패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원오 교수(성공회대)도 “김대중 정부는 실업자 문제를 최소한의 안전망을 통해 해결하려 하면서도 그 안전망을 제도화시키지 않고, 언제든 철수가 가능한 임시적 형태를 띤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금도 무엇보다도 실업자를 양산하지 않는 실업대책(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실업자지원 예산의 증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 사회적 안전망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평가 속에 안하원 목사(부산실직자거리행진위원회 위원장)는 김대

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해법에 대한 저항의 조직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실업자운동 조직화 시급

안 독사는 “김대중 정부의 실업정책의 핵심은 실업자들이 조직화되지 못하게 하는 분산정책에 맞춰져 있다”며,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민중세력의 저항과 실업자운동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실업자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부산지역에서는 시민·사회·종교단체를 포괄하는 ‘신자유주의, IMF반대 상실공동투쟁체’가 조만간 구성돼, 실업자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승리 21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에 맞추고 실망실업자(취업을 포기한 실업자)와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구직 희망자 등을 합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현 실업자수는 이미 450만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 입법화 논란

국회의원 28명 입법추진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체벌허용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추진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일주(자민련), 박법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교사는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추진중이다. 이들은 “학생 징계에 대한 현행 규정이 개괄적이고 불명확해,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합당한 체벌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입법추진과 관련, 17개 사회단체가 소속돼 있는 교육개혁시민연대측은 “체벌을 법률로 규정하면 교사가 다양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 법 규정에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체벌조항 명문화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일주 의원측은 입법추진에 동의한 28명의 명단공개를 거부했다.

“법무부안 단호히 반대”

AI, 인권위 독립성 보장 촉구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18일 성명을 발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위원회 설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한국 법무부에서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독립성이 훼손되는 허약한 인권위가 예상된다”며 “인권위원회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여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반드시 독립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앰네스티는 또 “한국의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한국정부가 수용할 것”을 요청하면서 “인권위원회 설립과정이 밀어부치기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논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앰네스티는 “법무부의 인권법안이 국제 인권전문가들의 보증을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는 ‘오해’라고 단언”하며, “국제기준에 맞게 법무부 안을 수정해야한다”고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하며...

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의 투쟁 1년

지난해 2월 18일 정부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립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은 “민간위탁 철회”를 주장하는 투쟁으로 맞섰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환자의 몸으로 투쟁을 시작한 지 1년, 목포결핵병원의 환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 만나왔다.

정부의 사형선고

결핵 때문에 팔 남매 중 세 명을 잃고 자신도 13년째 결핵을 앓고 있다는 최바울(45세) 씨.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거든요. 하지만 병원이 민영화된다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삶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네 살 난 아들 옆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정부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결정을 발표한 지난해 2월 18일, 그날은 최 씨를 비롯한 260여 명의 환자들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지던 순간이었던 것이다.

송금순(68세) 씨는 “전투원 노대우 등 자력 없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국립결핵병원을 국민의 정부라는 현 정부가 없애는 게 말이 되냐”며 울분을 토했다. 결핵환자가 43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적 문제를 내세워 결핵사업을 포기한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기적을 바라는 마음

20년 동안 결핵에 시달려 왔다는 박원용(36세) 씨는 “지난 7년 동안의 병원비를 가족들이 부담해와 가족들도 많이 힘에 부치는 것 같다”며 “한 달에 1만원을 치료비로 내지만 그 만원에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한 달에 50-60만원 정도를 치료비로 지출해야하는 민간위탁체제가 되면 결국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자신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로 환자의 반 이상이 수입이 전혀 없고 전체의 1/4는 영세민에 속하는 극빈자다.

김신호(55세) 씨는 “기적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신은 생활보호대상자라서 민간위탁이 된다고 해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같은 병실의 나머지 4명은 병원을 나가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갈 집이 없어 길거리를 전전하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김 씨는 덧붙였다. “결핵에 걸린 후 가족에게 전염되는 것이 두려워 가족과 헤어져 살았다”는 정종신(59세) 씨 역시 “지금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병원의 민영화로 병원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할 지 대책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동전 6개에 담긴 사연

투쟁을 계속해오던 지난 1년동안 가슴아픈 일도 많았다.

“19살 먹은 경미라는 아이는 조금만 무리를 하면 코피를 흘리는데 거리 서명전을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코피를 터트렸어요. 박원용 씨 또한 연이은 집회참가로 병이 악화돼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요”라고 말하는 비상대책위 위원장 배상훈(37세)

씨. 그는 집회참가를 문제삼은 병원측에 의해 문용호 씨와 함께 강제퇴원을 당하기도 했다.

이삼들 할아버지의 얘기는 병원에서 잊혀지지 않는 가슴아픈 사연. “이삼들 할아버지의 아들이 할아버지께 얼마의 용돈을 드린 뒤 오지 않더군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500원짜리 6개를 가지고 오시더니 투쟁기금으로 써달라고 하시더군요. 사연을 물어보니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간직해온 전 재산인데 병원이 없어져서 아들이 못 찾으면 어떻게 하냐는 생각에 다 들고 오신 거였어요’라고 말하는 환자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화장실에서 먹는 약

4년째 결핵으로 고생하고 있는 조현숙(27세) 씨는 “친구들이 결핵이라는 것을 알게되는 것이 두려워 친구들과 만나게 될 때면 화장실에서 약을 먹었다”며 “결핵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데 아픔을 감싸주어야 할 정부가 이렇게 결핵환자들의 가슴앓이를 시킨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지난 1월 청와대 앞 집회에 참여했다는 정종신(59세) 씨 역시 “민간위탁이 되면 다 길거리로 나앉아 죽을 날만 기다려야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앞까지 갔어요. 하지만 우리를 맞이한 것은 전경뿐, 높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다보지 않더군요. 왜 그리 서럽고 허망하던지...”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결핵환자들은 사회와 정부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끝없는 투쟁의 길을 걷는 결핵환자들의 승리를 기원하며 차마 돌려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독립적 국가인권위 설치 촉구 및 무원칙한 국민회의 자세 비판 집회

- 때: 2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 곳: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
- 주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2월 20일(토)

제 131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인권단체들 분노 고조

인권위 문제 타협기류 국민회의 규탄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에 있어 법무부와 타협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국민회의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1개 인권단체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1백여 명이 상 모여 집회를 가진 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참석자들은 "인권탄압 기관이었던 법무부가 인권보장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국민회의마저 법무부 입장에 타협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31개 인권단체 대표들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주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소한의 요건으로 △ 독립된 국가기구로서의 위상 △ 법무부 개입과 간섭 차단 △ 예산의 독립성 보장 △ 인권위 관할 범위의 확대 △ 충분한 조사권 보장 △ 인권위가 내린 결정의 실효성 보장을 요청했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1월 김 대통령의 지시로 유엔 전문가들과 만나 국가인권기구 건설을 논

의하고 돌아온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활동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박 씨가 법무부 인권법안에 유리한 증언을 획득할 목적으로 뉴욕에서 활동했다든지 혹은 유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국 후 왜곡되게 보고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의 중대사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를 박 비서관의 행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주민 손배소송 제기

옛 안기부 인권유린 관련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으로부터 인권유린 피해를 당했던 탈북주민들이 19일 국가를 상대로 각 2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허철수(43) 씨

등 탈북주민 9명은 지난 1월 15일 인권단체들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입국 직후 '대성상사'라 불리는 탈북자 정착보호시설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1월 16일자).

허철수 씨는 "94년 8월 입국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신변을 우려해 이름을 이철수라고 진술했다가 전신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홍진희(31) 씨는 96년 자신이 입국한 이후 98년 가족들도 탈북입국하게 되자, 안기부로 불려가 "나라가 어려운데 가족까지 불러들여 귀찮게 고생을 시킨다"는 이유로 수사관들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폭행 때문에 유재의(39) 씨는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고, 정기해(57) 씨는 구타로 인해 엉덩이가 풀아터지는 부상을 입어 지금도 제대로 앉아 있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소송대리인 임영화 변호사는 "국가가 탈북주민들에 대해 구타, 협박 등 가혹행위를 했고, 정착 이후에도 부당한 사생활의 침해 등 간섭을 반복함으로써 탈북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응, 정착하는 것을 방해한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행사와 동정

□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기본권 보장, 양심수 전원석방 민중대회

· 때: 2월 21일(일) 오후 1시 · 곳: 서울역

· 주최: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토론회> 김대중 정권 1년과 한국사회의 진로

· 때: 2월 22일(월) 오전 10시 · 곳: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주관: 민교협

□ <교육정책 토론회> 학교에서의 '왕따현상' 실태와 그 대안

· 때: 2월 23일(화) 오후 2시 · 곳: 종로성당

· 주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김대중 정권 1년 평가와 대응을 위한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 때: 2월 26일(금) 오후 6시-10시 · 곳: 연세대 신상경관 B 120호

· 주최: 노기연, 한노정연, 사회진보연대, 전국빈민연합 등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보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권오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

<인권하루소식>은 김대중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인권상황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오늘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부문을 시작으로 2.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3. 공권력 남용 실태와 인권의 제도화 4. 인신구속 실태(감옥의 인권) 5. 김대중 정부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회를 차례로 연재합니다(편집자주).

이러한 국민의 정부 출범 1년. 비록 일제잔재, 외세의존 등 부정적 요인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새 정권은 분명히 민주주의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이루겠다고 개발독재의 해독을 주장하고 민주개혁과 인권개선을 국정지표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새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지금, 민주개혁과 인권개선의 국정목표는 과연 어디에 와 있는가?

준법서약의 도입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때부터 후보와는 달리 양심수의 존재를 인정, 사면을 약속했다. 따라서 양심수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진행된 3·13, 8·15 양심수 사면조치는 실망을 넘어 배신감마저 갖게 했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체제전복세력과 사상전향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면불가 입장을 표명했고(3·13), 8·15에 시행된 준법서약은 양심수 사면의 필수조건이 됐다. 그리하여 전국 이래 최대 규모라는 3·13 사면 당시 양심수 석방은 겨우 5%인 74명에 그쳤고, 8·15 사면에서도 455명 구속 양심수 가운데 94명만이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을 뿐이었다.

이같은 사면조치의 문제는 '몇 %의 양심수를 석방했느냐'하는 수치의 문제가 아닌 석방기준과 내용, 양심수를 공안사법시하는 인식태도의 문제였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상전향제도를 폐

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준법서약을 도입한 것이었다. 이로써 양심수 개념도, 대통령 사면권의 본래 의미도 훼손되었다. 또한 양심수 사면은 적을 굴복시킨 후 은전을 베푸는 식이 되고 말았다. 즉 노태우 정권 당시의 조건 없는 양심수 대사면은 그만두고라도 사면에 가장 인색했다는 김영삼 정권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면으로 이른바 신공안정책의 실상을 드러내고만 것이다.

양심수 양산 신기록

현 정부는 양심수 만들기에 새 기록을 세웠다.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1월 15일 현재) 708명의 양심수가 양산됐는데, 김영삼 정권 출범 후의 동일 기간과 비교한다면 4배가 넘는 수치다. 또한 구속 양심수 708명 중 미결로 남아 있는 188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구속 남발이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많은 양심수 양산은 국가보안법이란 무소불위의 폭압장치 때문에 가능했다. 708명의 양심수 중 55.5%인 39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된 영남위원회 사건을 비롯해 이적단체구성 혐의의 국제사회주의자사건, 북부노동자회사건 등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건들이었다.

상식이 범죄로 둔갑

무엇보다도 양심수 양산의 결정적 요인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이었다. 전체 양심수 중 학생 양심수는 403명. 이중 대부분이 한총련 불탈퇴 혐의로 구속됐다. 초등학교도 반장을 뽑고 하급 자치회를 구성하는 때에 대학생들이 스스로 학생회라는 대중조직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이 국가보안법에 대입시키면 엄청난 범죄로 둔갑되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민족·민주운동의 과제

로 정립된 용어인 자주, 민주, 통일은 국가보안법에 대입되는 순간 자주는 반미자주 미제축출로, 민주는 인민민주주의로, 통일은 고려연방제 등으로 규정받는다. 이렇듯 50년간 국가안보·사회안전의 명분아래 인권침해와 독재강화, 분단고착에 결정적 악역을 다해 온 국가보안법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는 대체입법이나 조문 몇 개 없애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존립근거를 상실한 국보법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립할 기반도 실효성도 상실해 버렸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지만, 남과 북은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북이 반국가단체가 아님을 선언했고, 국제연합에 함께 가입(92.9.24)해 이를 법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92.2.19)해,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해 공동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가보안법은 그 존립근거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또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이 규정한 인간의 사상·양심·표현·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연합에 가입했고,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고 여러 국제인권조약에 가맹했다. 이러한 인권조약은 도덕적 권위를 지니며 가맹국은 반드시 조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에 반하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불가피한 일인 것이다.

이제 범국민 국가보안법철폐 상설기구 등을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를 모아야하고,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나는 대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위해 민주적 재단체들이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할 때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2월 23일(화)

제 131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오는 25일 단행될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사면에서도 준법서약제가 여전히 양심수 사면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는 29년 이상 복역중인 이른바 초장기수 17명 등 모두 43명의 시국·공안관련 사범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 260명 가량의 양심수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면조치에 있어 정부는 준법서약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내외의 비난을 피하려다 보니 일관성과 형평성 모두를 상실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초장기수 17명에 대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고 고령인 점을 감안, 인도적 차원에서 준법서약없이 석방을 결정"하고서도, 역시 북에 가족을 두고 70세가 넘는 손성모(71·19년제 구금), 신광수(71·15년제 구금) 씨는 준법서약 거부로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강용주 씨등, 준법서약 예외

또 준법서약을 거부해온 강용주(구미 유학생 사건·15년 구금), 조상록(일본유학 간첩사건·22년 구금) 씨 등을 석방키로 하는 등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류라진(94년 구국전위 사건) 씨 등 다른 준법서약 거부자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중잣대를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 8·15특사 때 준법서약서를 제출했던 안재구(구국전위) 씨와 이번 사면에 앞서 준법서약을 한 최호경(민애전 사건·92년) 씨가 석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준법서

약조차도 사면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보여줬다. 최호경 씨와 비슷한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낙중, 손병선 씨는 이미 8·15특사 때 준법서약을 하고 석방된 바 있다. 민가협은 "조상록·강용주 씨의 석방은 준법서약이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제 준법서약제를 완전히 철폐해 양심수 사면의 잣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결수 전원 배제

이번 사면에서는 또 미결수들이 전원 배제되고,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수배

해제 조치가 생략돼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불러왔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미결수의 경우, 공소취하 등의 형식으로 석방하고 정치수배자들을 전원 수배해제 조치한 바 있다. 결국 현 정부는 노태우 정권보다도 양심수 사면에 적극적이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노동운동 관련자들이 대부분 사면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저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밝힌 22명의 구속 노동자 가운데 단병호 전 금속연맹 위원장, 김광식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21명이 사면에서 배제됐으며, 유덕삼 수석부위원장 등 수배자 9명도 여전히 수배상태에 놓이게 됐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조치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공판안내〉는 내일자에

2·2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 형집행정지 (25명)

▼ 준법서약 미제출

우용각(42년 구금) 최선목(38년) 장병락(38년) 홍명기(38년) 안영기(38년) 양희철(37년) 이경찬(35년) 최수일(35년) 김동기(34년) 박원규(33년) 이공순(33년) 김익진(31년) 오형식(31년) 김은환(31년) 양정호(31년) 김창원(31년) 이재룡(30년) 조상록(22년) 강용주(15년)

▼ 준법서약 제출

고영복(간첩사건) 위성재(호남대) 유충복(명지대) 최인석(명지대) 이영석(도원동 철거 사건) 황성근(만도기계 노조위원장)

◎ 가석방(준법서약 제출, 18명)

장창호(92년 민애전 사건) 김국한(전남대) 이태환(전북대) 김병수(한남대) 이경호(고려대) 오재홍(전남대) 강성일(조선대) 한충일(조선대) 하영준(한양대) 길소연(이석 치사사건) 이호준(이석 치사사건) 설중호(96년 연대 사태) 박수기(전남대) 박치현(한남대) 구장주(동국대) 김민성(밀입북기도) 박용현(밀입북기도) 노환주(밀입북기도)

◎ 감형(준법서약 제출)

최호경(민애전 사건, 무기에서 20년형으로) 등 5명

4천만 우롱한 'TV대화'

각본 다른 연출...민감한 현안 배제

4천만 국민을 TV 앞에서 바보로 만들었다.

21일 방송3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시나리오에 맞춰 김대중 대통령을 주연으로, 방청객과 전국민을 행사소품으로 만들어버린 한 편의 정치쇼였다.

이날 행사는 당초 민주노총과 인권·여성단체 관계자들에게 질문 시간을 배당해 노동·인권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전에 질문자로 섭외를 받았던 민주노총과 인권·여성단체는 행사 하루 전날인 20일 오후 갑작스럽게 질문자에서 제외됐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앞서 노동·여성·인권단체 관계자들은 행사 참여에 따른 신원조회 등을 마친 상태였다. 이처럼 민주노총과 인권·여성단체가 배제됨에 따라, 21일 '대화'에서는 노사정합의 불이행, 일방적 구조조정,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국가인권위 설치 항방 등 민감한 현안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연설과 홍보로 일관하고 말았다.

특히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방청객들에게 나눠주고 이에 따른 질문만을 허용한 것은 대통령과의 진솔한 '대화'를 기대하며 참석한 방청객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동성애자인권연대측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인권문제에 대한 질문이 취소된 것은 김대중 정부가 인권에 대한 의지를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과의 대화를 정략적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도적으로 질문을 조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앰네스티 "한국캠페인 예정대로"

국보법·노동권·인권위 문제 초점

국제앰네스티는 22일 한국정부의 2·25 사면조치 발표와 관련, "한국정부가 19명의 장기수들을 석방키로 한 것은 인권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지속적인 개혁과 진정한 인권보장 조치가 뒤따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앰네스티는 "오는 3월부터 한국 인권침해 개선 촉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며, 국가보안법의 개혁과 노동자들의 권리,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설치문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이번 사면에도 불구하고 2백여 명의 정치범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중 다수가 준법서약 거부로 석방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더 많은 정치범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주간/인권/호/름

(99년 2월 8일부터 2월 21일까지)

◆ 2월 8일(월)

중앙노동위원회, 지난해 정리해고 10건 중에 4건이 부당하다 발표/대전시내 고교, 체벌분쟁 조정기구 설치/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7조 김근태씨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규약 위반 결정 통보

◆ 2월 9일(화)

주한미군 농산물서 외래병해충 발견/정부, 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키로/노동부, '월 70만원 미만 저임금 취업자 수 증가했다'고 발표/김수환 추기경, 양심수 대폭 석방을 촉구하는 서신 청와대로 발송/미국산 무기구매, 한국 69% 감소/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수출국 표기 의무화/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 연령 20세 이상으로 조정/민주노총 등, 직장내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상담창구 개설/프랑스, 오염된 에이즈 수혈 사건 관련 책임자 처벌 재판 14년만에 개최

◆ 2월 10일(수)

감청, 지난해에 비해 10%이상 증가/앰네스티, 오는 3월부터 "한국 인권침해 개선 촉구" 캠페인 돌입키로/노동부, 저소득 장기실업자에게 실업급여 기간 연장키로/태아 4명중 1명 낙태, 그중 80%가 불법시술/영등포 교도소, 재소자 청원권 목살해 물의/미국 5개 도시, 총기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 2월 11일(목)

금정굴 1차 발굴 유골감정결과, 희생자 최소 153명으로 밝혀져/개발도상국그룹(G15), 9차 정상회담에서 "교섭돌린 자본주의가 개도국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

◆ 2월 12일(금)

여, 국보법 7조 찬양·고무조항 개정 검토/법원, '결격 사유로 물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대가 지급해야한다'고 판결/일본인 위안부 문명금액 64년만에 귀국

◆ 2월 17일(수)

국정원, '북한인구 식량난으로 260-300만명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조업 중이던 어선 2척 일본에 나포

◆ 2월 18일(목)

이해찬 교육부 장관, 대학 신입생들에게 '학생운동 경계하라'는 내용의 편지 발송키로/직장 성폭력 상담, 작년 대비 2.5배 증가/국내기업 86%가 작년 한해 고용조정 실시/앰네스티, 법무부 인권법안에 대한 우려 표명/법무부, 구금자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 대폭 확대

◆ 2월 19일(금)

탈북자 9명, '조사과정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 주장하며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국민회의, 진료비 인상 및 약값 인하 추진

◆ 2월 21일(일)

국가인권기구 공동추진위, 박주선 청와대 법무관의 '인권위 보고서'관련 박 비서관 해임 요구/한국어린이보호회, 학대받는 어린이를 위한 상담전화·보호시설 운영키로/노동부, 고용조정 절차준수 확인 위해 주1회 이상 사업장 점검 방침/한·일 양국 NGO, 대북지원 호소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보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이중희(사회진보를 위한 연대 사무처장)

독일통일 이후 동독국민들이 노동권 즉 노동할 권리가 없어진 사실에 가장 당혹해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에게도 노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요즈음에야 새삼 절감하고 있다. 인권, 건강권 등과 같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노동권을 운운하는 것은 과연 사치인가?

구조조정의 강행

국가부도 직전까지 가게된 현실을 깨닫는 북고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날 국가주도의 자본축적체제가 아시아적 가치로, 유교자본주의로 미화되면서 칭송되고 있다. 그리고 그간 저임금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산업예비군 창출을 통하여 이루어 지던 노동력 관리 즉, 뒤집어 표현하면 실업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그마저 포기한 것에 대한 원망이 북고적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렇다! 실업자가 공식 추산으로 200만이 넘어서는 마당에도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를 흡수'하는 실업대책, 다시 말해서 눈앞의 실업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구조조정을 강행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실업대책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실업대책은 사회안전에 주안점을 뒀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상징적 발언 이외에 어떠한 실질적 실업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노숙자는 불결하다', '노숙자가 병을 옮길 수 있다'는 등의 몇단계 홍보를 거치면서 '노숙자의 인권'이 사회안전을 위한 격리보다 우선할 수 없었다.

광풍은 끝나지 않았다

한차례의 구조조정 광풍이 휩쓸고 간 금융부문은 노동조합의 통제로 볼 때 생활수준이 12년전으로 하향되었다고 한다. 임금삭감, 복지축소를 감수하고도 3만여명의 노동자가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강제당했다. 산업부문 역시 예외가 아니다. 12월 초에 발표한 빅딜을 포함한 5대제법 구조조정 방안대로라면 5대제법의 58만 노동자의 20%이상인 11만에서 17만에 달하는 비주력업종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예상된다. 최근 삼성자동차, 대우전자, LG반도체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그 한 단면에 불과하며, 벌써 1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내쫓은 현대그룹의 구조조정방안이 구체화되면서 2월 24일 기아와 현대의 자동차산업 12개 노동조합의 7만 노동자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올 봄에 예정된 공공부문과 제2금융권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다.

사회권 획득 투쟁은 사치가 아닌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더 이상 후퇴할 곳도 없다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의 외형적인 실업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기본권과 생존권의 전반적 후퇴라는 낙관으로 인도하고 있다. 한번도 정권과 자본에 의해서 주어졌던 적이 없는 그리하여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자 기본권과 생존권이 자본의 경쟁력과 효율성의 깃발아래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연봉제, 지급과과, 계약제 확대 등으로 자본의 유연화 공세는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으며, 정리해고의 칼날은 노동조합의 선진적 활동가를 겨누어 민주노조운동의 와해를 의도하고 있다. 살아남은 자들은 해고된 자들의 뒤통까지 말아야 하므로 노동감도는 강화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작은 정부'를 내세워 산업보건관련 감독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회사측은 노동조합의 안전보건관련 정보요청권, 각종 참

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단체협약 안으로 내놓고 있다.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대대적으로 진행된 임금삭감에도 불구하고 복지비용은 축소되고 생계보조형 임금을 없애고 있다.

예고되는 투쟁

지난 연말 민주노총 이감용위원장의 24일에 걸친 국회앞 단식투쟁 이후 선연한 노사정위원회 탈퇴 결의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다급해진 정부는 구축노동자 석방, 실직자 초기입단위 노조가입 허용, 민주노총 조기합법화, '노사정 협력증진 및 정책협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80을 위해서 20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20을 위해서 80이 희생된 현실에서 더 이상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무의미하며, 따라서 산업부문,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3월말 4월초에 총력투쟁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제 생존을 위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위한 투쟁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딱따구리의 우를 범하는가

'딱따구리가 저 살자고 제 사는 나무를 죽인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국민의 정부' 1년에 IMF 들이밀고 자본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내세우며 나무를 죽이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단지의 제제 국민통합 슬로건에 그친다면 즉 '노동자를 위한, 인간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를 거부한다면, 노동자는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노동권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사회권의 획득을 위한 투쟁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이며,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역사의 불가역성을 믿는다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후퇴라는 역사적 후퇴는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2월 24일(수)

제 131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양심수 출신 보안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 통제와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처분을 통보받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 동안 개인별로 소송을 낸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해정(95년 방북사건), 김삼석(93년 남매간첩단 사건), 박영희(92년 방북사건) 씨 등 보안관찰 피처분자 3명은 23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당국의 부당한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불복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삼석 씨는 소장에서 "재소중 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을 결정한 것은 지난해 7월 준법서약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전향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또 "수감생활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단식한 사실은 정치적 표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보안관찰의 이유로 내세운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보법 전력자 줄줄이 보안관찰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해정, 김삼석, 박영희, 서경윤(일본관련 간첩사건), 변의숙(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이경섭(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김낙중(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씨 등 97-98년에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 10여 명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해 8·15 특사 때 석방된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박동운(진도 간첩사건),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씨 등에게도 조만간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법무부는 이번 2·25 사면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보안관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젊은이들을 위한 추모미사

- 때: 2월 24일(수) 오후 2시 ·곳: 삼각지성당(4호선 삼각지역 1번출구)
- 주최: 천주교인권위원회(02-777-0643)
- 1부: 추모미사 / 2부: 추모공연(꽃다지)
- 행사 후 '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협회' 주최로 국방부 앞 함의집회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및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 제정 중간 보고대회 및 범국민추모사업회 설명회

- 때: 2월 24일(수) 오후 2시 ·곳: 국회 헌정기념관 2층 강당
- 주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사업회 준비모임(02-742-3180)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지난해부터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장민성, 고원 씨 등은 지난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또 이은경·정명섭(사노맹 사건), 안윤정(독일유학 간첩사건) 씨 등이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면 발표하던 날에도

청년진보당 위원장 국보법 연행

양심수 석방조치가 발표되던 날에도 정부는 또 한 명의 양심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울시경찰청은 22일 오후 3시 청년진보당 대구시 달서구갑 위원장 임수진(26세)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임 씨는 현재 서울시경찰청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학재학 시절 '전국학생연대'라는 조직에서 활동한 것이 문제가 돼 이적단체 가입 혐의(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생연대는 98년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임 씨는 98년 8월부터 청년진보당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해오던 중이었으며, 따라서 공안당국이 뒤늦게 임 씨를 연행한 것은 실체불리기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청년진보당(대표 최혜)은 임 씨 연행에 대해 즉각 규탄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가보안법 7조의 개정 추진하고 있고 양심수 사면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구태의연하게 국가보안법을 수단 삼아 학생운동, 민중운동을 계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권의 인권정치는 대중여론을 호도하는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왕따현상' 왜? 어떻게?

전교조 주최 토론회, '왕따' 해결방안 모색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왕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23일 종로성당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왕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그 해결대안이 제출됐다.

우선 왕따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배타적 집단문화 △출세주의 △자기중심적 사고 △입시교육 풍토 등의 구조적 배경이 지적됐다. 현원일 전교조 학생생활국장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입시 성공만이 강조되는 학교교육과 학생들 사이의 자치문화 부재, 왕따문제를 선정적으로 부추기는 언론보도 등도 왕따현상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들이 또래집단의 규범을 훼손하는 아이들에 대한 평화적 해결

방식을 학습하지 못한 점 △사회경제적 약자를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우리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을 내면화한 점도 왕따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씨는 이러한 지적에 덧붙여 "특히 학생들의 존엄성과 참여권, 자기결정권, 의사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당하는 현실이 폭력과 인권침해의 구조를 거듭 재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진단 속에 토론자들은 왕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생들 스스로가 자치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원일 국장은 "모듬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자치능력 향상과 학급회의 및 학급재판,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등을 제안했으며, 박춘에 광주지평중 교사도 "모듬활동(두레활동) 중심의 학급 운영은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배경내 씨는 "교육부가 내놓은 신고전화 개설, 피해·가해학생의 재택학습과 전학 등의 대책은 처벌과 격리 위주의 대책으로서 이는 왕따를 더욱 왕따시키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배 씨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왕따현상을 근절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민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김대중 정부 집권 1년의 인권 및 개혁 실상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한 비판과 함께 "개혁노선의 혁명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참여연대, 전국연합 등 52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는 23일 각 단체 대표자 공동선언을 발표해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민중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독점자본과 기득권 집단을 위한 개혁에 다름 아니었다"고 비판하며 "김대중 정부가 민중적 개혁의 길을 부정할 경우,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국민 소속 단체들은 또 인권대통령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부 하의 민주주의와 인권현실은 도리어 악화일로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준법서약이라는 사상통제제도를 도입하고서도 과연 인권대통령이라 자처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국

가보안법 철폐 및 준법서약제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를 허구화하는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공동선언문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현실 △주거권을 지키려는 철거민들에 대한 탄압 △생존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과 폭력 △공허한 말장난으로 끝난 농기부채 담감 약속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굴욕적 한일어업협정 등을 지적하며 "노동자와 민중의 삶이 더욱 열악한 방향으로 '구조조정'된 것이 지난 1년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현 정부가 자랑해온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 "그 실체는 노동자와 민중들의 고통과 눈물을 담보로 한 '효율적 재벌체제로의 재편'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하며,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재벌의 자기합리화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민은 이같은 비판아래 ▲경제과 탄 주벌 재벌총수 및 정치인, 관료 처벌과 재벌재산 환수 ▲5대 재벌총수의 경영권 박탈 ▲IMF협약 철폐와 외채 탕감 추진 등 13개 사항을 요구했다.

영남위 이은미씨 옥중투병 중증디스크, 수술비 마련 애로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중인 이은미(울산여성회 준비위원회 회장) 씨가 험거운 옥중투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여성회 준비위원회는 23일 "이은미 씨는 만성디스크 중증 환자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허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울산여성회는 "수술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 시일이 걸리나, 구치소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열흘 정도의 시간만 보장될 뿐"이라며 "이은미 씨의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의 수술에는 약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알려져 울산여성회는 이 씨 수술비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도 벌이고 있다.

(계좌번호: 농협 815081-56-010375 예금주 박희영)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능에 머문 인권보장

최정학(서울대 법대 박사과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50년만에 처음인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이고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지역출신 대통령의 등장이었기에 현 정부에게는 기득권과 부패로 얼룩진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출범 당시에 맞은 미증유의 경제위기 탓일 수도 있겠지만 출범 후 1년여가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건대 국민의 정부의 개혁정책은, 적어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부분까지 나아가지 못한 듯하다.

불구속수사 원칙

우리 헌법은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나 무죄로 추정되며 예외적으로 구속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범죄혐의자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은 이른바 문명화된 법치국가의 일반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해왔다.

대략 1년에 14만여 건에 이르는 구속 사건은 미국이나 독일 등에 비해 몇 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검찰 내부의 기준에 의해 구속여부가 결정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개정되고 97년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하였지만 이 제도는 검찰과 법원 사이의 치열한 공방 끝에, 시행 1년 만인 97년 말 다시 '피의자 등 신청권자가 신청하는 때'에 한하여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정됨으로써 그 의미가 반감되고 말았다. 그 결과 구속영장신청

에 대한 기각율은 한 때 높아졌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낮아지는 현상을 빚게 되었다. 지금은 또 피의자 심문에 대한 권리를 피의자에게 고지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간에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구속은 형벌이 아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강제처분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 데 일반국민 뿐 아니라 수사기관마저도 구속을 마치 형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 동안 구속이 지나치게 남용되어 온 탓이기도 하고 인신의 자유를 그만큼 소홀히 여겨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속은 그 내용과 절차가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상의 편의나 사정기관의 권력에 의해 구속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일반국민들의 직접적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형사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임회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호가 가능하도록 수사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최근 법무부는 이같은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므로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된다.

감옥의 인권

구속 후 형벌이 확정되어 집행 단계에 있는 재소자들의 인권은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재소자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는 지난 한해 교도소 인권문제에 있어 몇 가지 진전된 노력을 보여 주었다. 예컨대 모범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용하고 재소자 개인의 부담으로 신문구독을 허가한다든지, 각 수용거실에 조그만 책상을 지급하도록

한 것 등이다. 그러나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대규모의 개선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의 어려운 경제사정은 일반범죄의 증가와 함께 많은 생계형 범죄를 낳았고, 이로 인해 교도소의 수용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말았다. 이와 함께 냉난방 시설의 미비나 의료시설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이나 교화 인력과 프로그램의 미비 등 우리 교도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별로 개선된 바가 없다.

더불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교도관과 재소자사이의 관계다. 부족한 교정인력 사정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엄격한 규율과 구호 인사, 하루에 몇 차례씩 있는 점호 등 우리 교도관과 재소자 사이의 관계는 아직도 마치 군대의 상하위 계급자간의 관계를 연상케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재소자의 인권이 진지하게 존중될 수 있을까?

최근 교도소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법무부는 재소자의 청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일선 교도소에 이를 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또 행형법 개정 움직임도 이미 시작되었다. 교도소라는 다소 특이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 이들 역시 우리 사회가 다시 껴안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범죄에 대한 책임만큼의 형벌을 받을 뿐 그 이상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재소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주요 공판 안내

- ▶ 2월 24일(수)
 - 안중연(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선고
- ▶ 2월 25일(목)
 - 남부수(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 5부, 선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2월 25일(목)

제 131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김 대통령 “법무부안 채용 안해”

논란을 빚어온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가 24일 김대중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김 대통령은 2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당초 법무부안은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게 중요하며, 명망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로 급년중 인권위를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된 김 대통령의 언급은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산하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일단 좌절시켰다는 점과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1개 사회단체가 소속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이하 민간단체 공추위)는 이날 긴급논평을 발표해 “인권침해의 선두주자였던 법무부가 국가인권기구 설치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잘못된 일이었다”며 “이제 법무부 안이 폐기된 만큼 법무부는 더 이상 이 논의에 관여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의원입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김 대통령이 “자유로운 민간기구”를 언급한 대목은 앞으로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불씨로 지적받고 있다. 김 대통령은 “대통령이 인권위

를 관장하면 인권위가 권력의 영향을 받게되므로, 법무부나 대통령이 관여 않는 자유로운 민간기구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 공추위는 “국가인권기구는 법률로써 설치되고 인권보호와 향상에 관해 전문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며, 따라서 국가의 정규예산을 사용하고 그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자율적·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추위는 또 “국가인권기구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내용 못지 않게 그 제정 절차가 인권과 민주주의 정신에 합치해야 한다”며 “국민회의는 당 전문가 및 민간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하고 책임있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안위원회를 설치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 논의과정에서의 전 국민적 홍보와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의 참여와 인권의식 향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홈페이지 개설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민변, 민가협 등)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최근 소식과 자료들을 구할 수 있으며, 김대중 정부 최초의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영남위원회’ 사건 자료 등을 볼 수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서명을 네티즌들에게 받고 있으며, 3월부터는 민가협에서 발행하는 국가보안법 소식지도 만날 수 있다.

<인터넷 주소>

http://www.jinbo.net/~freedom

(E-mail : woods@netsgo.com)



만화사랑방

이동수

끝내 열리지 않은 국방부 정문

군 의문사 가족들, 국방부 앞 추모행사

“병력과 복종, 억압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이 무시되고 인간이 도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과오가 밝혀져야 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김훈 중위 사망 1주년을 기념해 24일 서울 삼각지성당에서 연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젊은이들을 위한 추모미사’는 유가족과 관계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해진 신부의 강론으로 시작됐다.

“억울한 죽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소서.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사람(군 관계자)들이 말하지 않게 하소서.” 강론이 끝나기도 전에 성당 안은 울음바다로 변했다.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자식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는 정부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대한 흐느낌이었다.

이제 스무 살을 갓 넘겼을까, 20여개가 넘는 젊은 청년들의 영정이 성당 안을 채웠다. 그중에는 변변한 사진조차 없어 간단히 약력만 써 있는 영전도 있었다. 미사를 마치고 자식의 영전 앞에 국화를 봉헌하던 어머니들은 “불쌍해서 어떡해, 내 자식 불쌍해서 어떡해”라며 오열을 터트리다 결국 영정 앞에 주저앉아 버렸다.

곧 이어 노래패 ‘꽃다지’가 억울한 청춘의 넋을 기리는 추모시를 낭독했다. “이제는 영원히 산 사람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이여...” 그랬다. 이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감을 건너 가족들의 가슴속에 영영 잊혀질 수 없는 한으로 남은 것이다.

“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던 때, 고통스럽게 ‘나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머니, 나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하고 아들이 소리를 쳤을 그때, 나는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이 나의 책임이고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

체하지 못한 채 ‘전국 군 폭력 희생자 유가족협회’ 회장인 고 박현우 상병의 어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울음바다로 변했다.

모든 행사가 끝나자 어머니들은 아들의 영전을 품에 안고 국방부로 향했다. 난데없는 소복행렬에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걸음을 멈췄고, 이내 그들의 절규가 무엇인지 알겠다는 듯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국민의 정부에 의문사가 왜 말이나 유가족들의 절규. 하지만 굳게 닫힌 국방부 철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유가족들이 돌아서는 그 순간까지 어느 누구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비록 오늘 유가족들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서야 했지만 “아들의 명예회복을 이루는 그날까지” 어머니들은 국방부 철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리고 말할 것이다. “내 아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양심수 260여명 남아

최호경 씨등 장기구금자 7명

2·25 사면을 통해 양심수는 다 사라지는가? 슬프게도 대답은 “노.”

주요 미석방 양심수

- ▶ 납파사건 : 손성모(19년 구금) 신광수(15년)
- ▶ 민애전 사건 : 최호경(준법서약 제출·감형) 조덕원(각 7년 구금)
- ▶ 구국전위 사건 : 안재구(준법서약 제출·감형) 류락진(각 5년 구금)
- ▶ 이화춘(일본관련 간첩사건, 5년 구금)
- ▶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간첩혐의 97년 구속)
- ▶ 조직사건 구속자(기결) : 정재영(97년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건) 이상봉(97년 새오름 사건), 김성은(98년 인제대 자주대오 사건)
- ▶ 조직사건 구속자(미결) : 영남위 사건 15명, 민청노회 사건 7명, 울산대 혁신대오 4명, 단국대 신자주대오 5명
- ▶ 노동자 : 현대자동차 파업관련 4명, 조폐공사 파업 관련 2명
- ▶ 한총련 관련 : 96년 연세대 8·15사건 5명, 96년 한총련 간부 3명, 97년 한총련 출범식 참여 및 한총련 간부 17명, 97-98년 한총련 대의원 불탈퇴 16명, 97년 이석 치사사건 1명, 이종권 치사사건 3명(이상 기결)

25일 사면을 통해 우용각 씨 등 비전향 초장기수와 조상록(일본유학관련 간첩사건), 강용주(구미 유학생 사건) 씨 등 43명이 석방될 예정이지만 전국 39개 교정시설에는 여전히 260여명(기결 80여명, 미결 180여명)의 양심수가 남게 된다.

이번 사면에서 배제된 대표적 양심수로는 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으로 구속된 최호경, 조덕원 씨와 94년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류락진 씨 등이 꼽힌다. 또 납파간첩 혐의의 손성모(19년 구금, 전주교도소), 신광수(15년 구금, 전주교도소) 씨와 일본관련 간첩사건으로 수감중인 이화춘(5년 구금) 씨 역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

이들 장기구금자 외에 한총련 관련자 상당수가 여전히 양심수로서 감옥을 지키게 됐다.

96년 8·15 연세대 사건으로 구속된 김창학(96년 서총련 투쟁국장, 3년 구금) 씨를 비롯해 97-99년 사이 한총련 불탈퇴 혐의로 구속된 한총련 대의원들(기결 16명, 미결 40여명), 한총련 출범식 참석 등의 혐의로 구속된 20여명 등 전체 구속자(기결)의 80% 이상이 한총련 관련자들이다.

또한 새 정부 들어 발생한 조직사건 구속자들 역시 감옥 문을 나서지 못하게 됐다. 영남위 사건의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사건 구속자, 울산대 혁신대오, 단국대 혁신대오 사건 등 조직사건 구속자만해도 30여명이 넘는다.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조광희(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인권단체들은 그가 군사정권 시절의 극단적 인권침해자였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즉, 김 대통령이 인권문제를 제 3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고,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침해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인권문제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 인권단체들은 상심을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전향장기수의 사면과 같은 제한적인 진전을 보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권정책이 이전 정부와 차별성이 없으며 특히 공권력남용의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서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헌법과 법령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부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공권력을 남용한 자를 엄정히 처벌하며, 근본적으로는 공권력의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과 공권력 규제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모두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는 경찰관의 총기남용, 민간인 사찰, 불심검문 그리고 통신감청 등의 문제점이 주요하게 드러났다.

총기남용과 불심검문

총기사용은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나루대로의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비록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총기사용에는 극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사용횟수는 1996년 294회, 1997년 295회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1월부터 8월 사이에만 279회에 달했고 사망자 3명, 부상자 25명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일반시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있는 불심검문은 시민단체의 각종 캠페인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겨우 제동이 걸리고 있다. 1999년 1월 20일 서울지방법원 형소부는 1심 법원에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어긋나는 불심검문에 대하여 국가는 시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잘못된 불심검문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그 동안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남용되어온 잘못된 불심검문 관행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지는 의문이다.

도·감청과 민간인 사찰

도청·감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는 이전 정권에 비하여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1999년 1월 10일 수원에서 한총련 수배자의 여자친구 집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되었고,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는 몇 년에 걸친 감청을 통해 사생활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기통신 감청 건수는 수치상으로도 1997년 6천2천2건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6천6백38건으로 10.6%나 늘어나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불법감청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불법감청의 통제장치로서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군사정권 때에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민간인사찰 문제도 불거져 나왔다. 경찰청이 사회단체 및 그 구성원 등에 대한 단체자료와 인물존안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이에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은 사찰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찰청이 비공개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위 단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계류중이다.

특검제 거부, 인권위 난항

한편,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김대중 정부는 특별검사제를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난항을 보임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별검사제는 검찰권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행사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제도다. 그런데 야당시절 특별검사제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집권 이후 입장을 180도 바꾸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외에 널리 약속했던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에서는 법무부가 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원회를 고집하면서 그 권한과 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단체들은 김대중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은 더 이상 공권력을 남용해 인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미래를 위해서는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를 확립해 달라는 것을 요구할 따름이다. 하지만 공권력의 남용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는 확립은커녕 지루하고 비생산적인 논란에 파묻혀 버렸다.

지난 1년, 김대중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주된 의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자유주의의 일반 원칙조차 내면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무부는 공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임을 망각하고, 여전히 국민에게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2월 26일(금)

제 131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생존권투쟁 탄압' 선전포고

검찰 등, '공안대책협의회' 구성키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 김대중 정권이 본격적인 탄압의 칼날을 빼들기 시작했다.

25일 대검 공안부(부장 진형구)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초 '공안대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안대책협의회는 기존의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대통령 훈령에 의해 범죄화하는 것으로, 여기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 뿐 아니라 노동부와 교육부, 기무사까지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24일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면서, "정리하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생존권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갖고 3, 4월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정부의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방침은 김대중 정권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며, 과거정권 식의 공안탄압 대응으로 선화할 것임을 공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마저 공안대책기구를 통해 억누르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각계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덕우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발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에 왜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개입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먼저 노동계의 요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치밀히 검토한 뒤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며 "정부

가 오로지 노동자들만 억누를 경우, 더 큰 반발과 부작용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24일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 14명에 대해 긴급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소속 사업장들과 함께 25일부터 시한부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며, 검찰은 금속연맹의 총력투쟁을 사전에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조간부에 대한 검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속연맹은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대중 정권의 노동자에 대한 도발이 시작됐다"고 비난하며,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사태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은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감경탄압을 계속한다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학 첫날부터 '검문' 홍역

서강대 입학식장 마구잡이 검문

경찰이 대학교 입학식장을 봉쇄한 채 신입생들에게 불심검문을 실시해 강한

반발을 샀다.

25일 마포경찰서와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서강대 정문 입구에 전경들을 대거 배치하고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구잡이 불심검문을 벌였다.

이날 입학식을 가졌던 서강대에는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대거 참석해 매우 혼잡한 상태였으나, 경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특히 경찰이 학교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서강대생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입학식에 참석했던 신입생들은 자신이 서강대생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입학식 팔찌를 찾기 위해 가방을 뒤지는 등 수난을 겪은 뒤에야 학교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마구잡이 검문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 담당형사는 "한총련이 시위를 갖는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학교 총장의 시설보호요청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강대측은 시설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경들은 총학생회 집행부 학생 50여 명의 거센 항의투쟁과 학교측의 항의에 부딪혀 1시간 30여 분만에 검문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입학식 날 경찰의 이런 행동은 학교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어린 신입생들에게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행위"라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대응교육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 결정 수용촉구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토론회

- ◇ 때 : 2월 26일(금) 오후 3시-6시
- ◇ 곳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 ◇ 주최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보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사회자: 먼저 김대중 정부 1년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오창익: 인권과 민주주의를 국정지표로 삼고, 인권이라는 말을 하게 된 점은 의미가 있다. 총론에서는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구체적 사항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춘숙: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많았다. 하다못해 양심수가 확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이미지라든가 국정지표에서 인권에 관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권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한 1년이였다.

차병직: 지금의 정부가 과거 정권보다는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국가인권기구나 피고인의 법정 평상복 착용 등은 긍정적인 측면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격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박성인: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때 김 대통령 개인의 의지 수준에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부분적인 진전이 있지만, 사회·경제적 수준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또 주목할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과거에 비해 없어진 그 공간을 시장경쟁 논리로 채워가고, 기업·자본 등의 생존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 등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핵심적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부분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더라도 전체 인권 상황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사회: 김대중 정부가 해결했어야 할 인권과제로 무엇을 꼽을 수 있는가?

차: 과거 정권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면서 비판됐던 점들이 모두 현 정부의 과제다. 인권을 국가정책으로 흡수해서 인권정책을 세우는 것이 요구됐다.

박: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3권의 문제가 당연히 새 정부에서 해결됐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정리해고나 근로자과견제와 같은 노동자들

<토론>
차병직 (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창익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박성인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사무처장)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사회>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때: 2월 19일 오후 7시-10시
·곳: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맞바꾸는 형태로 진행됐다.

정: 지난해엔 국가위기 상황에서 '여성 먼저 희생해라'는 것이 전반적인 국가의 태도였다. 여성이 실업자가 되는 것을 당연시한 사회적 분위기, 그러한 국가정책 때문에 여성노동자는 고용불안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또 여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는 김대중 정부가 여성인권 확장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고 단지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 온 정도였다. 법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

사회: 김영삼 정권 초기에 비해 3배나 많은 양심수가 생겼다. 준법서약제

도입 등 사상·표현의 자유 영역을 평가한다면?

차: 양심수를 양산해 내는 도구(국가보안법)가 존재하는 이상 양심수는 나올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데, 마지막 판단자 위치에 있는 법관들이 인식태도를 달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던지 폐지 수준에 이르도록 대폭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오: 새 정부 들어 일정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로 등장한 사람이 없고 애꿎은 학생들이나 노동자들만 법 적용을 받고 있다. 공간기구에 있어 검찰은 과거에 비해 조금 이동이 있었지만, 검찰에선 그나마도 전혀 없었다.

박: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의 노동자·민중들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봉쇄하는 측면도 있다. 노동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법 제도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상황도 다양한 목소리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오: 처음 준법서약제가 나왔을 때 헛갈렸던 게 사실이다. 석방용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로 준법서약이 석방의 기준이 되고, 남은 양심수들은 준법서약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권 제한을 당하기도 했다. 애초의 이야기와 달리 확대감화된 전향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차: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사실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를 포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3면으로 이어짐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보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사회: 거대한 국가감시체제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도·감청 문제나 정치사찰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 안기부가 이름을 바꿨다. 지하철에 스티커도 붙였지만, 무너만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인권과 밀접한 기구들에 있어 중요한 건 로고나 슬로건이 아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수호하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정: 김영삼 정권이 개혁에 실패한 이유는 관료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김대중 정부도 내부 구조조정이 안되고 있다.

박: 87년 이후 사회변화를 이끌어 나갔던 주체는 노동자와 일반 대중이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주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는데, 그간 개혁의 주체였던 학생, 농민, 빈민, 노동자들의 운동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국가권력에 대한 요구도 필요하지만, 기층 민중들이 개혁의 주체로서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은폐된 것 중의 하나가 단위사업장의 모든 기본적 권리가 다 무너져버렸다는 것이다. 노조의 정치활동자유 등 노동자의 권리를 일정정도 진전시킨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실제 단위사업장에서는 10년 동안 쌓아온 단체협약이 유명무실화되었고, 조합원들은 전체적으로 무권리 상태에서 무기력과 패배감에 젖도록 만들었다.

사회: 사회권 영역을 평가해 달라.

차: 사회권 자체가 활성화된 적도 없었는데, IMF체제 이후 더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형식적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국가의 전문성 결여와 같은 기술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비용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조세제도인데, 좀더 혁신적으로 누진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내가 속해 있는 변호사 집단을 비롯해 고소득 집단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높이고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 거꾸로 가고 있다. 경제위기가 오니까 사회복지예산이 오히려 삭감되고, IMF라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사회안전망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없는 사람들과 사회복지 혜택을 제일 먼저 잘라내는 현실이었다. 지난해 구조조정을 할 때 별

<토론>
차병직 (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창익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박성인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사무처장)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사회>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정적으로 있는 여성상담원들을 제일 먼저 잘랐는데, 힘없는 여성상담원부터 자르고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복지영역을 아무렇지도 않게 없애버렸다.

오: 정금의 법칙 같다. 꽃동네(충북 음성 부랑인시설)는 무제한적으로 지원하면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시설은 비인가 또는 기증미달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사회: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어떠한가?

오: 동남아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은 언어맞고 강간당하면서 보상도 못 받는데, 똑같은 외국인노동자라도 백인들에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있어서는 법을 집행하는 쪽이나 국민 모두 너무 천박한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게 큰 문제다.

박: 김대중 정권 들어 노동의 유연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차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조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미조직노동자들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사회: 앞으로 인권운동의 과제는?

박: 인권의 기본은 일해서 먹고사는 문제다. 지금 현실은 그러한 생존권부터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노동자와 민중이 겪는 생존권 문제에 진척이 없는 한 인권문제는 개선될 수 없다. 노동운동 또한 자신의 생존권에 집착하다보니 여타 인권상황에 무관심한 면이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인권사항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가질 때만 자신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정: 작년에 여성운동이 사회구조의 변화에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었나 하는 내부적인 반성이 있었다. 기준과 원칙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오: 현실적으로 자기 과제의 무게에 눌려 있고 폐거리주의가 만연된 것이 문제다. 운동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안기부, 검찰, 경찰, 나중에는 국가인권위까지 인권관련 국가기구에 대한 감시운동을 구상하고 있다. 덧붙여 인권교육을 위한 민간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 인권운동의 초점 가운데 하나를 관료의 개혁으로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혁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식의 변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료체계의 관성적 관행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관료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전국 관료들의 강령이나 지침으로 제시하고 요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2월 27일(토)
제 131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 높여

사회·인권단체, 정부·IMF·IBRD 규탄

김대중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와 세계은행(IBRD)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나서자, 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부와 IBRD는 26일 롯데호텔에서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국 개혁이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회단체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민중의 생존권 압살, 민주주의 후퇴 1년'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와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 등)은 26일 오전 8시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김대중 정부 규탄과 IMF·IBRD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부 등의 국제심포지엄이 열리기 직전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국제회의가) 김대중 정부 하에 진행된 신자유주의를 고착화하고 확대시키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실업인구가 400만에 달하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생존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과 안전망도 '효율성'과 '이윤추구'라는 이름으로 부정하고 해체시킨다"면서 국제회의를 통해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하려 하는 것은 현실을 철저히 은폐하려는 기도라고 비난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전체 민중들의 삶이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버렸다"며 △민주압살 민생파탄 신

자유주의 반대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보장 △정리해고 중단 △IMF, IBRD 해체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에 의한 양심수의 증가, 생존권 투쟁을 벌인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강화 등으로 인해 인권도 악화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의 철폐 △양심수 전원 석방 △정치수배 전면 해제도 주장했다.

점령당한 박상천 의원실

수가협, '수배해제' 농성 돌입

조계사에서 2백일 넘게 농성을 진행 중인 정치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수배 대학생들의 가족 15명이 박상천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김영삼 정권시절 수배자 가족협의회'(수가협) 소속인 가족들은 26일 오전 11시경 국회의원회관 박상천 의원실을 찾아가 박 장관의 면담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곧바로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25일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시면에서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가 단행되지 않은 데다, 경찰을 통해 "수배해제가 된 것이 아니다. 자수해서 한총련 탈퇴서를 쓰면 50일 정도 조사를 받고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오자, 이에 대한 박 장관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박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현재 수가협 소속 가족들은 "수배해제 조치에 관한 책임있는 인사의 확답을 받기 전에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며 항의농성을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22일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시면 발표문에서 학생운동 관련 수배자에 대해 '자수하여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박상천 의원실: 788-2360

행사와 동정

- 김대중 정부 실정 규탄대회
 - 때 : 2월 27일(토) 오후 1시 ·곳 : 세종로 광화문 빌딩 앞
 - 주최 :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 범국민운동본부
- 구조조정 반대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 때 : 2월 27일(토) 오후 3시 ·곳 : 종묘공원
 - 주최 : 민주노총 금속연맹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교육관 개관식
 - 때 : 3월 3일(수) 오후 3시 ·곳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교육관
 - 주최 :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문의처 : 02) 365-4016
- '노동운동과 통일문제' 2차 기획토론회
 - 때 : 3월 4일(목) 오후 7시
 - 곳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주최 :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한반도 위원회(02-778-4001)

<인권하루소식> 99년 2월분 총목차(1301-1317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301	2/2	1	국보법 전력자 감시강화 -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법무부 '자수 원칙' 고수 - 조건부 수배해제/유가협, 군 의문사 국방부 재조사 거부
		2	민영화 반대, 결핵병원 40명 대거 상경투쟁/주간인권흐름(99년 1월 25일-1월 31일)
		3	<인권시평> 구걸이 직업인 장애인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월간 『함께걸음』 편집부장)
1302	2/3	1	미명탐단 강제철거 - 안양유진상가 주민 9명 연행/<새로나온책>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 역임)
		2	70-80년대 조작간첩 사면복권 요청 - 재일동포 31명 김 대통령에게 탄원서 제출/민애청 이적단체 규정/한국오티스 해고자 복직투쟁/민가협 사면 캠페인 돌입 - 사면복권·수배해제 신청접수
1303	2/4	1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 조상록, 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결렬 뒤/<만화사랑방> 이름뿐 비전향 장기수 전원석방
		2	<기고> 이름없는 내 형제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고상만 천주교인권위원회 간사)
1304	2/5	1	노점상 집결, 성남시 '들썩' - 폭력단속 중단·생존권보장 촉구/청년진보당 등, 국보법 관련 유엔결정 수용촉구/<인터뷰> 전국노점상연합 의장 이영남 "기업형 노점, 우리가 막는다"
		2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반국가단체만들기' 등 제안 눈길/안양시 유진상가 강제철거 후 주민 구속/군사정권 구속자 여전히 감옥에 - 민가협, 강용주 씨 등 석방촉구/추모단체연대회의, "조건없는 석방"촉구
1305	2/6	1	"국정원, 대질한번 해볼까" - 탈북주민들, 국정원에 공동기자회견 요청/양지마을 이사장 4년 선고·법원, 인권유린·재산착복 인정/<기자수첩>역지와 계변에 익숙한 법무부 -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2	'진실'마저 가두는 교도소 -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다시 미궁으로/국보법 문제가 있긴 한데 - 서울고법, 국제사회주의자그룹 11명 원심대로 유죄선고/민청노회 구속자 첫 재판 - 검찰·피고인 이적단체 공방
1306	2/9	1	'양심수 석방' 시선집중/엠네스티 "준법서약 우려"/전북지역 5개 단체 "공소취하·수배해제" 촉구
		2	대학교수들 '양심수 군면제' 촉구 - 738명 서명받아 대통령에 탄원/일자리요구' 시위, 폭력진압 발생 - 경기 광주 일용노동자 '군민대회' 도중/주간인권흐름(2월1일-2월7일)
1307	2/10	1	국방부는 '진상규명' 국방군- 군 의문사 조사, 제3기관에 맡겨야/화해마을 이재민, 기독교교회농성 돌입
		2	백주대낮 도둑 '납치극' - 동의대생 9시간동안 불법 구금/<새로나온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 석사 박주현)
1308	2/11	1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공공근로 임금삭감 - 실직자 극빈화 우려/<만화사랑방> 법조계 '무대보' 정진!
		2	유가족, 눈물의 백일기도 - 국회앞 농성 1백일, 기약없는 명예회복/<기고>체발운동하는 감자의 논리 (이동욱, 경희대생)
1309	2/12	1	의혹! 청와대 법무비서관 - 대통령에 '국가인권위' 왜곡보고/광주지역 단체, 국민회의 점거농성 - "조건없는 석방"요구...서울도 인권·종교단체 기자회견
		2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 화해마을 이재민 한 서린 14년/올해만 30명 구속 - 대학생 양심수 꾸준히 양산

〈인권하루소식〉 99년 2월분 총목차 (1301-1317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310	2/13	1	올 '한총련 사냥' 시동 - 공안합수부, '3월말까지 탈퇴' 강요 편지발송/〈조계사 수배자들의 설쇠기〉 "차례도 올리고, 세배도 드릴 겁니다."
		2	형기만료 20일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 - 집행유예기간 재구속, 형 확정 전 실효성 없어/국보법 전력자 여권 발급 미뤄 - 국정원, 공색한 답변만
1311	2/19	1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체벌 입법화 논란 - 국회의원 28명 입법추진/법무부안 단호히 반대 - 국제엠네스티, 인권위 독립성 보장 촉구
		2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하며 - 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의 투쟁 1년
1312	2/20	1	인권단체들 분노 고조 - 인권위 문제 타협기류 국민회의 규탄/탈북주민 손배소송 제기 - 옛 안기부 인권유린 피해 관련
		2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권오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
1313	2/23	1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2·2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2	4천만 우뚝한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TV대화' - 각본 따른 연출...민감한 현안 배제/국제엠네스티 "한국 캠페인 예정대로" - 국보법·노동권·인권위 문제 초점/주간인권흐름 (2월 8일-2월 21일)
		3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 (노동권을 중심으로) - 20을 위한 80의 희생 (이종희 사회진보를 위한 연대 사무처장)
1314	2/24	1	보안관찰피쳐분자 집단소송 -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사면 발표하던 날에도 - 청년진보당 위원장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
		2	'왕따현상' 왜? 어떻게? - 전교조 주최 토론회, '왕따' 해결방안 모색/영남위 이은미씨 옥중투병 - 중증디스크, 수술비 마련 애로/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3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 시능에 머문 인권보장 (최정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315	2/25	1	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 김 대통령 "법무부안 채용 안해"/국가보안법 홈페이지 개설/〈만화사랑방〉 IMF 대통령 1주년, 서민 1주년
		2	끝내 열리지 않은 국방부 정문 - 군 의사사 가족들, 국방부 앞 추모행사/양심수 260여명 남아/주요 미석방 양심수
		3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조광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1316	2/26	1	'생존권 투쟁 탄압' 선전포고 - 검찰 등, '공안대책협의회' 구성키로/입학 첫날부터 '검문' 홍역 - 서강대 입학식장 마구잡이 검문
		2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 총평 및 자유권 영역
		3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⑥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1317	2/27	1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 높여- 사회·인권단체, 정부 등 비판/점령당한 박상천 의원실-수가협, '수배해제' 농성 돌입/행사와 동정
		2-3	99년 2월분 총목차 (1301-1317호)

인권하루소식

99년 3월

(제1318호 - 제1338호)